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2. 3.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제 출 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부산연구원장 공학박사 송 교 육

〈연구진〉

연구책임자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박 총 훈
공동연구원 (성명 가나다순)	부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김 기 욱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김 세 현
	부산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남 호 석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	연구위원	박 경 욱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조교수	변 지 혜
	부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이 상 국
연구지원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초빙연구원	조 영 현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원	주 선 욱

〈연구자문〉

(성명 가나다순)

곽	명	신	지방공기업평가원
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	재	홍	울산대학교
도	수	관	울산대학교
문	태	현	경상국립대학교
민	세	홍	경남테크노파크
박	명	흠	부산외국어대학교
박	병	주	경남연구원
박	진	아	경기연구원
배	수	현	부산연구원
배	준	구	경성대학교
서	혁	준	울산테크노파크
석	호	원	고양시정연구원
송	효	진	광주전남연구원
안	권	욱	지방분권경남연대
이	재	호	울산연구원
이	정	석	부산연구원
장	덕	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	하	용	부산연구원
정	수	현	창원시정연구원
정	안	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	현	욱	울산연구원
정	혜	진	부산대학교
조	기	혁	울산과학기술원
주	기	완	창원대학교
차	재	권	부경대학교
초	의	수	신라대학교
최	길	수	대전세종연구원
최	영	로	가야대학교
최	윤	찬	부산연구원
현	승	현	용인시정연구원

목차

제1장 연구용역 개요	1
1. 추진 배경 및 목적	1
1) 추진 배경	2
2) 목적	2
2. 연구범위	2
1) 공간적 범위	2
2) 시간적 범위	2
3) 내용적 범위	2
3. 연구내용	3
4. 연구진행	3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사무처리 기본계획	4
1.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도 검토	4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개념	4
2) 법적 성격	5
3) 설치 및 해산	8
4) 수행사무	9
5) 기관구성	11
6) 재정	12
7) 인력	13
2.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개념과 특성	14
1) 기본 개념	14
2) 수립 및 변경 절차	14
3) 사무 및 관할구역	14
4) 기간	14
5) 성격	15
6) 타 규범과의 관계	16
3.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처리 기본계획	18
제3장 부울경 지역현황 조사	19
1. 조사개요	19
2. 공공행정	19
1) 지방자치	19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22
3) 중앙정부와의 관계	23
3. 인구	24

1) 인구 일반	24
2) 인구 순이동	25
4. 경제·산업	26
1) 지역 내 총생산	26
2) 무역	27
3) 산업 구조	28
4) 실업률	29
5) 주요 기업	30
6) 스타트업	30
5. 교통	31
1) 도로 및 철도 일반	31
2) 도시철도 접근성	32
3) 권역 내 이동 편의성	34
4) 항공운항	35
제4장 광역협력 사례분석	37
1. 분석개요	37
2. 해외 협력기구 운영 사례	38
1)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영국)	38
2)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프랑스)	43
3)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독일)	48
4) 간사이 광역연합(일본)	52
3. 기본계획 유사해외 사례: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	59
1)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 분석의 필요성	59
2)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의 개요	59
3)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의 구성과 내용	60
4) 타 계획과의 관계	65
4. 시사점	69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의 시사점	69
2) 광역계획의 시사점	72
제5장 기본계획 수립의 종합분석과 총괄적 구상	73
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분석	73
1) 분석개요	73
2) 특별연합 SWOT 분석	73
2. 전문가 델파이 분석	76
1) 조사분석 개요	76
2) 조사분석결과	78
3) 조사이후 변경사항	84
3. 기본계획의 총괄구상	84
1) 구상 개요	84
2) 부울경의 미래상	85
3) 특별연합의 미션	88

4) 총괄 목표	89
5) 핵심 가치	90
6) 계획추진의 실현상	91
제6장 초광역협력 사무별 처리계획	94
1. 사무별 처리계획 개요	94
1) 사무별 처리계획의 구성	94
2) 구성사무 및 발굴사업 내역	96
3) 소요예산	99
2. 사무 ① 초광역 철도망 구축	102
1) 사무 필요성	102
2) 목표 및 방향	103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03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13
3. 사무 ② 초광역 도로망 구축	113
1) 사무 필요성	113
2) 목표 및 방향	114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14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24
4. 사무 ③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125
1) 사무 필요성	125
2) 목표 및 방향	125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26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35
5. 사무 ④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	135
1) 사무 필요성	135
2) 목표 및 방향	135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36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40
6. 사무 ⑤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141
1) 사무 필요성	141
2) 목표 및 방향	141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42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55
7. 사무 ⑥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구축	155
1) 사무 필요성	155
2) 목표 및 방향	156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56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62
8. 사무 ⑦ 초광역 자동차 산업 육성	162
1) 사무 필요성	162
2) 목표 및 방향	163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64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72

9. 사무 ⑧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172
1) 사무 필요성	172
2) 목표 및 방향	173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74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78
10. 사무 ⑨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구축	178
1) 사무 필요성	178
2) 목표 및 방향	178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79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89
11. 사무 ⑩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189
1) 사무 필요성	189
2) 목표 및 방향	191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91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96
12. 사무 ⑪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	197
1) 사무 필요성	197
2) 목표 및 방향	197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97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03
13. 사무 ⑫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203
1) 사무 필요성	203
2) 목표 및 방향	204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205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12
14. 사무 ⑬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	212
1) 사무 필요성	212
2) 목표 및 방향	213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213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22
15. 사무 ⑭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222
1) 사무 필요성	222
2) 목표 및 방향	223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223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29
16. 사무 ⑮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230
1) 사무 필요성	230
2) 목표 및 방향	230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231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37
17. 사무 ⑯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	238
1) 사무 필요성	238
2) 목표 및 방향	238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239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44
18. 사무 ⑰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244
1) 사무 필요성	244
2) 목표 및 방향	245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245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48
19. 사무 ⑱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	249
1) 사무 필요성	249
2) 목표 및 방향	249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250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55
제7장 성공적인 초광역 협력을 위한 과제	256
1. 과제 개요	256
2.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	256
1) 재정운용 방향	256
2) 바람직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	257
3. 과제 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제2수도권 실현	258
1) 필요성 및 방향	258
2) 검토사업/세부방안	258
4. 과제 ② 열린 초광역 거버넌스 실현	260
1) 필요성 및 방향	260
2) 검토사업/세부방안	260
5. 과제 ③ 특별연합 성과 제고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	262
1) 필요성 및 방향	262
2) 검토사업/세부방안	262
6. 과제 ④ 글로벌 메가시티와 네트워크 강화	266
1) 필요성 및 방향	266
2) 검토사업/세부방안	266
7. 과제 ⑤ 초광역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267
1) 필요성 및 방향	267
2) 검토사업/세부방안	269
참고문헌	270

표 목차

〈표 2-1〉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유사한 우리나라 기관 유형	8
〈표 3-1〉 부울경권 기본정보	20
〈표 3-2〉 부울경 공무원 수(현원)	20
〈표 3-3〉 부울경 2021년 세출규모	21
〈표 3-4〉 지역별 공공기관 수	23
〈표 3-5〉 수도권과 부울경권 인구 변화 추이(2000~2020년)	25
〈표 3-6〉 권역별 인구 순이동	25
〈표 3-7〉 권역별 지역 내 총생산	26
〈표 3-8〉 권역별 국제교역 규모금액 및 비중	27
〈표 3-9〉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구조(2020년)	28
〈표 3-10〉 부산, 울산, 경남의 실업률	29
〈표 3-11〉 주요 대기업의 부울경권 비중	30
〈표 3-12〉 도로 및 철도 연장	32
〈표 3-13〉 권역별 도시철도 접근성	33
〈표 3-14〉 구간별 이동 편의성	35
〈표 3-15〉 항공운항 실적(2020년)	36
〈표 4-1〉 맨체스터 연합기구의 수입과 지출(2020/2021)	42
〈표 4-2〉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수입과 지출(2021)	48
〈표 4-3〉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수입과 지출(2022)	52
〈표 4-4〉 간사이 광역연합의 세입과 세출(2021)	58
〈표 4-5〉 제4기 간사이 광역연합 기본계획의 구성	60
〈표 4-6〉 광역계획 시기별 기본사고 방식, 미래상, 광역연합의 역할	61
〈표 4-7〉 4기 광역계획의 사무 분야별 중점방침	63
〈표 4-8〉 간사이 광역연합의 분야별 계획	66
〈표 4-9〉 간사이 관광 문화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2018~2021년)	67
〈표 4-10〉 광역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비교	68
〈표 5-1〉 사무분야별 초광역협력과제	77
〈표 5-2〉 참여 전문가의 지역별 소속기관	77
〈표 5-3〉 사무분야의 포괄성에 대한 응답결과	78
〈표 5-4〉 사무분야의 준비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79
〈표 5-5〉 사무분야의 정체성 기여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80
〈표 5-6〉 사무분야의 공동협력 효과성에 대한 응답결과	81
〈표 6-1〉 관련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 및 국가 위임 사무	95
〈표 6-2〉 사무별 처리계획의 주요 항목	95
〈표 6-3〉 초광역협력 사무별 구성사무와 발굴사업	97
〈표 6-4〉 사무별 발굴사업 유형 내역	98
〈표 6-5〉 초광역협력사무 사업 소요예산 총계	99
〈표 6-6〉 초광역 철도망 구축의 소요예산	111

〈표 6-7〉 초광역 도로망 구축의 소요예산	123
〈표 6-8〉 광역간선버스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국가위임 세부사무	130
〈표 6-9〉 초광역 BRT 노선 검토안	132
〈표 6-10〉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의 소요예산	134
〈표 6-11〉 산업별 탄소배출 현황 및 탄소세 부과영향	135
〈표 6-12〉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의 소요예산	140
〈표 6-13〉 부울경 지역 수소 분야 산업 현황(2019년)	141
〈표 6-14〉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의 소요예산	152
〈표 6-15〉 부울경 지역 조선분야 산업현황(2019년)	155
〈표 6-1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의 소요예산	161
〈표 6-17〉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부울경 지역 생산 상황	163
〈표 6-18〉 초광역 자동차 산업 육성의 소요예산	170
〈표 6-19〉 초광역 항공 산업 육성의 소요예산	177
〈표 6-20〉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의 소요예산	187
〈표 6-21〉 부울경 R&D 분야 현황(2019년)	190
〈표 6-22〉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195
〈표 6-23〉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202
〈표 6-24〉 초광역 지식혁신 플랫폼 구축의 소요예산	211
〈표 6-25〉 부울경 미디어 콘텐츠 코스화 사업 분야별 세부사업	217
〈표 6-26〉 부울경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분야별 세부사업	219
〈표 6-27〉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221
〈표 6-28〉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의 소요예산	228
〈표 6-29〉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237
〈표 6-30〉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248
〈표 6-31〉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국가 위임 세부사무	251
〈표 6-32〉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255
〈표 7-1〉 부울경 초광역 협력과제와 SDGs 관련목표	268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영역의 연구내용	3
〈그림 1-2〉 본 연구영역의 수행일정	3
〈그림 2-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사무수행 주체의 변화	5
〈그림 2-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6
〈그림 3-1〉 부울경권 산업구조(2020년)	28
〈그림 3-2〉 실업률 변화 추이	29
〈그림 3-3〉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수	31
〈그림 3-4〉 도시철도망을 통한 공간적 연계	34
〈그림 4-1〉 잉글랜드의 광역권 연합기구	39
〈그림 4-2〉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40
〈그림 4-3〉 맨체스터 연합기구의 조직 구성	40
〈그림 4-4〉 프랑스의 메트로폴 운영 지역	44
〈그림 4-5〉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관할구역	45
〈그림 4-6〉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관할구역	50
〈그림 4-7〉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기관 구성	50
〈그림 4-8〉 간사이 광역연합의 관할구역	54
〈그림 4-9〉 간사이 광역연합 조직도	55
〈그림 4-10〉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구성	56
〈그림 5-1〉 부울경 특별연합의 SWOT 분석 결과	74
〈그림 5-2〉 델파이조사 진행 절차	76
〈그림 5-3〉 사무분야의 포괄성에 대한 응답결과	78
〈그림 5-4〉 사무분야의 준비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79
〈그림 5-5〉 사무분야의 정체성 기여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80
〈그림 5-6〉 사무분야의 공동협력 효과성에 대한 응답결과	81
〈그림 5-7〉 필요성과 중요성이 큰 사무(1순위)	82
〈그림 5-8〉 필요성과 중요성이 큰 사무(1~3순위)	82
〈그림 5-9〉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무(1순위)	83
〈그림 5-10〉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무(1~3순위)	83
〈그림 5-11〉 기본계획의 총괄구상 요약	85
〈그림 5-12〉 부울경의 미래상 체계	86
〈그림 6-1〉 과제별 소요예산 비중	102
〈그림 6-2〉 부산신항~거제 연결선 노선도	106
〈그림 6-3〉 부전TX 복합환승역 위치	106
〈그림 6-4〉 동남권순환(울산~김해) 광역철도	107
〈그림 6-5〉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108
〈그림 6-6〉 초정~화명 광역도로 노선도	118
〈그림 6-7〉 미음~가락 광역도로 노선도	119
〈그림 6-8〉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노선도	120

〈그림 6-9〉 동김해 IC~식만JCT광역도로 노선도	121
〈그림 6-10〉 창원~울산 고속도로 노선도	122
〈그림 6-11〉 BRT 브랜드화 사례: YRT VIVA BRT의 브랜드 디자인 체계	133
〈그림 6-12〉 CCUS 기본 개념	138
〈그림 6-13〉 탄소중립종합기술원의 단계별 추진방안	139
〈그림 6-14〉 그린 수소항만 조성 계획	145
〈그림 6-15〉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안)	146
〈그림 6-16〉 폐자원을 활용한 수소생산 개념도(Powerhouse Energy)	149
〈그림 6-17〉 1MW급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 선박	150
〈그림 6-18〉 풍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테스트베드 체계	151
〈그림 6-19〉 부울경 친환경 수송기기용 전력변화모듈 개발플랫폼 협력체계도	167
〈그림 6-20〉 시험기반 연계 고도화 기술지원체계(안)	168
〈그림 6-21〉 항공ICT 관련 지역별 분업 및 협력체계의 예시	175
〈그림 6-22〉 친환경 기술시범기 개발 등 관련 지역별 분업 및 협력체계의 예시	176
〈그림 6-2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서울)의 교육동 및 교육장	186
〈그림 6-24〉 시도별 혁신지역 등급의 변화	190
〈그림 6-25〉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에리카 이노베이션 파크) 조감도	210
〈그림 6-26〉 관광벨트의 공간구상(안)	217
〈그림 6-27〉 부울경 메가시티 사찰투어 버스 코스(안)	218
〈그림 6-28〉 단계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226
〈그림 6-29〉 감염병 전문병원 조감도	226
〈그림 6-30〉 권역 및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244
〈그림 6-31〉 주요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245
〈그림 7-1〉 스마트워크 유형	265
〈그림 7-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67

제 1 장

연구용역 개요

01

연구용역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일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부울경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 중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은 부울경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통한 제2수도권, 국가발전의 양대 축 실현에 관심
 -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의 행정통합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으며, 기존 지방행정체계는 존속
- 3개 시·도 체계 속에서 부울경 공동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적 행정제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부상
 - 2020년 12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의 통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협력기구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
- 부울경 3개 시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될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3개 시도의 공동사무를 수행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목적으로 2021년 7월부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¹⁾을 설치 운영중
 - 2022년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3개 시·도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무처리 개시

1) 기관명은 원칙적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이 맞으나, 가독성을 고려해 띄어쓰는 ‘부울경특별연합’도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표기

- 『지방자치법』 제203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본계획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무처리 관련 중요 사항을 규정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구속력을 지님
- 사무처리 기본계획 수립은 부울경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권한과 책임있는 주체의 형성과 효율적인 사무 집행의 기반으로 역할

2) 목적

- 본 연구용역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행정적 기반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데에 있음
 - 기본계획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효
- 기본계획 수립에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마련뿐 아니라 운영 초기 시행착오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속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관심
 - 우리나라 최초로 출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하고 노련한 준비 과정을 거치더라도, 운영 초기 일정 수준의 시행착오는 불가피
 - 안정적인 행정, 거버넌스 기반 마련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적 분야뿐 아니라 사무환경의 구축, 타 기관,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 행정관리, 거버넌스 분야 관련 사항도 포함

2.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 연구과제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역
 - 부울경 특별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함

2) 시간적 범위

- 기본계획(안)은 예정 계획기간인 2023~2027년(5년)이며, 지역현황 및 사례조사의 데이터 활용은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내용적 범위

- 기본계획에 규정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전반적 내용

3.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크게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개요, 현황 조사 및 사례 연구,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

1.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개요

- 법정계획의 중요성 확인
- 계획의 법적 근거, 배경, 계획의 목표, 계획의 수립체계와 절차

2. 현황 조사 및 사례 연구

- 부울경 현황 조사
- 해외 선진사례 분석
- 부울경 일반현황, 여건 분석,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
- 광역행정 추진사례(형태, 사무등) 조사, 규약과 사무처리 기본계획 등 사례 조사·분석 및 연구
 -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등 실증적인 사례와 자료를 최대한 포함
- 국내의 사례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착안 및 유의해야 할 사항

3.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 부울경의 미래상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무별 목표 및 추진 과제 등
- 정부 지원 방안: 중앙정부와의 수평적 관계 확립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목적
- 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 방침 및 방향 설정
- 부울경의 미래상에 대한 기본구상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역할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사무의 처리 관련 목표 및 추진 방향
 - 사무에 대한 구성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기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계획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 필요 재원의 규모와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 그 밖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설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

〈그림 1-1〉 본 연구영역의 연구내용

4. 연구진행

- 연구방법: 관련법령, 문헌검토, 통계데이터 분석, 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²⁾, 현장 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
- 연구수행 일정은 〈그림 1-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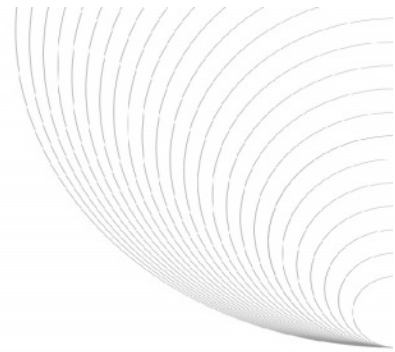
연구 내용	M1	M2	M3	M4	M5
기본계획 개요					
부울경 현황 조사					
광역행정 등 국내외 사례 연구					
부울경 미래상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역할					
사무별 계획					
정부지원 방안					
중요 가치 반영 등 필요한 사항 반영					
※ 정기보고	착수보고 (‘21. 11.)		중간보고 (‘22. 1.)		최종보고 (‘22. 3.)

〈그림 1-2〉 본 연구영역의 수행일정

2)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제별 중요도 측정 등을 위한 델파이 조사 진행(총 25명)

제 2 장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사무처리 기본계획



1.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도 검토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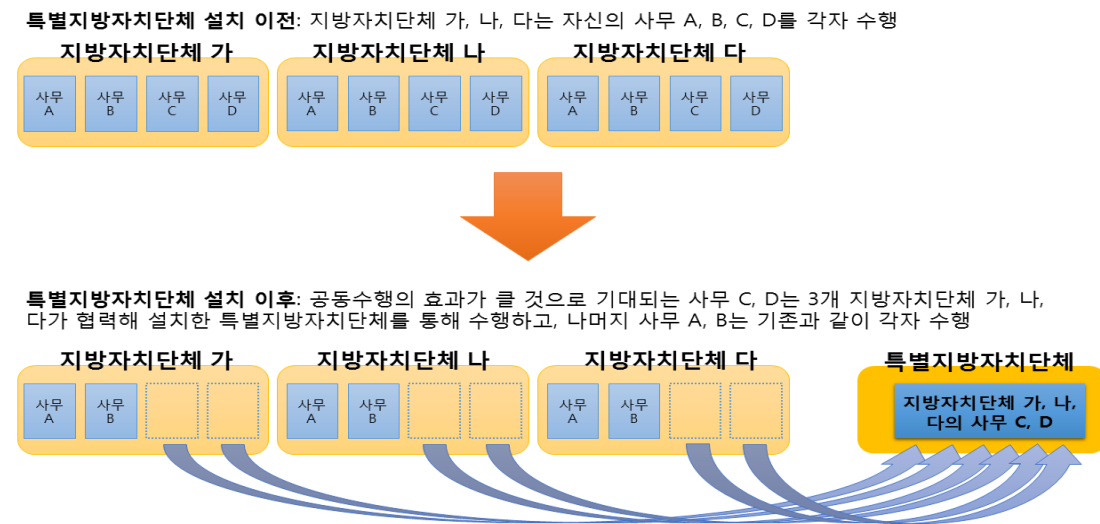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개념

- 지방자치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고, 동 기관을 통해 당해지역의 전반적인 사무가 처리되어 실현(금창호, 2018: 3)
- 그러나 단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만으로 충분한 자치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공식적 행정구역과 실제 정책수요의 발생의 괴리
 - 규모의 불충분으로 인한 서비스 생산 비용의 과다 및 수행 역량 부족 초래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요구되고, 안정적 협력 관계에 기초한 공동 사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
- 2020년 12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의 통과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짐
 - 전면개정 이전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고(제2조 제3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4항), 대통령령이 없어 실제 활용할 수가 없었음⁴⁾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지자체 간 협력기구로 정의할 수 있음
 -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3) 박충훈, 남호석, 주선옥 외(2022: 38~48)를 토대로 수정, 보완

4) 관련 대통령령의 부재와 별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행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음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이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존속되며, 법적 지위를 유지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동수행하는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수행



〈그림 2-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사무수행 주체의 변화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협력체에 비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의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행정협의회와 달리 법인격을 지니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지위에서 사무를 수행하며(『지방자치법』 제210조, 제211조),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의회를 설치

2) 법적 성격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의 제2조, 제199조에서 법적 지위가 확인되며, 법인임(제199조 제3항)
- 제2조, 제12장 제199조~제211조 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지,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기관의 유형인지는 불명확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함
 -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2-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근거: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는 입장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하는데(제2조), 그 종류로 제2조 제1항에서는 (보통)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제3항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시한 것임
 - 중요한 내용은 동일 법률에서도 반복될 수 있으므로 제3조 제1항의 법인 규정과 제199조 제3항의 법인 규정 모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법인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211조는 제202조 2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설치
-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기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만을 가리키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된다는 입장
 -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거나 시, 군, 구인 (보통)지방자치단체만을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전제는 의회의 설치이고(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원 다수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도 의원은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의 선임 방법은 선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규정(제3조 제1항)과 별개로, 제199조 제3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법인임을 규정: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라면 제199조 제3항에서 재차 법인임을 확인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낮음
- 요약하면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대해 상충되는 관점이 있음
 -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는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임
 - 반대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만을 가리키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된다는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 그러나 이 관점에서도 규약에 따른 사무의 수행 범위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등, 명칭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지위의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전체적으로 후자의 관점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전면개정 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대신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요소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려움
 - 안영훈(2021: 47)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상의 근거 등으로 공권력인 사무수행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큰 분류로 보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같이 일종의 지방영조물법인일 수 있다는 입장
-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배준구, 2021, 시도지사협의회 토론회발언)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을 이유로 하여 (보통)지방자치단체 대비 자치권상의 상당한 특례를 부여받는 단체를 가리키는 쪽에 가까움
 - 프랑스 헌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les 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⁵⁾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규정되며, 그 대표적 예로 마요트, 가이아나, 마르티니크, 코르시카가 해당
 - 코르시카(Corse)는 1768년 프랑스에 편입되기 전 제노바공화국(이탈리아 지역)의 영토였으며 나폴레옹 집권 전까지 독립의지가 강했다는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레지옹(région)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가 보장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임⁶⁾
 - 우리나라에서 약간이나마 유사성 있는 사례를 들자면 조선 초기에야 완전히 병합되었으며,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에 비해 권한 행사 및 사무 수행의 자율성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들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공공단체)로 개념화한 국가는 일본임

5) 원어 표현 les 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는 단체”(이순우, 2009), 특별지방자치단체(법제처 제공 프랑스헌법 번역본)로 옮길 수 있음

6) 나폴레옹 황제는 코르시카의 하급 귀족가문 출신인데, 지역출신 인물이 1804년의 국민투표로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는 점은 코르시카 지역이 프랑스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로 함(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의3)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연합으로 구분(일본 지방자치법 제284조)
-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일본의 광역연합이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는 일본 예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했는데, 부울경 특별연합의 유력 명칭 중 하나로 한 때 “부울경 광역연합”이 논의되었음
 - 특별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구, 일부사무조합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유사하며, 재산구는 우리나라에 대응되는 기관을 찾기 어려움

〈표 2-1〉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유사한 우리나라 기관 유형

일본		우리나라
특별구*		구**
지방자치단체조합	일부사무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산구		-

* 도쿄도(東京都)내에만 설치

**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3) 설치 및 해산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작성 → 규약 의결 → 주무부처 장관 승인 순으로 진행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작성 단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원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는 상호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여야 함
- 같은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다른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합의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 가능
 - 광역 간, 기초 간 뿐 아니라 광역-기초 간 구성이 가능
 - 타 지역 지자체, 이를테면 대구광역시와 경산시(경상북도 관할)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가능
- 『지방자치법』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가 없음
 -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법적인 제한은 없음

7)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 이 단체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맞겠으나,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구성원이 될 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킬 때에도 구성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 이해에 큰 혼선을 부르는 문제는 아니므로 법률의 예를 따름

- 규약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관구성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
-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02조)
 - 목적
 - 명칭
 - 구성 지방자치단체
 - 관할 구역
 - 사무소의 위치
 - 사무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사무처리 개시일
 -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상호협의를 통해 규약(안)이 마련되면, 구성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거침
 - 모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함
- 의결을 거친 규약이 행정안전부 장관(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제209조 제1항)
 -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을 재배치(제209조 제2항)

4) 수행사무

(1) 수행사무의 구성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무와 국가 혹은 시·도(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만 구성될 경우) 위임사무로 구성
-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으로 규정(제202조)
- 국가 혹은 시·도(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만 구성될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만 구성될 경우)에게 위임을 요청해(제199조 4항), 승인을 받음으로서 가능

(2)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무의 성격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혹은 시·도(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만 구성될 경우)로부터 받아 수행하는 사무가 위임사무임은 분명하나, 공동수행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능
-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된 사무의 성격은 위임보다 이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권한이양과 구분되는 권한위임의 특성
 - 권한위임에서 이전은 잠정적이고,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국공법학회, 2004: 5)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취소·정지, 사무 기준설정 권한 보유(「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한국공법학회, 2004: 5)
 - 권한의 일부만 위임이 가능하고 포괄적 전체 위임은 금지되는데, 자신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모두 위임하는 것은 권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법정주의에 반함(장경원, 2021: 328)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앞서 제시한 권한위임의 특성이 없거나 상충되는 성격이 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잠정적 이전이고,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무를 회수하려면 규약에 의해 정해진 사무를 변경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탈퇴하여야 함
 - 사무 변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전부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제202조 2항), 회수 의사가 있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나머지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잠정적이고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상태와 거리가 있음
- 탈퇴에 따른 권한의 이전은 회수가 아니라 관계기관의 합의에 따른 전환에 가깝다고 할 것임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탈퇴 신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함(『지방자치법』 제203조 제3항)
- 규약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던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취소·정지 권한을 가지지 않음
 - 오히려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부여(『지방자치법』 제203조 제3항)
 - 일본은 광역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광역계획의 준수 의무를 부과(일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 7 제4항)⁸⁾

8) 일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 7 제4항 광역연합 및 광역연합을 조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계획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유사한 내용의 법조항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는 일본 광역연합 사례를 살펴볼 경우, 포괄적 전체 이관의 사례가 확인됨
 - 소라쿠(相樂)동부광역연합은 종합교육위원회 사무를 수행,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와즈카정(和束町), 가사기정(笠置町), 미나미야마시로촌(南山城村)의 지방 교육 기능 일체를 맡음⁹⁾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자치권한 일체를 재량을 갖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 일부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권한 위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완전히 이관 내지 이양된 것으로, 따라서 당연히 그 사무 수행에 관련된 자치행정권, 재정고권, 조직고권, 자치입법권 등의 자치권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능으로 완전히 귀속(문상덕, 2019: 186)
 -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탈퇴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 사무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임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국가 또는 시·도 사무(시·군·구로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위임받을 수 있음(제199조 제4항)
 -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 이전에 관계 중앙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제199조 제5항)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할 때의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함
 - 시·도를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받아야 함(제203조, 이후 별도로 살펴 봄)
 -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의결이 필요

5) 기관구성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장으로 하는 집행기관이 설치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제204조)
- 단체장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제205조 제1항)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음(제205조 제2항)
- 의회와 단체장의 관계는 전통적인 대립형과 차이가 있음

9) 일본은 교육감이 초·중등교육 등 지방 교육사무를 책임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수행함.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교육장과 위원은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단체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
- 전통적인 기관대립형은 의회 의원과 단체장이 각자 주민의 신임을 받아 선출
 - 상호 분리된 선거절차를 통해 민주적 신임을 확보하는 이원적 정통성 구조로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특징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지위가 의회의 신임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합형적 성격에 가까움
 -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임기 등 단체장의 신분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규약이 규율하는데, 규약에서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 재량을 폭넓게 허용한다면, 기관 간 관계에서 의회의 우위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제205조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겸임 보장 조항은 단순히 겸임의 허용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할 경우에 있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우위, 선출에서의 우선적으로 고려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관대립형 구조
 - 의원과 단체장의 선출이 구분되어 있는데, 광역연합 의회 의원은 연합의 선거인 혹은 연합 구성 지자체 의회에 의해, 광역연합장은 연합의 선거인 혹은 연합 구성 지자체장에 의해 선출(일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 5)¹⁰⁾
 - 일본의 광역연합 사례가 널리 소개되고,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이 여러 측면에서 광역연합 관련 조항과 유사해, 기관 관계도 그럴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간 관계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지 않으며, 의회의 영향력이 (보통)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6) 재정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재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납부한 분담금(박충훈, 2021b: 5)¹¹⁾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 필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제206조 제1항)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제206조

10) 제291조의5 ① 광역연합 의회 의원은 정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 광역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연합 선거인(광역연합을 조직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광역연합의 구역 내에 주소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이 투표로 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를 선거한다. ② 광역연합의 장은 정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광역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연합 선거인이 투표에 의하여 또는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표로 이를 선거한다.

11) 『지방자치법』에 정확한 명칭이 명기된 것은 아님. 분담금이라는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사용. 일본 지방자치법에는 같은 성격의 수입이 부담금으로 표기. 분담금과 부담금을 구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혼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구분의 실익이 의미있을 정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분담금 표현을 사용

제2항)

- 세입이 부담금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세를 제외하고 (보통)지방자치단체 대비 과한 제약을 하지 않음(박충훈, 2021b: 5)
 - 국가 혹은 상급 지자체(기초지자체를 구성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일 경우)의 재정지원 가능(제206조 제3항)
 -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법상의 나머지 세입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제201조)
 - 지방세 제외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엄격한 조세법정주의 견지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관계법률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전면개정에서 보장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부담금(구성 지자체 분담),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보조금, 지방채로 볼 수 있을 것임(박충훈, 2021b: 5)
- 『지방교부세법』상 보통교부세는 현재 미대상(박충훈, 2021b: 5)
 - 『지방교부세법』상 교부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조합임(『지방교부세법』 제2조)
 - 『지방자치법』제211조는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를 엄격히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지방교부세법』의 보통교부세 관련 조항은 이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개정 내용이 『지방교부세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협력수준이 느슨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교부세 대상으로 제시된 것을 감안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가능
-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음
 -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교부되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수요보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세 목적과 배치, 교부산식의 복잡화에 따른 비효율성, 이중 교부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왜곡 등 여러 비판과 우려가 제기(박충훈, 2021b)

7) 인력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지방자치법』 제205조 제3항)
 -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은 자체 신규채용 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타 기관에서 전입된 인력도 해당

2.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개념과 특성

1) 기본 개념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주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지방자치법』 제203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관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

2) 수립 및 변경 절차

-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으면, 기본계획이 성립
- 변경할 때의 절차도 같음

3) 사무 및 관할구역

(1) 사무 범위

- 특별지방자치단체 소관 전 사무를 대상으로 함
 - 소관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 기본계획에 해당 사무 모두를 직접 열거하면서, 사무별로 주요 관련 사항을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계획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획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전 사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의 내용과 형식이 갖춰지면 충분

(2) 대상구역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임(『지방자치법』 제201조)
- 특정 사무가 관할 구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해당 사무에 관한 계획의 공간적 영향력은 그 일부 구역에 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01조)

4) 기간

-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규약에서 계획기간의 길이를 직접 정해지지 않는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에 속함

- 기본계획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3~5년의 중기계획이 적절
 - 현실성, 구속력을 갖추되, 타 계획 혹은 계획 역할을 하는 규범과의 중복, 충돌을 피할 필요
 - 일본은 광역연합마다 상이하나, 중기 범위
 - 예) 간사이 광역연합 3년, 오사카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 5년
- 10년 범위 등의 장기계획은 먼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상태를 목표로 한 전략계획
 - 적극적, 낙관적 목표 설정, 동원 자원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당면 현실에 대한 고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현실성보다 적극성, 낙관성을 강조한 계획을 위한 실현과제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는 어려움
-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은 현재의 당면과제의 대응계획으로 수행기관에 대한 구속력 확보에 적절
 - 그런데 매년 작성되는 예산의 세출예산서는 사무수행의 자원배분에 관한 사업단위 계획 역할을 하고 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수립
 -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무수행에 관한 단기계획이 이미 있는데, 추가로 단기계획을 마련한다면, 계획의 중복, 계획 간 내용 충돌에 따른 혼란 우려
- 계획에서 한 해의 설정은 그 해의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하거나, 회계연도의 첫 날부터 마지막 날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1월 1일 시작해 12월 31일 종료되므로(『지방자치법』 제140조), 예산계획의 연도와 일치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일자에 따라 계획의 첫해 기간과 시작일이 다른 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첫 해 계획기간의 시작일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후 진행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기본 계획 의결일 이후일 것이기 때문
 - 첫 해는 출범일 이후 기간으로 하고, 두 번째 연도부터 한 해 전체를 범위에 포함시키면 될 것임

5) 성격

(1) 법정계획

-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목적,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지방자치법』)이 정함

(2) 구속적계획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지방자치법』 제203조 제2항),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성을 지님
 - 구성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음
 - 그런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또한 강제성이 있는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의식적인 준수 노력을 요구받는다고 할 것임

- 일본 광역연합의 광역계획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에도 구속력을 지님(일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 7)

(3) 종합계획

- 일부 사무에 한정되지 않고, 소관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종합성을 지님
 - 종합성을 지니는 만큼, 부문별 계획과 달리 계획의 전술성보다 전략성이 강조

(4) 최상위계획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법률은 기본계획 외의 다른 유형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이들 계획에 대해 우위에 있는 최상위계획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본계획은 소관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계획이라는 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등, 조례와 예산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며 구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반할 수 없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기본계획 외의 다른 계획은 직접적으로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임을 표명하거나, 직접적인 표명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위계획으로 역할

6) 타 규범과의 관계

- 기본계획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을 다루는 것인 만큼,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으나 구속력 지닌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는 타 제도와와의 관계, 집행기관의 재량 등을 감안해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외에 구속력을 지니고,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규범은 규약, 예산 등이 있음
 - 규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이 필요
 - 예산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이 필요
- 규약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규범으로 일종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아니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난이도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02조 제1항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규약안 제8조 제2항)

-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사무에 관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의 기간
- 예산은 세입, 세출 등 재정전반에 관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용(『지방자치법』 제210조) 혹은 인용(『지방자치법』 제211조)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로 구성되므로 『지방자치법』 상의 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지방재정법』 등 타법의 관련 조항에서 시·도 혹은 시·도지사를 인용할 경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혹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인용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42조)
- 기본계획과 예산은 둘 다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계의 우위가 불분명
- 사무는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데, 기본계획은 사무처리에 관한 계획인 반면, 예산은 자원배분을 통해 사업집행여부와 집행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사무가 위계상 사업의 상위이므로 사업에 관해 계획하는 예산보다 사무처리 기본계획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예산은 세출뿐 아니라 세입에 관한 계획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무와 사업의 위계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양자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에 포함되는 사항은 예산결정과정의 자율성과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소요재원 추정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에 신중할 필요
-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당해년도는 단년 세입·세출예산서, 중기 계획은 계획기관이 5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
 - 구속력 있는 당해년도 예산서가 회계연도 내에 실질적인 구속력 확보를 위해 2~3 차례의 경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계획에 예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을 경우, 잦은 수정으로 인한 번거로움, 중기계획으로서의 안정성 훼손 문제 초래
-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제도를 존중할 필요
- 절차 측면에서 의회 의결 등 예산에 요구되는 수준은 기본계획과 같음
 - 예산결정에 관한 제도적 이해와 실제 경험 수준이 기본계획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 타 규범과의 관계에서 볼 때, 사무처리 기본계획은 규약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 규약이 집행기관의 조직 형태,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 행정기구 및 인사운영에 관한 내용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이 사항에 관한 핵심적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

- 단, 사무처리와 관련된 조직 및 인력운영의 방향성 제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 상호충돌의 여지가 없는 사항은 포함 가능할 것임
 - 사업 수준으로 운영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의사 결정 혹은 집행을 하지 않는 조직의 운영(예: 메가시티 시·군·구 협의회, 각종 전문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 방향성 혹은 의지의 제시(예: 교육훈련의 방향성 제시, 파견이 아닌 직원 전입을 통한 자체 직원화 노력의 표명) 등이 해당
- 예산과의 관계에서,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우위를 인정하더라도, 재정계획에 관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정계획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사무처리 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부적절
 -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과제에서 현저히 이탈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상의 관련 내용을 준용, 인용해 수립되는 예산, 중기재정계획을 존중될 필요가 있음

3.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처리 기본계획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법』 제203조,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8조에 따라 수립
 - 법정계획, 구속적 계획, 종합계획, 최상위계획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성격은 다르지 않음
- 사무처리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계획기간 동안 추구하여야 할 당면 목표, 방향성, 주요 과제를 제시
- 대상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관할 구역
- 계획기간: 5년(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8조 1항)
-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8조 제2항)
 -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사무처리에 관한 특별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 이행 및 추진 정도에 대한 평가

제 3 장

부울경 지역현황 조사

03

부울경 지역현황 조사

1. 조사개요

- 부울경 지역현황을 공공행정, 인구, 경제산업, 교통을 중심으로 검토
- 공공행정은 부울경 자치현황, 지자체 간 협력,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
 - 지자체 및 지자체 간 협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과 관련성 높은 부분
 -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부울경 지역 소재 중앙정부 관할 공공기관과 지방청 이상 특별행정기관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었는데, 전자는 공공기관 이전(균형발전), 후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분권)과 관련성 높음
- 인구, 경제산업, 교통은 경재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 현황에 초점을 두고 조사

2. 공공행정

1) 지방자치

(1) 자치체계

- 부울경권의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가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39개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는 조선말인 1896년 설치되었으며, 부산은 1963년, 울산은 1997년 경상남도로부터 분리
 - 1925년 경남도청 소재지가 진주부에서 부산부로 변경
 - 1963년 부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정부 직할로 분리
 - 1978년 경상남도 김해군 일부가 부산시로 편입

- 1981년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명칭 변경
- 1983년 경남도청 소재지가 부산직할시에서 창원시로 변경
- 1995년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 경상남도 양산군 일부가 부산 편입
- 1997년 울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 울산광역시로 승격

○ 부울경권의 인구는 779만 명(2021년 기준), 면적은 12,373km²임

- 인구는 부산광역시가 335만 명(43.0%)으로 가장 많으며, 면적은 경상남도가 10,541km²로 가장 넓음

〈표 3-1〉 부울경권 기본정보

(단위: 명, km², 개)

구분	인구	면적	관할지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계	시	군	구	내역
계	7,786,155	12,373	39	8	12	19	
부산광역시	3,350,380 (43.0%)	770 (6.2%)	16	0	1	15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울산광역시	1,121,592 (14.4%)	1,062 (8.6%)	5	0	1	4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상남도	3,314,183 (42.6%)	10,541 (85.2%)	18	8	10	0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주민등록인구(2021. 12.), 지적통계(2020)

(2) 인사

- 부울경권 3개 시·도의 공무원 현원은 8,968명으로 부울경권 지자체 공무원 총 44,209명의 20.3%를 점유
 - 부산시가 4,520명(5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도 2,491명(27.8%), 울산시 1,957명(21.8%) 순

〈표 3-2〉 부울경 공무원 수(현원)

(단위: 명, %)

구분	시·도		시·군·구		시·도 대 시·군·구 비율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계	8,968	100.0	35,241	100.0	20.3 : 79.7
부산광역시	4,520	50.4	11,989	34.0	27.4 : 72.6
울산광역시	1,957	21.8	3,687	10.5	34.7 : 65.3
경상남도	2,491	27.8	19,565	55.5	11.3 : 88.7

자료: 행정안전부(2021),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0. 12. 31. 기준)

- 부산시와 경남도가 인구 규모가 비슷함에도 시·도 공무원 규모에서 차이가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차이에 기인
 - 부산시는 관할지역 자체가 하나의 대도시 지역경제생활권으로서 대도시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큰 반면, 경상남도는 시, 군이 독자적인 지역경제생활권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역할이 강조
 - 이로 인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대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비율에서 부산시 비율이 경상남도보다 16.1%p 높게 나타남
 - 울산시도 부산시와 다르지 않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 공무원 비율이 경상남도보다 23.4%p 높음

(3) 재정

- 3개 시·도 재정 규모(총계)는 2021년 세출예산(본예산) 기준 26조 3,848억 원임
 - 부산시가 12조 4,099억 원(47.0%)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10조 1,195억 원(38.4%), 울산시 3조 8,555억 원(14.6%)순임

〈표 3-3〉 부울경 2021년 세출규모

(단위: 백만 원, %)

구분	시도				시군구		시도 대비 시군구 비율
	총계		순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6,384,847	100.0	12,450,732	100.0	26,808,267	100.0	31.7:68.3
부산광역시	12,409,904	47.0	6,980,092	56.1	7,435,899	27.7	48.4:51.6
울산광역시	3,855,482	14.6	2,307,168	18.5	2,558,136	9.5	47.4:52.6
경상남도	10,119,461	38.4	3,163,472	25.4	16,814,232	62.7	15.8:84.2

자료: 지방재정365

-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 기준 전체 규모는 12조 4,507억 원임
 - 부산시가 6조 9,801억 원(56.1%)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3조 1,635억 원(25.4%), 울산시 2조 3,072억 원(18.5%)순임
 - 부산시와 울산시의 중복분이 각각 43.8%, 40.2%인 반면, 경남은 68.7%로 높아 총계 대비 순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 권한과 사무의 범위 차이가 반영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출 비중은 경남이 부산, 울산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 경남 지역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출 비중은 84.2%로 기초 지자체 지출총액은 도 지출의 5배를 상회하나, 부산, 울산 지역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 소폭 높은 수준(3.2%p~5.2%p 격차)

- 부산, 울산은 대도시 지역으로 구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구의 사무, 권한은 대도시 종합행정의 효율성, 통일성 실현을 위해 시, 군에 비해 제약
-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 군은 주위와 일정 수준 구분되는 경제·생활공동체로 볼 수 있는 반면, 구는 하나의 대규모의 밀집화된 경제·생활공동체인 특·광역시의 한 부분에 가까움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추진을 위해 2021년 7월 합동추진단을 발족,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단장은 3개 시·도 부단체장이며, 실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1국 2과, 울산 위치)
- 합동추진단의 주요 기능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발굴(권한위임을 위한 대정부 협의 등)
 -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및 시·도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 메가시티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정책 건의 및 대응 등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노력 이전에도 부울경 지역 지자체 간 협력이 꾸준히 전개
 - 지자체 간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
 - 지금 준비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외에 법인 설치를 통한 부울경권 협력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운영이 3건 확인
- 현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물류·유통, 첨단제조업 및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여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4년 설립
 - 부산시와 경남도가 참여
- 과거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부산시, 거제시 참여),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부산시, 김해시 참여)이 운영되었는데, 운영목적이 달성되어 해산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노력은 기존 협력의 문제점,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초광역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합 운영은 인프라 조성, 관리 등 특정 분야의 협력에 한정되었으며, 조합의 제도적 한계로 넓은 범위에서 적극적인 협력의 추진은 한계가 컸음

3) 중앙정부와의 관계

(1) 중앙정부 관할 공공기관

- 부울경권 소재 중앙정부 관할 공공기관은 총 47개로 전체의 12.7%를 점유
-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권역은 수도권으로 161개(43.6%)이며, 다음은 충청권으로 87개(23.6%) 기관이 소재
 - 충청권은 대전 소재 R&D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서울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다수가 세종시에 소재
- 부울경은 기관수 기준 수도권, 충청권에 이은 3위이나, 지역 규모, 위상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내리기는 어려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수가 5개(38.5%)로 주요 권역중 가장 높은데,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해당 유형의 주요기관이 부산에 소재해 있기 때문임

〈표 3-4〉 지역별 공공기관 수

(단위: 개, %)

구분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부설기관	합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수도권	4 (26.6)	5 (23.8)	110 (50.4)	4 (30.7)	30 (36.5)	8 (40)	161 (43.6)
부울경권	5 (33.3)	3 (14.2)	24 (11)	5 (38.4)	8 (9.7)	2 (10)	47 (12.7)
부산	2 (13.3)	1 (4.7)	12 (5.5)	3 (23)	3 (3.6)	2 (10)	23 (6.2)
울산	2 (13.3)	1 (4.7)	3 (1.3)	1 (7.6)	3 (3.6)	-	10 (2.7)
경남	1 (6.6)	1 (4.7)	9 (4.1)	1 (7.6)	2 (2.4)	-	14 (3.7)
충청권	2 (13.3)	4 (19)	53 (24.3)	0 -	20 (24.3)	8 (40)	87 (23.5)
대경권	2 (13.3)	3 (14.2)	12 (5.5)	1 (7.6)	7 (8.5)	1 (5)	26 (7)
호남권	1 (6.6)	3 (14.2)	13 (5.9)	2 (15.3)	11 (13.4)	1 (5)	31 (8.4)
강원권	1 (6.6)	2 (9.5)	3 (1.3)	-	6 (7.3)	-	12 (3.2)
제주권	-	1 (4.7)	3 (1.3)	1 (7.6)	-	-	5 (1.3)
합계	15 (100.0%)	21 (100.0%)	218 (100.0%)	13 (100.0%)	82 (100.0%)	20 (100.0%)	369 (100.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공공정책자료), 2021, 공시대상 공공기관 일반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부울경권 소재 지방청급 이상 특별지방행정기관 수는 28개로 총 150개 청중 18.7%를 점유
 - 부산에 17개, 울산에 4개, 창원에 7개 기관 소재
-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모두에 존재하는 기관유형은 총 6개임
 - 지방검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조달청, 지방병무청
- 부울경권에 1개 소만 존재하는 기관 유형은 12개로 11개는 부산, 1개는 창원에 소재
 - 부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고등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우정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남지방통계청, 부산지방기상청
 -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 부울경권 소재 기관중 부울경 외 지역까지 관할하는 기관은 5개임
 - 부산지방국세청: 제주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 경북
 - 부산지방항공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

3. 인구

1) 인구 일반

- 부울경 인구 추이를 5년 단위로 살펴볼 경우, 절대 규모는 최근에, 상대적 비중은 꾸준한 감소세가 확인
 - 수도권 일극화 현상에 따른 지역 침체, 쇠퇴에서 제2권역인 부울경 또한 예외가 되지 않음을 시사
- 부울경의 2020년 인구는 786.8만 명으로 2000년 793.1만 명 대비 6.3만 명(8.0%) 감소
 - 같은 기간 국가 전체적으로는 409.6만(7.9%), 수도권은 396.2만 명(15.2%) 증가
- 2020년 부울경권 인구 비중은 15.2%로 2000년 대비 1.4%p 감소
 -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0%p 증가해 2020년 전인구의 과반이 수도권에 거주
- 2020년 이후 부울경 인구의 총 규모는 5년마다 평균 0.2% 감소했으며, 점유율은 평균 0.4%p 감소
 - 수도권 인구의 총 규모는 5년마다 평균 2.1%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평균 1.0%p 증가

〈표 3-5〉 수도권과 부울경권 인구 변화 추이(2000~2020년)

(단위: 천 명, %, %p)

권역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5년 주기 평균 변화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총규모	비중
전국	47,733	100.0	48,782	100.0	50,516	100.0	51,529	100	51,829	100	2.1	-
수도권	22,076	46.2	23,465	48.1	24,857	49.2	25,471	49.4	26,038	50.2	4.2	1.0p
서울	10,311	21.6	10,167	20.8	10,313	20.4	10,022	19.4	9,668	18.7	-1.6	-0.7p
인천	2,546	5.3	2,600	5.3	2,758	5.5	2,926	5.7	2,943	5.7	3.7	0.1p
경기	9,219	19.3	10,697	21.9	11,787	23.3	12,523	24.3	13,427	25.9	9.9	1.6p
부울경권	7,931	16.6	7,886	16.2	7,985	15.8	8,052	15.6	7,868	15.2	-0.2	-0.4p
부산	3,797	8.0	3,638	7.5	3,568	7.1	3,514	6.8	3,392	6.5	-2.8	-0.4p
울산	1,040	2.2	1,088	2.2	1,126	2.2	1,174	2.3	1,136	2.2	2.3	0.0p
경남	3,094	6.5	3,160	6.5	3,291	6.5	3,365	6.5	3,340	6.4	1.9	0.0p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 인구 순이동

○ 부울경 지역은 2000년 이래 지속적인 순유출 상태에 처해 있음

- 2020년 부울경권의 인구 순이동(유입인구-유출인구)은 44,586명 순유출로, 87,775명이 순유입된 수도권과 대조적
-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순유출 상태로 각각 14,347명, 13,584명, 16,658명 순유출

〈표 3-6〉 권역별 인구 순이동

(단위: 명)

권역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수도권	150,252	128,809	31,026	-32,950	87,775
서울	-46,939	-51,007	-115,023	-137,256	-64,850
인천	13,165	10,965	3,612	9,538	-15,748
경기	184,026	168,851	142,437	94,768	168,373
부울경	-48,990	-31,748	-28,745	-8,535	-44,589
부산	-43,694	-36,975	-28,466	-13,560	-14,347
울산	3,216	-392	-3,525	-80	-13,584
경남	-8,512	5,619	3,246	5,105	-16,658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4. 경제·산업

1) 지역 내 총생산

- 부울경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9년 270.5조 원이며 전체의 14.6%를 점유
 - 경남이 109.4조 원(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89.1조 원(4.8%), 울산 72.0조 원(3.9%) 순
-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은 2019년 964.3조 원으로 전체의 52.0%를 점유
 - 2010년 대비 37.1% 증가한 규모이며, 점유율은 49.1% 대비 2.9%p 상승
- 수도권의 경제 집중 심화는 인근 충청권의 범수도권화를 초래,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충청권 지역내 총생산은 2019년 231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절대 규모는 36.8% 증가했으며, 상대적 비중은 0.7% 증가
 - 총생산 규모 증가율은 수도권 다음으로 높으며, 7개 권역중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에 불과함
- 부울경의 권역별 성장률(2010년 대비 2019년 값의 수준)은 가장 낮으며, 상대적 점유율 감소폭은 주요 권역 중 가장 높음
 -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2010년 236.5조 원 대비 14.4%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전체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29.4% 대비 15.0%p 낮음
 - 상대적 비중은 2010년 16.5%에 비해 1.9%p 감소

〈표 3-7〉 권역별 지역 내 총생산

(단위: 조 원, %)

구분	2010		2015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703.3	49.1	832.3	50.1	964.3	52.0
호남권	139.8	9.8	150.7	9.1	163.7	8.8
대경권	136.2	9.5	154.9	9.3	159.2	8.6
강원권	35.5	2.5	40.9	2.5	46.1	2.5
충청권	168.8	11.8	202.9	12.2	231.0	12.5
부울경권	236.5	16.5	262.1	15.8	270.5	14.6
부산	72.0	5.0	82.7	5.0	89.1	4.8
울산	66.3	4.6	72.9	4.4	72.0	3.9
경남	98.3	6.9	106.6	6.4	109.4	5.9
제주권	12.4	0.9	16.9	1.0	19.2	1.0
전국	1432.4	100.0	1660.8	100.0	1854.0	100.0

자료 :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 무역

- 부울경권의 수출입 총액은 2020년 1614.5억 달러로 전체의 16.5%를 점유함
 - 울산이 843.8억 달러(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533.9억 달러(5.4%), 부산 236.9억 달러(2.4%)순임
 - 수출액은 1,033.0억 달러(20.2%)로서 울산이 560.9억 달러(10.9%)로 가장 많고, 경남(358.9억 달러, 7.0%), 부산(113.2억 달러, 2.2%)순
 - 수입액은 581.5억 달러(12.4%)로서 울산이 282.9억 달러(6.0%)로 가장 많고, 경남(175.0억 달러, 3.7%), 부산(123.7억 달러, 2.6%)순
- 2020년 수출입 총액은 2000년 대비 922.4억 달러(133.3%) 증가하였는데, 수출은 618.5억 달러(149.2%), 수입은 304.0억 달러(109.5%) 증가
 - 전국 증가율 대비 총액은 61.3%p, 수출은 48.3%p, 수입은 81.9%p 낮음
- 2020년 수출입 총액 점유율은 2010년 20.8% 대비 4.3%p 감소하였는데,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주요 권역중 가장 높은 수준
 - 수출 점유율은 3.9%p(24.1%→20.2%), 수입 점유율은 4.9%p(17.3%→12.4%) 감소
 - 2020년 수출 점유율은 3위로 충청권(21.6%)보다 낮은 수준
- 국제교역에서 수도권에 비해 위상은 여전한데, 부울경의 영향력은 감소
 - 수도권의 수출입 총액 비중은 2020년 53.3%로 2000년 대비 3.0%p 증가
- 범수도권화에 따른 충청권의 첨단산업 역량 강화로 부울경권과 충청권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2000년만 하더라도 충청권의 교역규모는 부울경권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53.6%), 2020년 92.4% 수준에 이르는 수출액 규모는 1107.6억 달러로 부울경권보다 74.6억 달러(7.2%) 높은 수준

〈표 3-8〉 권역별 국제교역 규모금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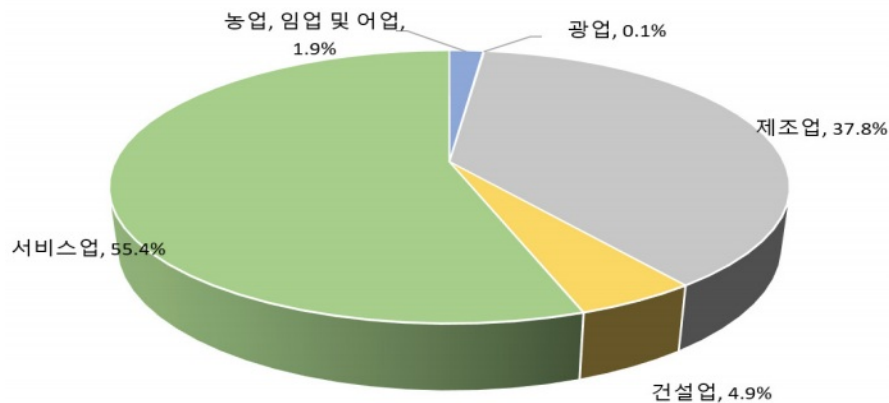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0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1,675.3	50.3%	5,222.2	53.3%
호남권	260.0	7.8%	809.8	8.3%
대경권	320.6	9.6%	608.0	6.2%
강원권	7.2	0.2%	51.7	0.5%
충청권	371.3	11.2%	1,490.2	15.2%
부울경권	692.1	20.8%	1,614.5	16.5%
부산	88.2	2.7%	236.9	2.4%
울산	342.4	10.3%	843.8	8.6%
경남	261.5	7.9%	533.9	5.4%
제주권	0.9	0.0%	4.9	0.1%
합계	4,019	100.0%	11,416	100.0%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3) 산업 구조

- 부울경권의 산업구조를 지역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54.5%로 가장 크며, 제조업 (37.8%), 건설업 (4.9%), 농림어업(1.9%) 순임(2020년 기준)



〈그림 3-1〉 부울경권 산업구조(2020년)

- 시·도별로 살펴볼 경우, 타 시·도와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이 나타남
- 부산은 서비스업 비중이 75.7%로 압도적인데,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이 높고,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로서 종합적 생활 지원기능(상업, 문화시설 등)의 발달 수준이 높기 때문임
 - 울산은 제조업 비중이 62.6%로 가장 큰데, 중공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고도화되었기 때문
 - 경남은 부울경권의 전반적 비중과 유사하나, 농림어업 비중이 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부경남 산업에서 농업 비중이 크기 때문임

〈표 3-9〉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구조(2020년)

(단위: 조 원, %)

구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소득	비중	지역소득	비중	지역소득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0.4	0.5%	0.1	0.2%	3.8	4.0%
광업	0.0	0.0%	0.1	0.1%	0.1	0.1%
제조업	14.2	18.2%	33.7	62.6%	37.5	39.8%
건설업	4.4	5.6%	2.1	3.9%	4.6	4.9%
서비스업	59.1	75.7%	17.9	33.2%	48.2	51.2%
합계	78.1	100.0%	53.9	100.0%	94.2	100.0%

주: 추정치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 2,3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어 있으나, 서부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경제적 이익의 안정적 분배를 위해서 1차 산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실업률

- 부울경권의 2020년 실업률은 4.1%로 전체 4.0%보다 0.1%p 높고, 수도권 4.2%에 비해 0.1%p 낮음
 - 2010년 수도권 대비 1.2%p 낮았으나, 2015년 0.9%p차이로 준 이래, 계속 격차가 줄고 있음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3-2〉 실업률 변화 추이

-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시·도별로 살펴볼 경우, 부산 (7.1% → 4.2%), 울산 (4.3% → 4.2%), 경남 (3.5% → 4.0%)로 부산과 울산의 실업률은 하락한 반면 경남은 실업률이 증가함

〈표 3-10〉 부산, 울산, 경남의 실업률

년도	부산	울산	경남
2000	7.1%	4.3%	3.5%
2005	4.4%	3.4%	2.6%
2010	3.6%	3.5%	2.8%
2015	4.1%	2.9%	2.6%
2020	4.2%	4.2%	4.0%
증감률(2020년 - 2000년)	-2.9%p	-0.1%p	0.5%p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5) 주요 기업

- 2021년 기준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부울경권 기업 수는 4개, 1,000대 기업 중에서는 92개임
 -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88개, 1,000대 기업 중 746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임
- 매출 100대 기업에 속한 부울경권 기업은 LS니꼬동제련, 현대중공업(울산), 현대위아(경남), 한국남부발전(부산)으로 울산 2개 기업, 경남, 부산 각 1개 기업임
 -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민간 기업의 업종은 중공업임
- 매출 1,000대 기업에 속한 부울경권 기업의 본사는 경남에 38개, 부산에 28개, 울산에 26개가 위치

〈표 3-11〉 주요 대기업의 부울경권 비중

(단위: 개)

100대 기업				1,000대 기업						
지역		업체수		지역		업체수				
전체		100		전체		1,000				
수도권	서울		76	88	수도권	서울		526	746	
	인천		3			인천		39		
	경기		9			경기		181		
부울경권	부산		1	4	부울경권	부산		28	92	
						울산		26		
	울산		2			경남	거제시	1		38
							고성군	2		
							김해시	2		
							밀양시	1		
							사천시	2		
							양산시	5		
							진주시	2		
							창원시	21		
경남	창원시	1	함안군		2					
그 외		8	그 외		162					

자료 : 나이스 평가정보 KIS코드 (연구진 분류)

6) 스타트업

- 부울경의 경제적 위상이 날로 줄어들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 이른 중화학 공업 기반이 비교적 견고해 당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차세대 먹거리의 발굴, 미래산업 주도를 위한 혁신동력의 확보에서 부울경권의 불확실성은 높음
- 차세대 산업의 혁신동력의 진단에 스타트업의 활성화 수준을 활용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100억 이상(누적) 투자 받은 스타트업의 수는 161개로 이 중 92.5%는 수도권에 위치
 - 서울 137개(85.1%), 경기 12개(7.5%)이며, 부울경 지역은 경남 1개에 불과한 실정



자료: 통계청,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19)

〈그림 3-3〉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수

5. 교통

1) 도로 및 철도 일반

- 부울경권의 도로 및 철도연장은 각각 18,073km², 674km²로 전국의 16.1%, 12.2% 점유
 - 도로연장은 경남이 12,185km²(10.9%)로 가장 길며 다음으로 부산 3,397km²(3.0%), 울산 2,491km²(2.2%)순
 - 철도연장은 경남이 300km²(5.4%)로 가장 길며, 다음으로 부산 277km²(5.0%), 97km²(1.7%)순
 - 경남의 광대한 면적을 감안하면, 도로연장 수준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
 - 철도연장은 도로연장에 비해 경남대비 부산의 상대적 비중이 높는데, 경부회랑의 핵심 거점이고, 제2의 도시로서 일찍부터 도시철도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침

〈표 3-12〉 도로 및 철도 연장

(단위: km, %)

구분	도로		철도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전체	112,132	100.0	5,522	100.0
수도권	30,676	27.4	1,649	29.9
서울	8,135	7.3	625	11.3
인천	3,511	3.1	151	2.7
경기	19,031	17.0	873	15.8
부울경권	18,073	16.1	674	12.2
부산	3,397	3.0	277	5.0
울산	2,491	2.2	97	1.7
경남	12,185	10.9	300	5.4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2020년)

2) 도시철도 접근성

-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적 전제는 공간의 압축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망, 특히 도시철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특정 도시, 지역에서 도시철도를 이용가능하다면, 해당 도시철도로 연계된 다른 도시, 지역과 같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울경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수도권 등 타 권역과 비교
 - 도시철도 접근성=도시철도역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인구/해당권역 전체 인구x100%
 - 특·광역시의 경우, 구는 하나의 도시, 지역으로 보되, 군은 별도로 구분
 - 인구 외에 면적도 함께 활용
 - 해당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영역을 기준으로 측정해 실제 접근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상대 비교에서는 일정 수준 타당성을 확보
 -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행사하는 타 유형의 철도노선도 포함
- 접근성 산출 결과, 인구와 면적 기준 모두에서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인구 기준으로는 98.4% 면적기준은 83.4%
 - 수도권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인천시), 안성, 포천시(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시, 지역에서 도시철도 접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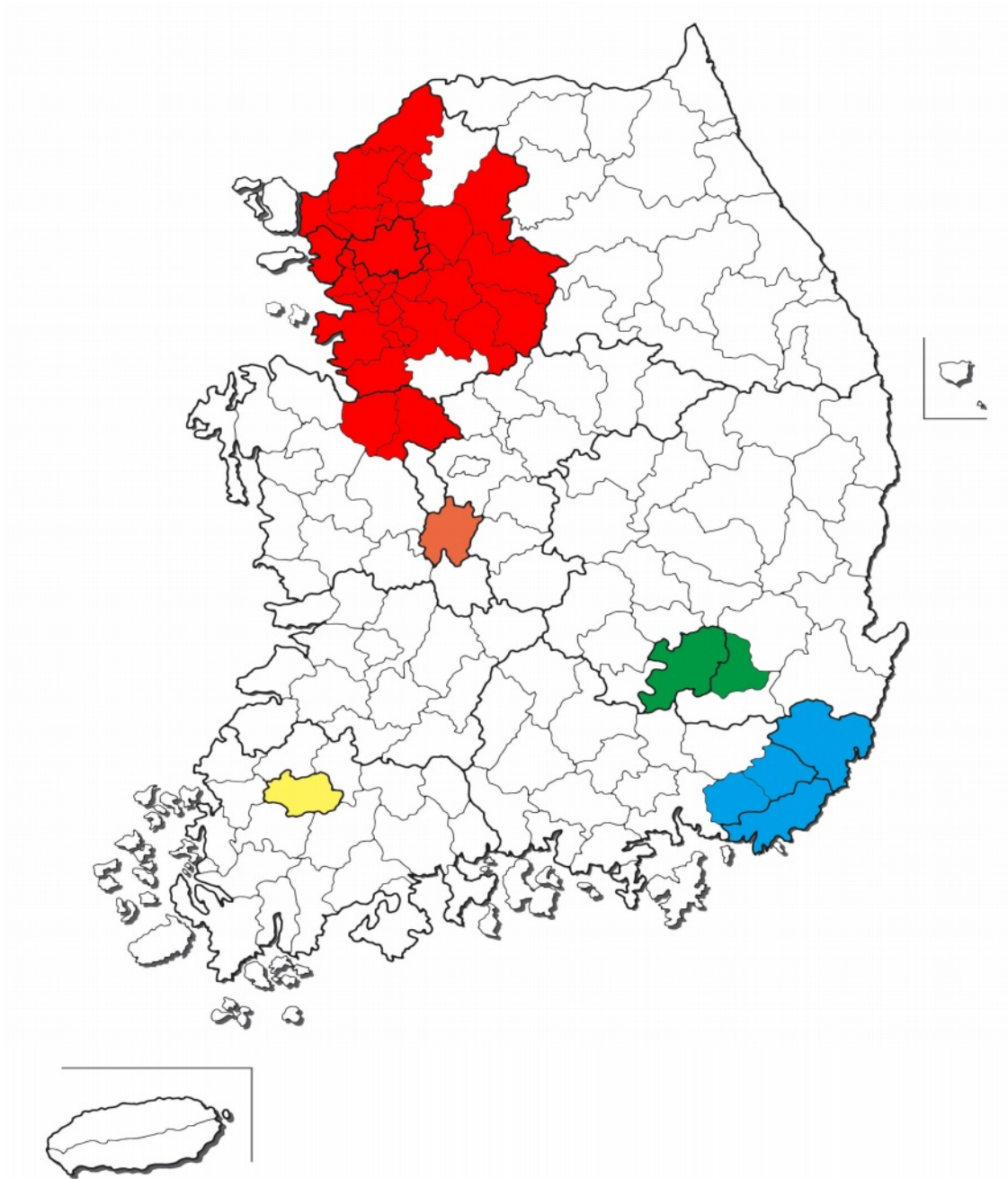
〈표 3-13〉 권역별 도시철도 접근성

(단위: %)

권역		인구 기준	면적 기준	권역		인구 기준	면적 기준
수도권	계	98.4	83.4	충청권	계	44.0	10.3
	서울	100.0	100.0		대전	100.0	100.0
	경기	97.5	86.5		세종	0.0	0.0
	인천	97.0	45.1		충남	46.4	14.3
부울경권	계	54.5	13.9		충북	0.0	0.0
	부산	100.0	100.0	호남권	계	28.5	2.4
	울산	100.0	100.0		광주	100.0	100.0
	경남	26.9	9.0		전남	0.0	0.0
대경권	계	53.0	6.5		전북	0.0	0.0
	대구	100.0	100.0	강원권	계	0.0	0.0
	경북	10.2	2.2		제주권	계	0.0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2020년)

- 부울경권은 인구와 면적 모두 수도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인구 기준으로는 54.5%, 면적기준은 13.9%
 - 수도권 지역이 전권역적 연계가 된 반면, 부울경권은 일부 거점도시(부산, 울산) 간 혹은 거점도시권(부산권) 내 부산, 김해, 양산 간 연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타 권역에서 도시철도의 광역적 연계는 제한적 수준
 - 충청권에서 대전 도시철도는 대전지역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충남의 도시철도망은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확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전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대경권은 거점도시권(대구권) 내 대구, 경산 간 연계로 한정되어 있으며, 호남권의 광주 도시철도는 광주 지역 내에서만 이용 가능



〈그림 3-4〉 도시철도망을 통한 공간적 연계

3) 권역 내 이동 편의성

- 부울경권과 수도권 내 중심 도시 간 이동 편의성을 측정, 비교
- 중심 도시는 해당 권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사 소재지로 함
 - 부울경권: 부산시, 울산시, 창원시
 -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 중심 도시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측정
 - 자가용과 대중교통 이동의 소요시간, 대중교통 이용시 예상요금을 구함
 - 측정은 네이버 지도의 길찾기 기능을 활용
 - 기준 일시는 2022년 1월 12일 14시 30분
 - 기준점은 각 도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사
- 측정 결과,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수도권에 비해 부울경권의 중심도시 간 이동 편의성이 낮게 나타남
 - 직선거리가 유사한 서울-수원(32.6km)과 부산-창원(35.5km)을 비교할 경우, 자가용 이용시 걸리는 시간은 서울-수원(1시간 17분)이 부산-창원(56분)에 비해 21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부산-창원(2시간 31분)이 서울-수원(1시간 33분)에 비해 58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내 중심도시 간 이동은 대중교통 이용시 전 구간에서 도시철도가 주 교통수단으로 역할 하는 반면, 부울경권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도시 경계를 넘어갈 때에 도시철도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음: 비용, 시간에서 불리

〈표 3-14〉 구간별 이동 편의성

구간	직선거리 (km)	자가용 소요시간	대중교통				교통수단간 시간 차이	
			소요시간	요금(원)	거리당 요금 (원/km)	이용노선	절대시간 (분)	상대 시간(%)
서울-인천	27.1	1시간 14분	1시간 07분	1,750	64.58	1호선 → 인천2호선	-7	-9.5
서울-수원	32.6	1시간 17분	1시간 33분	2,150	65.95	1호선 → 마을(27-3)	16	20.8
인천-수원	33.5	58분	1시간 43분	2,050	61.19	인천1호선 → 수인분당선	45	77.6
부산-울산	45.5	1시간 16분	1시간 38분	3,580	78.68	1호선 → 좌석(1137) → 시내(714)	22	28.9
부산-창원	35.5	56분	2시간 31분	2,400	67.61	1호선 → 좌석(221) → 좌석(58)	95	169.6
울산-창원	65.6	1시간 24분	2시간 27분	12,100	184.45	시내(412) → 시외 → 좌석(707)	63	75.0

4) 항공운항

- 부울경권의 2020년 항공운항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선 운항은 43,680편(14.2%), 여객은 666만 명(13.1%), 화물은 34,014톤(9.4%)임
 - 권역 내 최대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운항편, 여객, 화물 실적이 부울경권 전체 실적의 각각 89.3%, 91.3%, 93.7%를 점유

- 운항편은 수도권의 44.0%, 이용 여객 수는 39.2%, 처리화물량은 26.0% 수준
- 권역 내 국제선 운항은 김해국제공항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김해공항 실적을 살펴보면 국제선 운항은 9,470편(5.7%), 여객은 115만(8.1%), 화물은 16,387톤(0.5%)
 - 운항편은 수도권의 6.2%, 이용 여객 수는 9.2%이며 처리화물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함
 -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국제선 운항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움

〈표 3-15〉 항공운항 실적(2020년)

구분		운항		여객		화물	
		수(편)	비율(%)	수(명)	비율(%)	량(톤)	비율(%)
국내선	전체	344,766	100.0	50,711,368	100.0	363,569.30	100.0
	인천	994	0.3	94,095	0.2	1,812	0.5
	김포	110,125	31.9	16,902,376	33.3	129,204	35.5
	수도권	111,119	32.2	16,996,471	33.5	131,016	36.0
	김해	43,680	12.7	6,082,148	12.0	31,863	8.8
	울산	4,930	1.4	554,357	1.1	2,036	0.6
	사천	320	0.1	27,433	0.1	115	0.0
	부울경	48,930	14.2	6,663,938	13.1	34,014	9.4
국제선	전체	167,214	100.0	14,315,695	100.0	3,070,993	100.0
	인천	148,988	89.1	11,955,756	83.5	3,034,357	98.8
	김포	3,455	2.1	543,863	3.8	13,176	0.4
	수도권	152,443	91.2	12,499,619	87.3	3,047,533	99.2
	김해	9,470	5.7	1,153,504	8.1	16,387	0.5
	울산	-	-	-	-	-	-
	사천	-	-	-	-	-	-
	부울경	9,470	5.7	1,153,504	8.1	16,387	0.5

자료 :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공항별통계), 2020년1월~12월, 출도착합계

제 4 장

광역협력 사례분석

1. 분석개요

- 외국의 광역협력 사례를 두 측면에서 분석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협력 기구 운영 사례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과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광역계획
-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춘 기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를 통해 진행
 - 1991년 이후 11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치되었으나, 목적달성에 따른 기관폐지와 다른 법적 지위로 전환기관 등을 제외하면, 현재 7개 기관이 운영(금창호 외, 2021)
 - 운영 기반의 안정성, 사무처리의 자율성에서 한계 노출 비판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제도적 한계, 운영상 문제에 대한 극복과 반영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음
 - 초광역적 협력에 관한 선진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성공적인 초광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선진 주요국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의 운영은 최근의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근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래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것임
 -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유럽에 비해 늦은 일본조차 지역 간 협력기구의 초기형태인 조합 제도를 메이지(明治) 시대부터 운영
- 특히, 분석대상 사례의 제도는 시대 상황과 요구에 맞게 꾸준히 개선되어 온 최근의 제도적 결과물
- 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 운영사례는 총 4개임
 - 영국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 프랑스 메트로폴(Métropole):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

- 독일 지역연합: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 일본 광역연합: 간사이 광역연합

○ 광역계획은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을 살펴봄

2. 해외 협력기구 운영 사례

1)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영국)

(1) 잉글랜드 지역의 광역권 연합기구

① 연합기구 형성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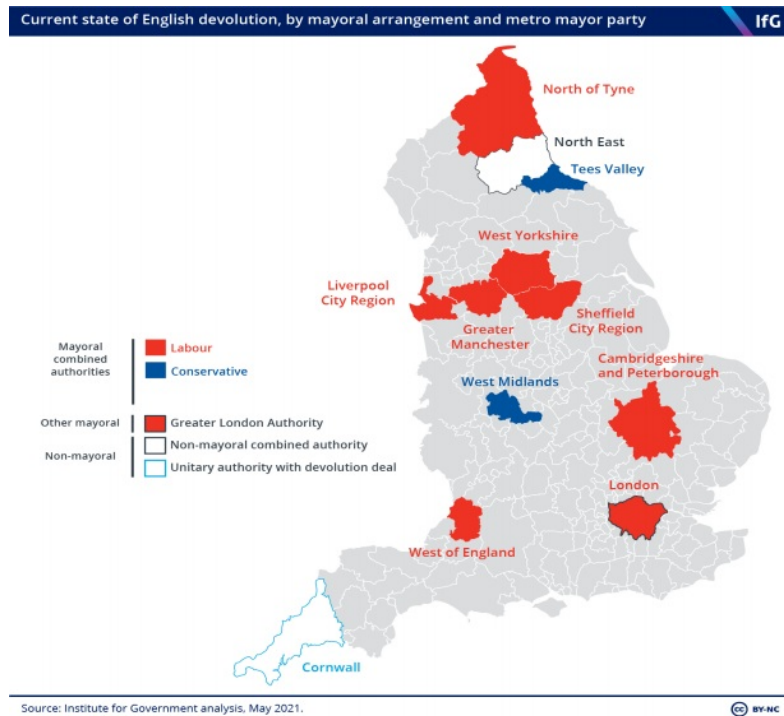
- 영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로서 특정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 협력 기구 구성을 추진, 2017년부터는 잉글랜드 지역에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치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과거 432개이었던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에는 418개, 2020년에는 343개로 감소
- 도시(지역)권 중심의 연합기구 설치 배경
 - 대다수의 자원이 런던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방도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국의 특성으로 인해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기능지역단위인 도시권 형성이 중요
 - 세계화에 따른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경제가 기능하는 공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
 - 서비스 기능의 월경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일-주거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광역적 규모의 경제활동이 증가
 - 주택, 여가·레저 활동, 교육 등 경제적 기능들이 도시 집적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도시 주변의 배후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진행

② 연합기구의 사무범위

- 2016년 도시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법(The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을 제정하여 연합기구의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사무권한, 정치적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광역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9개 분야로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연합기구에 대해 부가적 기능과 권한, 책임을 부여
 - 연합기구는 광역 대도시권의 교통체계, 국립공원 보존 및 관리, 지역개발, 도시범죄예방과 경찰권 등 다양한 광역업무에 필요한 협력 체제를 구축·운영
- 연합기구는 중앙정부와의 교섭과 협상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기 때문에, 교섭과 협상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권한과 기능을 수행

③ 연합기구 현황

-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잉글랜드 지역에는 10개 도시지역권 (City-Region) 연합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자료: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explainers/metro-mayors>

〈그림 4-1〉 잉글랜드의 광역권 연합기구

(2)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① 설치 배경 및 목적

-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GMCA,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는 맨체스터 권역 내 10개의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 연합한 기구로 2011년 4월 설치
 - 10개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중 맨체스터시의 규모가 가장 크고, 지리적으로도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중심도시로서 영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활동
- 연합기구의 모든 자치권과 운영절차 및 인사시스템 등은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기본규약(GMCA Constitution)’에 근거하여 운영

② 관할영역

-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는 잉글랜드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볼턴, 베리, 올덤, 맨체스터, 로치데일, 셸포드, 스토포드, 테임사이드, 트래포드, 위건의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여 구성

- 맨체스터 연합기구 관할의 총인구는 2020년 기준 약 336만명으로 영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이며, 면적은 1,277km², 지역의 총생산(GRDP, 2019)은 841억 3백만 파운드(한화 기준 136조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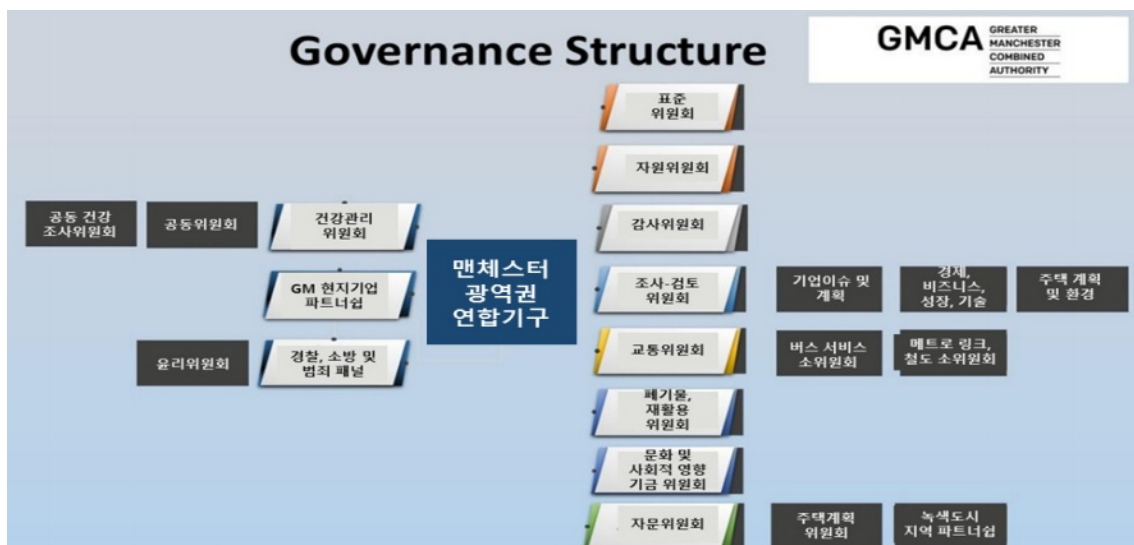


자료: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공동연구 전략계획 최종보고서, 2021

〈그림 4-2〉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의 관할구역

③ 기관구성

-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의 집행기관으로는 각 시 정부의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연합기구 대표, 그리고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및 약 300여 명의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직원으로 구성



자료: ANNUAL GOVERNANCE STATEMENT 2019-20 (GMCA, 2021)

〈그림 4-3〉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의 조직 구성

- 집행위원회(Leaders of the ten councils)
 - 10명의 지자체 대표가 집행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임
 - 정책의 의사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투표에 의거하여 7표 이상 득표해야 가결
- 맨체스터 연합기구 대표(Mayor of Greater Manchester)
 - 맨체스터 연합기구 대표는 연합정부의 대표인 동시에 집행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내각(Mayor's Cabinet)을 구성
 - 주로 관할지역의 지역발전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책임지면서 광역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 대표는 관할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지방경찰책임자를 임명하는데, 임명된 경찰책임자는 연합기구의 부대표 지위를 가짐

④ 수행정책분야 사무

-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는 중앙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영국 내 다른 연합기구보다 더욱 많은 권한과 기능을 수행
-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규약에 명시된 주요 광역 기능
 - 경찰·치안(police and crime)
 - 교통(transport)
 - 화재·구조(fire and rescue)
 - 보건(health and care)
 - 도시계획·주택(planning and housing)
 - 환경·저탄소(environment and low carbon)
 - 기업지원(business support)
 - 기술훈련·성인교육(skills and adult education)
 - 고용지원(employment support)
 - 투자(investment)
 - 폐기물 처리·재활용(waste and recycling)
 - 문화(culture)
-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를 구성하는 10개 구성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은 연합기구대표 아래 기능별 업무수행 책임을 분담

⑤ 예산

-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는 별도의 조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세(council tax)의 일부를 세입으로 확보
- 연합기구 예산 중 보건 예산회계의 운영은 대표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경찰·치안 예산회계는 경찰 책임자가 따로 운영

- 연합기구의 대부분 세입은 영국 중앙정부로부터의 프로그램(사업) 수행을 위한 이전재원으로 구성

〈표 4-1〉 맨체스터 연합기구의 수입과 지출(2020/2021)

(단위: 천 £, %)

구분	항목	금액	비율
수입	• 금융 및 투자 수입	12,768	0.7
	• 수수료, 요금 및 기타 서비스 수입	137,975	7.1
	• 정부 보조금(퇴직수당 비용)	101,482	5.3
	• 지방세 및 사업 수입	270,017	14.0
	• 운송 및 폐기물 부담 수입	251,302	13.0
	• 정부보조금 및 지원금	1,157,093	59.9
	총 수입	1,930,636	100.0
지출	• 도로·교통	250,115	12.8
	• 경제개발	417,491	21.3
	• 폐기물	128,420	6.6
	• 소방·구조 서비스	94,512	4.8
	• 관방비	116,925	6.0
	• 경찰책임 운영 자금*	737,817	37.6
	• 비유동자산 처분 손실	5,666	0.3
	• 금융 및 투자 수입 및 지출	106,162	5.4
	• 경찰퇴직보조금	101,482	5.2
	총 지출	1,958,589	100.0

자료 : Audited Annual Statement of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1 (GMCA, 2021)

* 경찰책임자 운영 자금의 경우 지역경찰청장이 독립적으로 운영

- 맨체스터 연합기구의 총 수입은 19억 3,064만 파운드¹⁾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으로 구분
- 자체수입: 맨체스터 연합기구를 구성하는 10개의 기초정부(council)들이 분담하는 부담금은 전체 예산의 14.0%인 2억 7,002만 파운드이며, 기타 재정 및 투자 수입은 0.7%인 1,277만 파운드, 수수료·사용료 등은 7.1%인 1억 3,798만 파운드 임
 - 이전수입: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보조금(grants)과 기능이양에 따른 지원금(contributions)은 전체 예산의 59.9%인 11억 5,709만 파운드이며, 또한 맨체스터 연합기구 임직원의 퇴직연금비용에 대한 중앙정부(Home Office)의 보조금은 약 1억 148만 파운드는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함
- 연합기구의 지출은 총 19억 5,859만 파운드이며, 경찰 및 치안(police and crime) 예산회계는 경찰책임자가 직접 운영
- 맨체스터 연합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개발 관련 지출이 4억 1749만 파운드(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관련 비용 2억 5,011만 파운드(12.8%), 폐기물 처리

비용 1억 2,842만 파운드(6.6%) 순임

- 경찰책임자가 운영하는 예산은 7억 757만 파운드로 전체 세출의 36.1%를 차지

2)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프랑스)

(1) 프랑스 메트로폴

① 프랑스 메트로폴 형성 배경

- 프랑스의 기초지자체는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간 규모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며, 각 기초지자체는 교통, 도로, 상·하수도, 문화, 체육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조직운동을 위해 소규모 지자체들이 인접한 거점도시와 연합체를 구성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 있음
- 메트로폴은 기존 지역조직이 통합적 공공정책 시행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 및 국제적 도시권 간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대도시공동체보다 적합한 거버넌스가 요구되어 신설
- 메트로폴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개혁법에 따라 2010년 12월 기준 고용권 인구 50만 명 이상의 협력기구로 운영
- 2014년 1월 지역공공활동법(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territoriale et d'affirmation des metropoles, MAPTAM)에 의해 메트로폴의 사무권한과 기관구성 등 특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되면서 주민수 40만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중심이 됨
- 이후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대도시들이 메트로폴을 구성하면서 가장 큰 3개 메트로폴(그랑파리: 704만 명,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188만 명, 리옹: 135만 명)은 다른 메트로폴과 달리 특수 지위를 갖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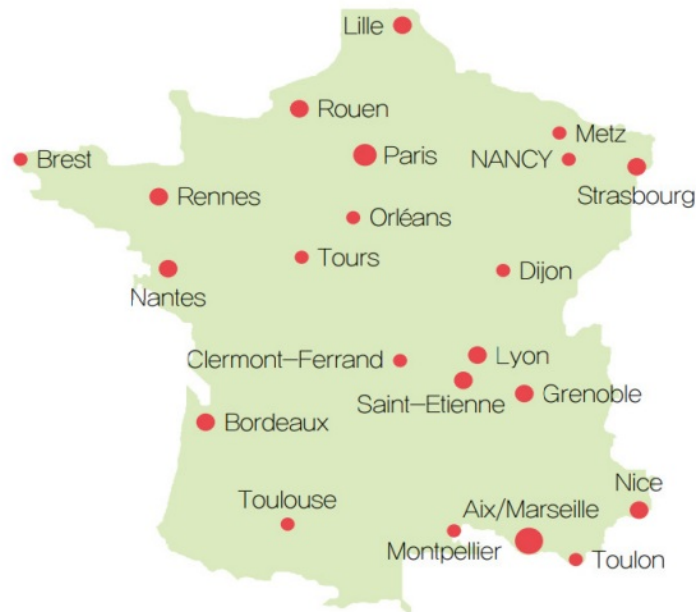
② 메트로폴의 사무범위

- 프랑스의 메트로폴은 기본적으로 이관받은 사무만을 담당
 - 이관 사무의 내용은 법령으로 명시하며 사무 수행을 위해 구성 지자체로부터 세수의 일부를 분할 받아 운영
- 이관된 사무에 관한 메트로폴의 결정 사안에 대해서 소속된 지자체는 번복이 불가능
- 주요 이관 사무
 - 코뮌(기초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무: 경제·사회·문화 분야 설비 및 개발, 도시계획 및 정비, 주거 정책, 공익서비스, 환경보호 및 삶의 질 개선
 - 데파르트망 이관 사무(부분적 이관): 주거지원 기금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지원, 취약 청년층 지원, 소외 가정 및 청년 대상 예방활동, 도로 정비관리 지원, 산업지구·국외 마케팅·경제개발 사무, 기타 데파르트망의 권한 중 추가로 위임한 사무 등
 - 레지옹 이관 사무(선택적 이관): 고등학교 건설·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관련업무, 경제개발 관련 업무

- 글로벌 차원의 지역발전에 대한 권한과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발전과 경쟁력에 필요한 보충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약 체결이 가능

③ 메트로폴 운영 현황

- 메트로폴은 2012년 1개, 2015년 11개, 2017년 14개, 2018년 22개(Toulouse, Lille, Bordeaux, Nantes, Strasbourg, Rennes, Rouen, Grenoble, Montpellier, Lyon 등)로 증가



자료: 배준구, 프랑스의 최근 지방분권 동향, 2019.

〈그림 4-4〉 프랑스의 메트로폴 운영 지역

(2)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Métropole Nice Côte d'Azur)

① 설치 배경 및 목적

- 2009년 약 20만 명의 주민을 포함하는 프랑스 남동부의 3개의 지방자치단체(Vésubie-Mercantour, La Tinée, Stations du Mercantour)가 니스 코트 다쥐르(Nice Côte d'Azur) 지역공동체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제도의 미비로 실패
- 2010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개혁법에 따라 메트로폴 구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1년 니스 메트로폴 구성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각 도시의 의회는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 구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
- 2011년 12월 프랑스 남동부의 니스시를 중심으로 Provence-Alpes-Côte d'Azur 지역의 메트로폴 구성
- 과거 구획화된 대도시 행정조직의 틀을 넘어 경제·환경·교육의 개발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새

로운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

② 관할영역

- 2022년 1월 기준 니스, 카그네스 쉬르 메르, 생로랑 뒤 바르를 비롯한 총 51개의 코뮌으로 구성
-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총 인구는 약 55만 명이며, 면적은 1,480km²임



자료: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 홈페이지 (<http://nicedcotedazur.org/>)

〈그림 4-5〉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관할구역

③ 기관구성

-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은 자문기관인 시장협의회와 메트로폴 의회, 집행부로 구성됨
 - 시장협의회
 - 메트로폴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방향 설정을 위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합의 기관으로 메트로폴을 구성하는 51개 코뮌의 시장으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1명의 장은 1표를 행사함으로써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

- 메트로폴의 주요 프로젝트는 약 6주에 1회 정도 구성되는 시장협의회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된 뒤 메트로폴 의회에서 심의를 진행
- 메트로폴 의회
 - 의결기관으로 51개 코뮌의 시의회가 임명하는 130명의 의원으로 구성
 - 각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되는 의석 수는 인구 기준으로 결정되며, 니스시의 경우 전체의 50%인 65석, 카그네스 쉬르 메르 10석, 생로랑 뒤 바르 5석 등으로 구성
 - 니스 대학(Centre Universitaire Méditerranéen)에서 1년 약 6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메트로폴의 주요 프로젝트를 심의
- 메트로폴 집행부
 - 메트로폴 의회가 구성될 때 의회 의원 중에서 결선투표제 방식을 통해 메트로폴 대표(président)를 선출하며, 19명의 부대표(vice-présidents)는 단명투표로 선출
 - 메트로폴 대표는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수장인 동시에 의회를 대표하여 행정 전반을 책임
 - 19명의 부대표는 각각 ‘도시 정책 및 교통 인프라’, ‘재무·인적 자원·대도시 교통’, ‘고용과 학습’, ‘수도권 도로, 지방 당국과의 관계(국가 수준)’, ‘경제·관광·산업·혁신’, ‘경제(산업)’, ‘주택·도시 재생·도시 정책’, ‘도시 계획·토지’, ‘친환경’, ‘물·위생·에너지’, ‘폐기물·재활용’, ‘법무’, ‘농림업’, ‘정부’, ‘유럽-지중해’, ‘고등 교육·평생 교육’, ‘안전’, ‘문화 행사’, ‘스포츠 이벤트’ 업무를 담당
 - 메트로폴 사무국은 니스시와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 사이에 공유되는 조직으로 메트로폴의 주요 사무를 담당

④ 수행정책분야 사무

○ 지역

- 머칸투어 국립공원개발, 레저산업 활성화
- 니스항 재개발, Azur항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 환경

- 해양환경보호
- 도시환경 모니터링
- 지속가능한개발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 식수·위생·폐기물 관련

○ 개발

- 신기술 및 건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경제산업 개발
- 비즈니스 지원 및 인큐베이터 사업
- 상업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

- 경제부양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연구사업
- 교육 및 인재양성
- 스마트혁신도시 구축

○ 국제 협력

- 유럽위원회의 유럽직속네트워크 센터인 Europe Direct Nice Côte d'Azur Centre를 운영하여 유럽연합의 기능 및 행정에 대한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
- EU를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협력 계획 개발(이탈리아와의 협력)
- 유럽과 중국 연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정책 토론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

⑤ 예산

-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2021년 예산 총 수입은 9억 7,520만 유로임
 -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 수입 중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및 세금이 4억 6,310만 유로로 전체 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지역 상품 수입 2억 1,550만 유로(22.1%), 이익 잉여금 1억 1,820만 유로(12.1%) 등으로 구성됨
-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2021년 예산 총 지출은 8억 2만 유로임
 -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 지출 중 인건비는 2억 1920만 유로로 전체 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예산이 1억 9,900만 유로(24.9%), 생활·폐기물 관리 비용 1억 4,780만 유로(18.5%) 등으로 구성됨
- 2021년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은 기후위기 및 경제회복을 대비하여 4억 8천만 유로의 추가 예산을 투입(기후위기: 1억 5천 2백만 유로, 사회복지: 1억 980만 유로, 경제 활성화: 2천만 유로, 인프라: 1억 2천만 유로 등)

〈표 4-2〉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수입과 지출(2021)

(단위: 백만 €, %)

구분	항목	금액	비율
수입	• 이익잉여금	118.2	12.1
	• 서비스 및 지역 상품	215.5	22.1
	• 분담금 및 세금	463.1	47.5
	• 국가 재정 지원	70.6	7.2
	• 지역 및 부서별 보상 할당	60.8	6.2
	• 지원금, 참여 보조금	16.1	1.7
	• 기타 수입	28.2	2.9
	총 수입	975.2	100.0
지출	• 기본예산	81.8	10.2
	• 교통	199.0	24.9
	• 생활·폐기물 관리	147.8	18.5
	• 위생·보건	27.8	3.5
	• 재난(태풍 알렉스)	3.7	0.5
	• MIN d'Azur 관리	2.0	0.2
	• 교육훈련	1.8	0.2
	• 항만관리	2.2	0.3
	• 인건비	219.2	27.4
	• 기관 보조금	101.8	12.7
	• 일상적 관리비용	63.8	8.0
	• 금융비용	33.3	4.2
	• 기타지출	16.0	2.0
	총 지출	800.2	100

자료 : BUDGET PRIMITIF 2021 Rapport de présentation(Métropole Nice Côte d'Azur, 2021)

3)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독일)

(1) 독일 지역연합

① 독일의 지역연합 형성 배경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는 광역행정과 전문적 사무의 처리, 대도시 행정과 더불어 기초의 행정기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연방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인 지역연합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명료한 형태는 아니며, 불명료한 법적 개념은 각 주의 지방자치법을 통해 주정부의 특성에 따라 구체화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지방의 공동사무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활용

- 독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 구성의 일반적인 경향은 조례제정권을 보유한 의결기관인 의회를 두고, 의회 의원 등의 선출 방법도 주민직선, 간선제 등으로 다양
- 재원은 수수료·사용료, 구성단체 분담금, 연방·주 보조금 등으로 마련

② 지역연합의 사무범위

- 독일 지역연합의 기본사무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한 사무로 국가나 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사무범위에 속한다면, 기본적으로 제한받지 않음
- 적절한 사무의 요건
 - 하나의 게마인데 또는 크라이스에 속한 고유의 사무가 아니며, 연방이나 주법률, 또는 연합을 구성하는 게마인데와 크라이스가 정한 조례에 근거한 사무
 - 연합체가 연합에 부과된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연합체 구성원인 개별 게마인데나 크라이스의 사무를 저해하지 않는 사무
 - 개별 게마인데가 재정적, 행정적 업무능력으로 인해 처리하기 어려운 2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련을 갖는 일종의 지역공동의 보충적 균형발전과제

(2)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① 설치 배경 및 목적

- 1973년 넥카강 유역의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넥카중류광역조합(Regionalverband Mittlerer Neckar)이 설치하여 지역의 공간이용계획·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 1992년 넥카중류광역조합은 슈투트가르트 지역조합(Regionalverband Stuttgart)으로 개칭하고 지역연합 출범 이전까지 지역협력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
- 1994년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설치법(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Verbands Region Stuttgart(GVRS))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Verband Region Stuttgart)이 출범
- 지역경제사회의 침체 극복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 모색 과정에서 지역혁신의 대안적 거버넌스로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설치안이 제시
- 설치목적
 - 지역경제·사회의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 형성
 - 권역 내 공통과제의 협력적 해결
 -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치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대한 협력적·적극적 대응
 - 유럽연합의 주요 경제권역을 전인하는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기능 수행 제고

② 관할영역

- 슈투트가르트시를 중심으로 5개 크라이스(Kreis)인 Böblingen, Esslingen, Göppingen, Ludwigsburg, Rems-Murr 등이 주요 구성원이며, 5개 크라이스 지역 내의 17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총 인구는 270만 명이며 면적은 3,654km², 지역총생산(GRDP)는 1,000억 유로(한화 기준 135조원) 규모임



자료: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홈페이지(<https://www.region-stuttgart.org/politik-und-verwaltung/regionalversammlung>)

〈그림 4-6〉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관할구역

③ 기관구성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독립된 의결기관인 지역연합의회(Regionalversammlung)와 지역연합 집행기관으로 지역연합 사무총장 및 독립된 자체 집행기관을 설치·운영



자료: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공동연구 부문별 계획 최종보고서, 2021

〈그림 4-7〉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기관 구성

○ 지역연합의회

- 지역연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출된 80~9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를 통해 기능수행
- 기획위원회, 교통위원회, 행정·경제·산업 인프라 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및 교통재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특별 위원회를 설치

○ 지역연합 사무총장

- 지역연합의회는 1명의 지역연합 사무총장과 2명의 부서책임자를 8년의 임기로 선출
- 선출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각 행정 부서를 지휘 및 감독
- 대외적으로 지역연합을 대표하며, 행정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 부서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

○ 지역연합 집행기관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행정부서는 광역기본계획, 광역교통, 광역폐수폐기물, 광역경제육성, 산업인프라·문화·박람회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을 설치
- 각 행정부서는 지역연합의 자체 직원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71명으로 구성

④ 수행정책분야 사무

- 지역연합의 사무는 필수사무와 자발적사무, 주 계획법에 따른 사무로 구분

○ 의무사무

- 공간이용계획, 녹지기본계획 녹지공원계획 등 지역기본계획 수립
-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
- 교통계획수립, 전철·지하철·철도·광역버스 등 광역교통 운영 및 관리
- 산업클러스터와 같은 경제육성 사무
- 지역 관광 마케팅

○ 자발적 사무

- 문화 및 스포츠 행사
- 지역적으로 중요한 무역 박람회

○ 주 계획법에 근거한 사무

- 지역개발
- 공간 개발 측면에서 지방 당국을 위한 조연지역연합의 사무는 필수사무와 자발적사무, 주 계획법에 따른 사무로 구분

⑤ 예산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2022년 예산 총 수입은 6억 840만 유로임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수입 중 부채가 2억 7,130만 유로로 전체 예산의 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임 수입을 포함하는 기타수입 1억 1,870만 유로(17.4%), 지역화 기금 1억 1,100만 유로(16.1%) 등으로 구성됨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2022년 예산 총 지출은 7억 3,140만 유로임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지출 중 교통관련 예산이 6억 8,500만 유로로 전체 예산의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 예산이 2,420만 유로(3.3%), 부채상환액 790만 유로(1.1%) 등으로 구성됨

〈표 4-3〉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수입과 지출(2022)

(단위: 백만 €, %)

구분	항목	금액	비율
수입	• 부채	271.3	39.7
	• 기타(운임수입 포함)	118.7	17.4
	• 지역화 기금	110	16.1
	• 협회 부담금	24.2	3.5
	• 유로 교통 부담금	73.5	10.7
	• 준비금	1.5	0.2
	• 할당금	84.8	12.4
	총 수입	684	100
지출	• 교통	685	93.7
	• 계획	2.1	0.3
	• 경제개발	24.2	3.3
	• 인력	6.7	0.9
	• 문화 및 스포츠	0.8	0.1
	• 행정/IT	4.7	0.6
	• 부채상환액	7.9	1.1
	총 지출	731.4	100

자료: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홈페이지(<https://www.region-stuttgart.org/haushalt/>)

4) 간사이 광역연합(일본)

(1) 일본 광역연합

① 일본의 광역연합 형성 배경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특별지방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구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개념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는 광역연합임
 - 광역연합은 특별지방공공단체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세부 유형 중 하나임
 - 두 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광역계획 등과 같은 사무

의 공동 수행을 위해 기획·연계·조정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처리를 위해 수행하는 광역 행정 시스템(일본 지방자치법 제284조 제2~3항)

- 다양한 광역적 요구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허가를 통한 체제정비를 위해 1995년 6월부터 시행
- 여러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연합 단위로 운영

- 광역연합은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행정구 등과 함께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 광역연합은 자체의 집행기관과 의회를 구성하고, 해당기관의 대표위원과 집행기관의 장 등은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선출
-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사무·행정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광역 조정에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

② 광역연합의 사무범위

- 광역연합이 처리하는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기본적으로 제한받지 않음
-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무 중 광역연합이 해당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의 위임절차는 법률 등에 규정

③ 광역연합 운영 현황

- 2021년 4월 기준 총 116개의 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부현 중심의 광역연합: 간사이 광역연합
 - 시구정촌으로 구성되는 광역연합: 소방연합, 하코다테권 공립대학 광역연합,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연합¹²⁾ 등 대다수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주로 관할내 시정촌으로 구성되는 광역연합: 아야노나라 사이타마 사람 만들기 광역연합, 지방세 회수 기구 중 일부 등

(2) 간사이 광역연합

① 설치 배경 및 목적

- 간사이 광역연합은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일본 최초의 광역연합
- 일본 중앙집권체제와 도쿄의 인구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부와 현의 범위를 넘는 행정 책임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설립
- 2010년 12월 간사이광역연합 설치 당시에는 2부 5현(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와카야마

12)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연합은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도도부현마다 설치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도도부현 관할의 시정촌과 특별구

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으로 출발하였으나, 2012년 4개 정령지정도시인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가 가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나라현이 가입

○ 설립목적

- 광역 과제를 통해서 지역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지역사회 실현
- 간사이 지역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주체의 구축
- 간사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 이양

② 관할영역

- 2021년 현재 8개 부·현과 4개 정령지정도시가 참가한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 광역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간사이권역의 총인구는 약 2,200만 명, 면적은 34,745km², 지역총생산 (GRDP, 2019년)은 약 85조 9,700억 엔(한화기준 894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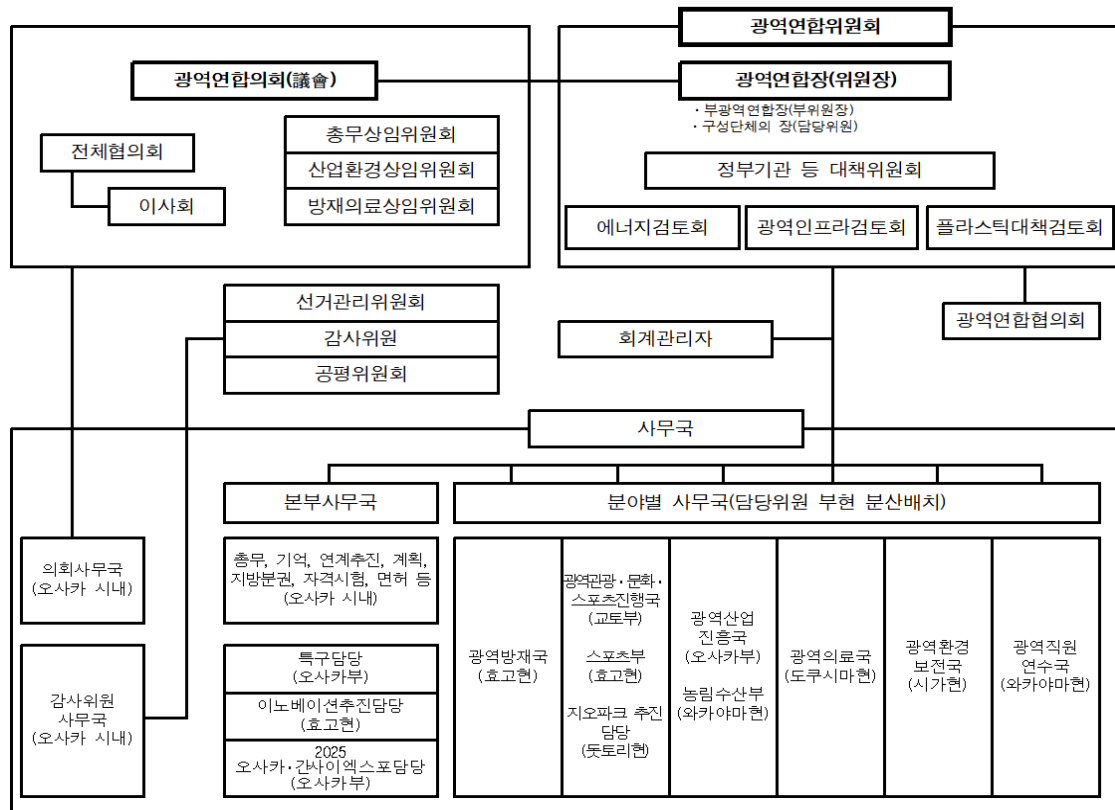
자료: 박명흠, 국외 광역행정 추진 사례 분석, 2020

〈그림 4-8〉 간사이 광역연합의 관할구역

③ 기관구성

- 간사이 광역연합은 기관대립형 구조로 광역연합의회와 광역연합장을 수장으로 하는 집행기관으로 구성
 - 타 광역연합과의 차별점은 광역연합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제 기구인 광역연합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임

- 의사결정의 구체화, 집행은 사무국에서 담당



자료: 간사이 광역연합 홈페이지(<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soshiki/152.html>)

〈그림 4-9〉 간사이 광역연합 조직도

- 광역연합의회는 광역연합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광역의원은 연합을 구성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원을 선출
 - 광역의원의 임기는 소속 자치단체의회의 의원 임기에 따르되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로 함
 -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광역연합 의회의원의 임기(=구성단체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임기)에 따름
 - 현재 12개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맞추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최저 2명 내지 최대 5명씩 선출(각 부·현·시가 선출하는 의원 수는 간사이 광역연합 규약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
 - 상임위원회는 총무상임위를 39명으로 구성하여 총무상임위만 전 의원이 참여하고, 산업환경상임위 20명, 방재의료상임위 19명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음
 - 각 자치단체별 의원 수는 오사카부·효고현 각 5명, 시가현·교토부·와카야마현 각 4명, 나라현·도쿠시마현·오사카시 각 3명, 돗토리현·교토시·사카이시·고베시 각 2명을 배분하고 있음

본회의 : 의원 정원 39명, 개최 연 4회	전원합의회 : 의안 심사, 회의 운영 협의조정	이사회
상임위원회: 총무, 산업환경, 방재의료		
총무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39명(전의원) 소관: 광역연합 관리·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대책, 자격시험·면허, 광역계획 	
산업환경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20명 소관: 광역관광·문화·스포츠 진흥, 산업진흥, 환경보전 	
방재의료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19명 소관: 광역방재·의료, 직원연수 	

자료: 간사이 광역연합 홈페이지(<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gikai/index.html>)

〈그림 4-10〉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구성

- 광역연합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광역연합을 대표하며 광역연합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함
 - 광역연합장은 간사이 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광역연합과 상호 간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계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
 - 광역연합장 및 부광역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양자 모두 구성단체의 장이 아닐 때에는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게 됨
 - 광역연합장은 구성단체의 장들이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데, 입후보자는 구성단체의 장으로 한정
 - 부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장이 광역연합장 이외의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선임함
- 광역연합위원회는 광역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과 조정 및 입안 등을 위하여 광역연합에 구성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기관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나머지 구성단체의 장 10명의 위원과 함께 총 12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議事)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주관
 - 구성단체 각각의 단체장이 주도하는 각 분야의 사무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장이 사무분야별로 담당위원으로서 집행 책임을 맡고 있음
 - 광역연합위원회는 예규나 광역계획, 예산·결산, 광역연합의 시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방침 및 처리방향에 관하여 광역연합장에게 자문하며, 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무국은 광역연합 수행사무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대다수 정책분야 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무 관련 부서에서 자기사무와 함께 처리하는 방식을 취함
 - 이를테면 사가현지사가 환경보건 담당위원으로 집행책임을 맡으면, 사가현의 환경, 보건 담당 부서가 광역연합의 광역환경보건국으로 역할
 - 광역연합 내에 별도로 설치된 본부 사무국은 일반행정, 자격시험·면허 등 일부 사무만을 수행

○ 기타 조직

- 감사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리와 사업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1명과 광역의원 중 1명을 감사위원으로 임명
- 광역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 총 4인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수행
- 또한 광역권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사이 광역연합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④ 수행정책분야 사무

○ 간사이 광역연합은 크게 7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광역 방재 사무
- 광역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사무
- 광역 산업 진흥 사무
- 광역 의료 사무
- 광역 환경 보전 사무
- 자격 시험·면허 등 사무
- 광역 직원 사무

○ 간사이 광역연합은 초광역적 협력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 광역계획을 수립 및 운용

- 광역계획추진위원회에서 광역계획 달성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검증을 실시하고, 연도별 시책 추진의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 달성상황 및 효과를 파악
- 광역계획과 분야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 계획도 광역계획에 맞추어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

⑤ 예산

○ 간사이 광역연합의 2021년 총 세입은 24억 2,001만 엔

- 분담금 및 부담금이 13억 5,615만 엔(5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억 6,139만 엔(31.5%), 사용료 및 수수료 2억 812만 엔(8.6%) 등으로 구성

○ 간사이 광역연합의 2021년도 총예산액 세출은 24억 2,001만 엔

- 광역의료비가 15억 5,418만 엔(64.2%)으로 가장 지출규모가 컸으며, 기획관리비 3억 6,638만 엔(15.1%), 자격시험·면허비 2억 3,999만 엔(10.0%) 등으로 구성
- 교통분야 지출이 비중이 큰 유럽 사례와 달리, 간사이 광역연합은 없음

〈표 4-4〉 간사이 광역연합의 세입과 세출(2021)

(단위: 천 엔, %)

구분	항목	금액	비율
세입	• 사용료 및 수수료	208,123	8.6
	• 재산운용수입	5	0.0
	• 기부금	1	0.0
	• 예금이자	1	0.0
	• 기타수입	49,929	2.1
	• 전입금	33,410	1.3
	• 이월금	1	0.0
	• 국고보조금	761,389	31.5
	• 국고위탁금	11,000	0.5
	• 지방자치단체 분담금(부담금)	1,356,146	56.0
	총 세입	2,420,005	100.0
세출	• 의회비	16,345	0.7
	• 기획관리비	366,380	15.1
	• 선거비	120	0.0
	• 감사위원비	408	0.0
	• 광재비	23,583	1.0
	• 관광·문화진흥비	92,797	3.8
	• 스포츠진흥비	20,157	0.8
	• 산업진흥비	37,841	1.6
	• 농림수산진흥비	14,867	0.6
	• 의료비	1,554,180	64.2
	• 환경보전비	44,352	1.8
	• 자격시험·면허비	239,987	10.0
	• 광역직원연수비	3,987	0.2
	• 공채비	1	0.0
	• 예비비	5,000	0.2
	총 세출	2,420,005	100

자료 : 간사이 광역연합 홈페이지(<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154.html>)

3. 기본계획 유사해외 사례: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

1)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 분석의 필요성

-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의 계획중 사무처리 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계획은 일본 광역연합의 광역계획
 -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제도는 일본의 광역연합을 크게 참고한 것으로 사무처리 기본계획은 광역연합의 광역계획에 대응
- 사무처리 기본계획은 기관에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적 계획의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광역계획의 대표적 차별적 특성
 -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지역계획은 공간중심 계획으로 (기관 그 자체가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해 구속력을 미침
 - 연합기구(영), 메트로폴(프) 등의 계획은 전형적인 비법정계획
- 본 연구는 간사이 광역연합의 광역계획 사례를 살펴 봄
 - 여러 정책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례는 일본에서도 간사이 광역연합 외에 찾기 어려움
 - 대부분의 광역계획은 사무처리와 관련된 기본 방침을 간략히 제시하는 수준으로, 그나마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이 종합적 관점에서 사무처리의 미래상, 목표, 주요 과제 제시

2)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의 개요

-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은 일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7, 간사이 광역연합 규약 제6조에 따라 수립
- 광역연합의 광역계획은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계획의 원형이 되는 계획으로 사무처리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종합성, 구속성을 지님
- 단, 구속적 성격의 경우, 일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이 더 강도가 높음
 - 일본은 광역연합뿐 아니라 광역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에도 계획에 따른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데(일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7 제4항), 우리나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만 부과
 - 광역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광역계획의 실시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상황의 권고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일본 지방자치법 제291조의7 제6항), 우리나라에서 권고조치에 대한 보고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않음
-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의 계획기간은 3년임
 - 규약은 광역계획에 계획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간사이 광역연합 규약 제6조 제2호), 기간의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음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에 재량을 갖고 판단 가능

○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은 총 4기에 걸쳐 수립되었음

- 1기(2011~2013년), 2기(2014~2016년), 3기(2017~2019년)에 이어 4기(2020~2022년) 계획이 진행중

3)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의 구성과 내용

(1) 계획의 구성

○ 간사이 광역연합의 제4기 광역계획은 개요, 지금까지의 대처 총괄, 광역연합이 목표로 하는 간사이 지역의 미래상, 제4기 광역계획의 대처 방침, 여러 주체와의 연계·협력, 광역계획의 추진 등 6개 장으로 구성

〈표 4-5〉 제4기 간사이 광역연합 기본계획의 구성

장	세부구성	비고
제1장 개관	1. 설립·경과 및 제4기 광역계획 수립취지 2. 광역계획 기간 및 대상구역	수립의 취지 및 규약 요구 사항 기재
제2장 지금까지의 대처 총괄	1. 광역사무 2. 정책의 기획 조정 3. 분권형 사회의 실현 4. 광역연합 설립의 목표 총괄	그간 광역계획 집행 상황 평가
제3장 광역연합이 목표로 하는 간사이 지역의 미래상	1. 기본개념 2. 미래상 3. 미래상 실현을 위한 광역연합의 역할	간사이 전체 수준에서 미래상 및 광역연합의 역할 제시
제4장 제4기 광역계획 (2020 ~ 2022년)의 대처 방침	1. 기본방침 2. 광역사무 3. 정책의 기획·조정 4. 분권형 사회 실현 5. 향후 실시사무 방식	사무분야별 목표, 주요 과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규약의 사무분야 외의 주요 노력 제시
제5장 여러 주체와의 연계·협력	1. 기본방침 2.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3. 주민 등과의 협력	광역연합과 경제계, 대학, 구성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외국, 국제기관, 주민과의 협력 노력을 제시
제6장 광역계획의 추진	1. 기본방침 2. 행정평가 3. 홍보 활동 적극 추진 4. 분야별 계획의 추진 5. 업무개선 추진	광역연합 행정의 성과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제시

(2) 미래상 및 전체 목표

- 광역연합의 사무처리의 전체적인 목표가 파악 가능한 부분은 제3장 광역연합이 목표로 하는 간사이 지역의 미래상(4기 계획 기준)
- 기본방침은 기본사고 방식, 미래상, 광역연합의 역할로 구성됨
- 기본사고 방식은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간사이의 방향성에 가까움

- 미래상은 간사이 광역행정의 사무처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상적으로 기술
 - 내용은 계획기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기보다 장기적 목표에 가까움
 - 그러나 기술된 목표의 동사가 진행형이고(예: 정착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아 중기목표로 활용할 수 있음
- 광역연합의 역할에서는 미래상을 실현을 위해 광역연합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제시
 - 기본방침과 미래상 실현에서 주어진 “간사이”로 간사이 광역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것에 가까움
 - 일본 광역계획은 준수 의무를 광역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부과하기 때문에, 광역계획에 따른 행정주체에 이들 기관이 모두 포함
 - 그런 이유로 기본사고 방식, 미래상과 별개로 광역연합의 역할을 다룬 것으로 판단
- 기본사고 방식, 미래상, 광역연합의 역할이 모두 기술된 것은 3기 계획부터임
 - 1기 계획은 미래상만 다루었으며, 2기 계획부터 기본사고 방식이 추가

〈표 4-6〉 광역계획 시기별 기본사고 방식, 미래상, 광역연합의 역할

구분	기간	기본사고 방식	미래상	광역연합의 역할
1기	2011~2013년	x	① 세계에 열린 경제 거점 간사이 ② 지구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간사이 ③ 국내외에 걸친 관광·문화 교류의 간사이 ④ 위기에 강하고 방재모델이 되는 간사이 ⑤ 의료의 안전·안심 네트워크가 확립된 간사이 ⑥ 사람·물자가 교류하는 아시아 허브기능을 하는 간사이	x
2기	2014~2016년	① 아시아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신(新)수도 간사이 ② 강한 개성을 활력으로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간사이	① 세계에 열린 경제 거점 간사이 ② 지구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간사이 ③ 국내외에 걸친 관광·문화교류의 거점 간사이 ④ 위기에 강하고 방재모델이 되는 간사이 ⑤ 의료의 안전·안심 네트워크가 확립된 간사이 ⑥ 사람·물자교류를 지지하는 기반이 있는 아시아 교류거점 간사이	x
3기	2017~2019년	① 국토의 쌍안구조를 실현하고 분권형 사회를 선도하는 간사이 ② 개성이나 강점과 역사·문화를 살려 지역전체가 발전하는 간사이	① 위기에 강하고, 방재 모델이 되는 간사이 ② 의료의 안전·안심 네트워크가 확립된 간사이 ③ 국내외에 걸친 관광·문화 스포츠 교류거점 간사이 ④ 세계에 열린 경제거점 간사이 ⑤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① 구성단체 대응과 정합성을 고려하며 적극적인 연계로 '간사이창생전략' 실현에 집중 ② 주체 간(광역연합, 국가/구성단체, 권역내시정촌, 경제계/NPO주민)의 힘을 합칠 필요 ③ 해당주체에게 미래상과 그 실현방안을 제시·공유하여 사

구분	기간	기본사고 방식	미래상	광역연합의 역할
		③ 아시아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신(新)수도 간사이	한 사회를 실현하는 간사이 ⑥ 사람·물자·정보가 모이는 세계의 네트워크거점 간사이	업·방안을 효과적으로 묶어,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과제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④ 이를 통해 간사이에 광역행정의 책임주체로 리더십을 발휘
4기	2020~2022년	① 국토의 쌍안구조를 실현하고 분권형 사회를 선도하는 간사이 ② 개성이나 강점과 역사·문화를 살려 지역전체가 발전하는 간사이 ③ 아시아 및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가치 창조거점 간사이	① 위기에 강하고, 방재 모델이 되는 간사이 ② 의료의 안전·안심 네트워크가 확립된 간사이 ③ 국내외에 걸친 관광·문화 스포츠 교류거점 간사이 ④ 세계에 열린 경제거점 간사이 ⑤ 지역환경·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경제·사회의 종합적 개선에 의한 지속가능한 간사이 ⑥ 사람·물자·정보가 집적하는 기반이 있는 세계의 네트워크거점 간사이	① 주체 간(광역연합, 구성단체, 권역내 시정촌, 경제계 및 시민단체, 주민)의 힘을 합칠 필요 ② 광역연합은 이러한 관계자들에게 미래상을 제시·공유하여 간사이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부현(府縣)권역을 넘어 광역연합 특성을 살려 간사이에 대해 광역행정 책임주체로 리더십을 발휘

- 기본사고 방식의 경우 3기부터 ‘국토의 쌍안구조 실현 및 분권형 사회 선도’ 내용이 포함
 - 재난 발생 등 유사시 수도권 기능을 백업할 수 있는 국가의 양대 권역으로서의 위상 강화 의지를 표면화
- 미래상의 경우,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나, 기재 순서에서 변화가 있었음
 - 1, 2기는 ‘세계에 열린 경제 거점 간사이’가 가장 먼저 제시되었으나 3기부터는 ‘위기에 강하고, 방재 모델이 되는 간사이’를 제일 앞서 기술
 - 경제에서 안전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광역연합의 역할은 3기부터 기술되기 시작했는데, 구성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NPO,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조
 - 적극적인 연계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지향성 높은 태도를 갖고 광역행정의 책임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3) 사무분야별 내용

- 사무분야별 목표, 내용, 역할 등은 제4장의 광역사무에 기술(4기 계획 기준)
- 광역계획의 사무 분야는 총 7개임
 - 광역방재
 - 광역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 광역 산업 진흥
 - 광역 의료
 - 광역환경보전
 - 광역 직원 연수

- 자격시험·면허 등

○ 목표, 중점방침, 구성단체 실시사무 순으로 내용 전개

- 목표는 사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상적 상태), 접근 방향을 제시
- 중점방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 제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실질적인 사무별 계획 내용을 담고 있음
- 구성단체 실시사무는 광역사무 수행과 관련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

〈표 4-7〉 4기 광역계획의 사무 분야별 중점방침

분 야		중점방침 제시 과제
광역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광역재해를 상정한 광역적 대응 추진 • 재난 발생시 물자공급의 원활화 추진 • 재난의 방재와 감재(減災) 사업 추진
광역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광역관광 사업 전개로 간사이로 관광객 유치 • 전략적인 프로모션 전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순환율과 체재율 높이는 관광기반 정비 • 간사이 강점을 살린 문화·스포츠 관광 전개 • 관민 일체로 광역연계 DMO 대응 추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이 문화 진흥과 국내외에 매력발신 • 지역연계 교류로 간사이 문화 더 한층 향상 • 간사이 문화의 차세대 계승 • 정보발신·지역연계 교류 지원·인재양성 위한 플랫폼 활용 • 新간사이 문화 진흥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마스터즈 게임 2021 간사이」 개최 지원 • 「생애 스포츠 선진지역 간사이」 실현 • 「스포츠 성지 간사이」 실현 • 「스포츠 투어리즘 선진지역 간사이」 실현
광역산업 진흥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이 우수성 살린 이노베이션 창출환경·기능 강화 • 고부가가치화의 중견·중소기업 등 성장 지원 • 개성 풍부한 지역의 매력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 • 간사이 유능한 인재 확보와 육성
	농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 추진으로 역내소비 확대 • 식문화 해외발신으로 수요확대 • 국내외 농림수산물 판로 확대 • 6차 산업화나 농상공연계 추진 등으로 경쟁력 강화 • 농림수산업을 담당할 인재육성과 확보 • 도시와 교류하여 농산어촌 활성화와 다방면의 기능 보전
광역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구급의료체계의 충실 • 재난 대비 광역의료체제 강화 • 과제해결을 위한 광역의료연계체제 구축
광역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사회 만들기(지구온난화 대책) • 자연공생형 사회 만들기(생물다양성 보전) • 순환형 사회 만들기(자원순환 추진) • 지속가능한 사회 말을 인재육성(환경학습 추진)
자격시험·면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시험·면허 등 사무 지속
광역직원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한 시야 가진 직원 양성 및 업무집행능력 향상 •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해와 인적 네트워크 활용 • 효율적인 연수의 확대

- 사무 분야의 세부영역 간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세부영역별로 목표, 중점방침, 구성단체 실시사무에 관한 내용 기술
 - 광역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광역 산업 진흥 등 2개 사무 분야가 해당
 - 광역 관광·문화·스포츠 진흥은 관광진흥, 문화진흥, 스포츠진흥, 광역 산업 진흥은 산업진흥, 농림 수산업 진흥의 세부영역으로 구분
- 기술 수준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중점방침, 구성단체 실시사무도 구체성이 높지 않고 간략히 기술
 - 통상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과제의 사업을 제시할 때, 사업예산서상의 세부사업(예산서에 기재되는 기초 단위 사업 수준) 수준인 경우가 많으나, 광역계획의 과제는 사업단위로 곧바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
 - 중기계획으로서 광역행정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만을 제시하고, 실제 추진은 집행기관의 행정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성격으로 수립
 - 자격시험·면허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히 구분될 경우, 구체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음

(4) 기타 주요 사항

- 사무 분야별 내용 외에 간사이 광역연합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무, 역할 방향을 간략히 제시
 - 미래상 및 목표, 사무의 주요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중요 주제로 인식해 별도의 장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
- 크게 정책 기획·조정, 분권형 사회의 실현,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지속가능성 확보, 행정성과의 개선 노력으로 살펴볼 수 있음

① 정책 기획·조정

- 정책 기획·조정(제4기 계획기준 제4장)은 광역 인프라, 플라스틱 대책, 에너지 정책, 특구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광역연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기획·조정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
- 특기할 점은 광역 인프라 부문에서 광역교통망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의 방향을 다룸
 - 간사이 광역연합은 교통사무를 수행하지 않아 관련 인력, 예산이 없음
 - 그러나 간사이 광역권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고, 광역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정책 기획·조정 부문에서 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분권형 사회의 실현

- 분권형 사회의 실현(제4기 계획기준 제4장)은 국토의 쌍안 구조 실현, 지방분권 개혁 두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을 살펴 봄

- 국토의 쌍안구조 실현: 정부기관 이전, '방재청(가칭)'의 설치를 위한 제안, 수도 기능 백업 거점, '간사이 창생' 추진에 관한 노력 제시
- 지방분권 개혁: 국가출선기관의 지방이양, 국가 사무, 권한의 이양, 간사이 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노력 제시

③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제4기 계획기준 제4장)은 경제계·대학 등, 시정촌, 연계단체, 국가, 외국, 국제기관, 주민과의 협력 노력을 다루고 있음
 - 주민과의 협력을 강조하는데, 인지도 향상(이벤트, 홈페이지 등 활용), 주민의견 반영(공청회), 광역연합협의회로부터의 의견 청취(여성, 청년위원 확대, 청년세대 의견 교환회 개최 등) 노력 제시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구조적 상황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정책 추진, 공공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므로 특히 주민과의 거리감 완화 노력이 중요한데, 이점에서 의미가 있음

④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 간사이 광역연합 사무 수행과 사회, 환경적 가치의 실현에 중점을 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연계를 강조
 - 간사이 SDGs 플랫폼에 공동사무국으로 참여
 - 중점방침의 과제와 SDGs의 목표 간 관계를 광역계획의 부록으로 제공

⑤ 행정성과의 개선 노력

- 행정성과의 개선노력(제4기 계획기준 제6장 광역계획의 추진)은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룸
 - 행정평가(광역연합 미래상 실현, 연도별 사업 평가·검증 등), 홍보활동의 충실(홈페이지, 뉴스레터, 이벤트 활용 등), 분야별 계획의 추진(분야별 계획 진행상황의 평가 실시 등), 업무 개선 추진(에너지 절약, 에코오피스, ICT를 활용한 업무효율 향상, 민간 노하우 활용 등) 제시

4) 타 계획과의 관계

- 간사이 광역연합은 광역계획 외에 7개 정책 분야별 계획을 수립, 활용
 - 간사이 방재·감재 플랜, 간사이 광역·문화 진흥 계획, 간사이 광역 산업 비전, 간사이 광역 구급 의료 연계 계획, 간사이 광역 환경보전 계획, 간사이 광역 스포츠 진흥 비전, 간사이 광역 농림 수산업 비전임
- 비법정계획으로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자료제공적 계획의 성격의 성격을 지님

- 정책 분야별 계획으로서 광역계획 대비 높은 구체성, 전문적 특징
- 광역계획의 7개 주요 사무 분야 중 5개 사무에서 분야별 계획이 활용되고 있으며, 2개 분야는 미활용
 - 활용분야: 광역방재, 광역관광·문화·스포츠 진흥, 광역산업 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 미활용분야: 자격시험·면허 등, 광역직원연수
- 분야별 계획이 활용되는 분야는 주민에 대한 영향력과 참여 지자체의 관심이 크고, 정책 재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획의 내용에 따른 추구해야 할 미래상의 변화가 큰 영역
- 미활용분야는 행정 효율성 개선, 특히 비용개선에 중점을 둔 분야로서, 사무의 표준화 수준이 높거나(자격시험·면허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관리사무(광역직원 연수)

〈표 4-8〉 간사이 광역연합의 분야별 계획

분 야		분야별 계획	최근 수립연도*
광역방재		총칙	2017년
		지진·쓰나미 재해	2020년
		원자력 재해	2019년
		풍수해 대책	2020년
		신형 인플루엔자 등	2014년
		가축 전염병	2021년
광역 관광·문화· 스포츠 진흥	관광	간사이 광역 문화 진흥 계획	2018년(2018~2021년)
	문화		
	스포츠	간사이 광역 스포츠 진흥 비전	2016년
광역산업 진흥	산업	간사이 광역 산업 비전	2019년
	농림	간사이 광역 농림 수산업 비전	2013년
광역의료		간사이 광역 구급 의료 연계 계획	2021년(2021~2023년)
광역환경보전		간사이 광역 환경보전 계획	2020년(2020~2022년)
자격시험·면허 등		X	X
광역직원연수		X	X

* ()안의 기간은 최근수립연도 계획의 계획기간, ()안 기간 미표기 계획은 계획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계획

- 복수의 분야별 계획을 활용하는 사무 분야도 일부 있는데, 망라하는 세부사무의 범위가 크고, 세부사무 간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임
 - 광역관광·문화·스포츠 진흥분야의 경우, 관광, 문화 두 분야는 간사이 광역 문화 진흥 계획, 스포츠는 간사이 광역 스포츠 진흥 비전을 활용
 - 광역산업진흥의 경우, 산업(2·3차 산업이 대상)은 간사이 광역 산업 비전, 농림업은 간사이 광역 농림 수산업 비전을 활용
 - 광역방재는 간사이 방재·감제 플랜을 활용하는데, 해당 플랜을 구성하는 6개 영역이 개별적으

로 수립 과정이 진행

- 계획기간을 정한 계획은 3개 계획으로 간사이 광역 문화 진흥 계획, 간사이 광역 구급 의료 연계 계획, 간사이 광역 환경 보전 계획임
 - 계획기간의 주기는 모두 3년으로 광역계획과 같음
 - 최근 수립 계획의 계획기간이 제4기 광역계획(2020~2022년)과 일치하는 분야별 계획은 간사이 광역 환경 보전계획뿐으로, 광역계획 대비 간사이 광역 구급 의료 연계 계획은 1년, 간사이 광역 문화 진흥 계획은 2년 늦게 수립
- 가장 최근 계획인 2018~2021년 간사이 관광 문화 진흥 계획의 예를 살펴보면, ‘아시아 문화관광수도 간사이’를 미래상으로 제시하면서, 총 7개 테마 35개 세부전략을 제시
 - 최근 계획 직전에 수립된 3기 광역계획의 관광, 문화 분야 중점방침이 각각 5개이고, 내용이 간략함을 감안하면, 양적으로 우위

〈표 4-9〉 간사이 관광 문화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2018~2021년)

기본방침·미래상·목표	세부전략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제관광 없이 간사이의 발전은 없다. ② 문화관광자원의 보고(寶庫)로 강점을 살린다. ③ 간사이의 팬을 만든다. ④ 문화예술 계승·창조를 통해 관광을 진흥한다. ⑤ 간사이는 하나가 되어 국제관광진흥과 문화진흥에 힘쓴다. 	테마 1. 국제 경기 대회 등을 토대로 한 관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② 문화 프로그램의 추진 ③ 스포츠 투어리즘의 추진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문화관광수도 간사이”의 지위확립 	테마 2. 문화력 향상과 문화관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로 문화수도 간사이의 발신 ② 문화력 향상 ③ 역사 관광 루트 개발 ④ 문화적 가치의 재발견 등에 따른 관광 자원화 추진 ⑤ 문화재 등 관광자원화 강화 ⑥ 발신력 강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업(UP), 관광력, 체제력 업(UP) 	테마 3.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여 인프라 정비 충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광인프라 추가 정비 ② 간사이 국제공항 매력도 향상 ③ 현대·편의성 향상 ④ 안심·안전 확보 ⑤ 새로운 게이트웨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 ⑥ 숙박시설 부족 대응 ⑦ 신기술 활용 ⑧ 규제개혁·권한이양 등
	테마 4. 간사이의 또 다른 인지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적 수준의 광역관광 주유 루트 추진 ② 간사이 전체의 고유 매력을 세계에 발신 ③ 간사이 국제관광의 해 전개 ④ 관광수요의 창출과 전개 ⑤ 새로운 시장 대응
	테마 5. 여행소비 확대를 위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인당 여행 소비액 상승 ② 결제환경 정비

기본방침·미래상·목표	세부전략
	<p>테마 6. 간사이 관광본부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제 확립</p> <p>① 간사이관광본부에 의한 경영 ② 마켓 창출 ③ 문화 친화적 기획의 충실 ④ 국가·지역별 유객 전략 추진 ⑤ 간사이 웹 전략</p> <p>테마 7. 향후 전개</p> <p>① 특정 복합 관광 시설 제도 ② 2025년 세계엑스포와의 제휴 ③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대응 지속 ④ 차세대 프로듀서 육성 ⑤ 교육기관과의 제휴 ⑥ 통역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육성</p>

- 내용상으로도 광역계획의 중점방침이 큰 카테고리의 사업 단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포괄성, 추상성을 보여주는 반면, 분야별 계획의 세부전략 내용은 사업 단위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임
- 한 예로 KANSAI ONE PASS¹³⁾와 KANSAI Wi-Fi¹⁴⁾의 경우, 광역계획의 중점 방침에서는 관광기반으로만 소개되고 내용도 한 문장의 일부를 차지하는 선에 그치나, 분야별 계획인 관광 문화 진흥 계획에서는 독립된 세부전략으로 구성되어, 수단별 활용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KANSAI ONE PASS: 이용가능 노선, 전자 화폐 기능의 확대
- KANSAI Wi-Fi: 와이파이 스팟 확대, 간사이 외 지역의 연계

〈표 4-10〉 광역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비교

구분	광역계획(3기, 2017~2019년)	분야별 계획 (광역 관광 문화 진흥계획2018~2021년)
분류	관광 5. 관민 일체의 광역 연계 DMO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테마 III.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충실화 • 세부전략: 관광 인프라의 추가정비
내용	KANSAI ONE PASS나 KANSAI Free Wi-Fi 등의 관광기반을 한층 정비·확충하는 것 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NSAI ONE PASS의 이용 가능 노선, 전자 화폐 기능 확대를 통해 서비스 내용의 향상을 도모한다. • KANSAI Wi-Fi의 경우, Wi-Fi 스팟수를 늘리고, 간사이 이외의 지역과의 제휴를 진행하는 등,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13) 간사이 지역 주요 철도 및 교통기관의 통합이용이 가능한 IC카드형 승차권

14) 간사이 지역 관광지 등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4.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의 시사점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 사례는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추진 준비에서 활용중
 -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제도는 일본의 광역연합 관련 제도에 기초
 - 부울경 3개 시·도와 관계부처간 2022년 4월 19일 체결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는 영국의 City deal, Devolution deal을 참고한 것으로 특히 중앙정부와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간 관련 사례가 관심을 받음
- 사무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으로의 귀결에 초점을 두고, 3가지 시사점을 도출
 - 지역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경제생활권 실현 노력 중요
 - 행정 성과 개선 관심 필요
- ① 지역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지역 위기 극복, 지속적 성장, 도약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자체간 협력기구를 설치, 도입
 - 슈투트가르트, 맨체스터, 간사이 지역이 지자체 간 광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당시 처한 상황은 부울경의 현재 상황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노력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음
 - 초광역협력에 대한 신증론 혹은 회의론은 현재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설치 동기 중 하나는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인데, 1990년 초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지역경제 침체를 겪었던 것과 관련
 - 1990~1995년 사이의 고용감소를 직장사회보험가입자 감소추이로 살펴보면, 슈투트가르트는 9%가 감소하였으며, 뱀링엔, 에쓰링엔, 괴핑엔 등 주요 지자체도 각각 7%, 4%, 5% 감소
 - 그러나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독 흡수통합(독일통일)이라는 세계사적 대사건의 충격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슈투트가르트 지역만이 겪은 문제는 아니었음
 -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유럽연합 경제권역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위상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 오히려 굳건한 국제적 위상이 유럽연합 차원의 경제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제기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압박한 측면이 있음
 - 간사이 광역연합을 설치한 간사이 지역도 수도권 집중 심화와 그에 따른 지역정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다고 하나,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부울경권에 비할 수준은 아님
 - 일본도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고 하나, 일본 수도권(1도 7현) GRDP의 국내 점유율은 2014년

기준 38.8%(1조 9403억 달러)로 과반 상태를 넘어선 우리나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간사이 광역연합 관할지역(2부 5현)의 GRDP는 2014년 7,956억 달러(15.9% 점유)로 당시 사우디아라비아(7,564억 달러 19위), 스위스(7,093억 달러, 20위) GDP보다 높았으며, 한국 GDP(1조 4,113억 달러)의 56.4%에 달하는 수준¹⁵⁾

- 간사이권은 일본 수도권에 뒤질 뿐, 첨단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비디오 게임 회사인 닌텐도(교토부 교토시), 일본 최대이자 세계9위의 제약회사인 다케다(오사카부 오사카시), IT 기업 교세라(교토부 교토시), 전자기업 파나소닉(오사카부 카도마시) 등이 소재
- 부울경권 대기업중 상당수가 명목상 법인소재지만 부울경 지역으로 하고, 실질적인 경영, R&D 중추 기능이 수도권에서 작동하는 것과 달리¹⁶⁾, 위 기업의 본사 기능은 간사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간사이권 주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높은 편
 - 권역내 교토대학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쿄대학에 비해 노벨상 과학분야 수상자 수가 더 많음(교토대 7명, 도쿄대 5명)
 - 역내 최대도시에 소재한 오사카대학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해당 대학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2명임

② 경제생활권 실현 노력 중요

- 단일한 경제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가 교통 사무를 우선적으로 책임질수록, 재정규모도 더 크고, 행정적 뒷받침도 더 잘 되어 있는 등 협력 수준이 높음
- 교통망 확충, 관리는 공간의 압축을 통해 도시지역권내 연계 수준을 단일도시 수준으로 심화시켜 경제생활 공동체화하는 핵심사무로서, 살펴본 유럽 사례에서는 교통 사무 비중이 큼
 - 살펴본 바와 같이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은 전체 예산의 90%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2022년),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는 12.8%(경찰예산 제외 2위),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은 21.3%(2위)를 지출
 - 반면 간사이 광역연합은 교통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 관련 예산, 인력이 없음
- 교통사무를 수행하는 협력기구의 재정규모가 그렇지 않는 기구보다 더 큼
 - 세출예산 기준 한화로 환산하면,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3조 1,700억 원대(19.6억 파운드),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 1조 800억 원대(8억 유로),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9,900억 원대(7.3억 유로)인 반면, 간사이 광역연합은 250억 원대(24.2억 엔)
 - 프랑스에서 관할 인구가 가장 작은 메트로폴은 브레스트 메트로폴로 인구가 21만으로 간사이 광역연합의 1/100에도 못 미치나 예산은 4,300억 원대(3.2억 유로, 2021년 기준)로 간사이 광역연합의 17배가 넘음

15) 비교대상 국가 GDP는 세계은행 통계 인용

16) 르노코리아자동차(구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부산이지만, 경영기능은 서울사무소, R&D는 용인의 중앙연구소에서 맡고 있음

- 간사이 광역연합이 유럽 사례와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통 사무의 배제는 실질적 연계협력 효과를 제약
 - 간사이 광역연합은 대규모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으로서 중주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계 수준이 상당하고, 이해관계의 일치수준도 높아 통합적 교통사무 수행이 용이한 기초지자체 간 협력중심의 유럽 사례와는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간 사무를 배제해 협력사무의 범위가 지역의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불가피
 - 핵심인프라 투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협력기구에서 수행함으로써, 도시지역권 거버넌스에서 협력기구가 정책 주도권을 행사할 기반 마련
 - 지역경제 재도약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에 지역 간 협력의 초점이 있다면, 경제생활권 실현의 핵심 사무인 교통 관련 사무를 협력기구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부울경 특별연합은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간의 압축을 추진할 의사가 확고한 만큼, 초광역 수준의 실질적 교통사무 수행을 위한 권한, 재정의 충분한 확보 노력이 중요
- ③ 행정 성과 개선 관심 필요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사업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
 - 기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만큼, 협력기구의 조직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의 행정조직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니스시 조직을 활용, 사무겸무 방식을 취함
 - 간사이 광역연합의 사무국도 사무겸무 방식을 통해, 사무를 맡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서 자기 지자체 사무와 간사이 광역연합 사무를 함께 처리
 - 간사이 광역연합은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사무를 이양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의 슬림화, 효율화를 목표로 함(간사이 광역연합 홈페이지, 설립 목적)
 - 사무국 설치에서도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는데(간사이 광역연합 홈페이지), 이미 살펴본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연합 사무 겸무가 그 예
 - 각종 업무 개선 추진 방안의 활용 노력(예: 에너지 절약, 에코오피스, ICT활용한 업무효율 향상, 민간 노하우 활용 등)
 - 영국 연합기구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심을 둔 국가 차원의 행정 효율성, 성과 개선 의지가 연합기구의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침
 - 자율성을 보장하되, 자기책임성 실현을 요구
 - 2018년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가 주택건설목표를 축소하자, 중앙정부는 지원했던 6,800만 파운드를 회수(정준호, 2021: 12)

2) 광역계획의 시사점

-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 사례의 시사점은 광역계획의 성격,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논리,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새로운 가치의 제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① 가치·방향성의 제안 중점

-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계획은 종합성을 지니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광역연합이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는데, 광역연합뿐 아니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적 계획만큼 행정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가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 제시에 대한 준수 의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계획의 가치, 방향성과 충돌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에 언급되지 않는 정책, 사업을 계획의 제시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임
 - 구체성 담보된 분야별 계획의 활용을 통해, 광역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접근

② 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교한 논리 확보

-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를 활용한 정교한 논리를 토대로 분권, 균형발전 강조
 - 간사이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우선이 국가 전체의 이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인구 감소, 활력 감소 등의 전통적 문제제기 외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난 관련 대응 논리를 마련
 - 수도권 대지진과 같은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중추기능이 마비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사이 지역이 수도 기능의 백업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임(간사이 광역연합 제4기 광역계획, 11)
 - 국토의 쌍안(雙眼) 구조 실현은 부울경권의 국토 양대축, 제2수도권 논리와 비슷하나 근거의 확보에서 단순히 지역의 경제사회적 규모, 고도화 수준의 양적 우위에 그치지 않고, 재난 대응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를 활용

③ 새로운 가치의 강조

- 수평적 연계·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등 거버넌스, 개발 등에서 새로운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 경제계, 대학,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협력, SDGs 실현 노력 등을 강조
 -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연합, 혹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자간 수평적 연계·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운용이 중요함을 인지
 - 양적, 물적 성장 가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환경,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요시해 지속가능한 초광역권 발전을 추구

제 5 장

기본계획 수립의 종합분석과 총괄적 구상

05

기본계획 수립의
종합분석과
총괄적 구상

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분석

1) 분석개요

-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적실성 제고를 위해 특별연합의 자체 역량, 외부 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진행, 분석결과에 기초해 기본계획 구상 부분(미래상, 핵심역할(미션), 계획기간중 총괄목표, 핵심가치 등), 과제별 처리계획 수립, 추가 과제 도출에 활용
- SWOT 분석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활용
 - SWOT분석: 부울경 특별연합의 내부 요인(강점, 약점)과 외부 요인(기회, 위협) 분석 결과와 분석결과에 따른 네 가지 전략(강점-기회(SO) 전략, 강점-위협(ST) 전략, 약점-기회(WO) 전략, 약점-위협(WT) 전략)은 기본계획 구상 부분 수립에 기여
 - 전문가 델파이조사: 특별연합의 협력과제를 9개 사무 분야로 묶어 사무분야별 진단을 진행, 결과는 초광역협력 과제별 처리계획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
 - 동시에 진행된 기본계획 구상 부문 및 추가 노력 필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기본계획 구상 및 성공적인 초광역협력을 위한 과제에서 활용

2) 특별연합 SWOT 분석

(1) 분석방법 및 결과

- 부울경 특별연합의 내·외부 요인에 관한 SWOT분석을 진행
 - 출범 초기기간(2023~2027년), 부울경 특별연합의 내부 요인(강점, 약점), 외부 요인(기회, 위협)을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① 상당 수준의 산업 연계, 인적·물적 교류 ② 2위 규모(인구, GRDP 기준)의 초광역권 ③ 글로벌 수준의 중화학 공업 기반 ④ 높은 항만, 물류 경쟁력 ⑤ 특별연합의 선도적 준비에 따른 초광역협력 경험, 역량의 상대적 우위	① 광역교통망 미흡에 따른 이동불편 ② 첨단 미래먹거리 산업 역량 부족, 지역인재 유출 심화 ③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지역내 일부 부정적 여론, 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이해 부족 ④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자원 부족 ⑤ 자원 배분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① 정부의 공식적인 초광역협력 지원 의지 ② 메가 이벤트(엑스포 유치), 메가 인프라(가덕도 신공항, 신항) 프로젝트와 연계 ③ 수도권 집중의 심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감과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긍정적 관심(연대, 공동협력 가능성) ④ 자원, 관심을 분점할 만큼 추진 의지, 진도를 보이는 타 (초)광역권 부재	① 청년실업, 부동산 폭등 등 중요 이슈 대비 낮은 관심, 회의감 ② 지방의 재정, 사무 권한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제도적 한계 ③ 수도권 집중, 일극화의 공고화 지속에 대한 체념, 피로감 ④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우려와 비판(집권화, 주민·민간 부문 소외)

〈그림 5-1〉 부울경 특별연합의 SWOT 분석 결과

(2) 분석결과에 따른 전략

○ SWOT분석 결과에 기초한 네 가지 전략 제안

- 강점-기회(SO) 전략: 기회를 활용하여 강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
- 강점-위협(ST) 전략: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
- 약점-기회(WO) 전략: 기회를 활용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 약점-위협(WT) 전략: 약점을 최소화하고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① 강점-기회(SO) 전략

- 초광역발전의 긍정적 기회를 특별연합의 성공적 정책추진과 운영기반 조기 안정화에 활용
 - 메가시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중앙정부의 초광역 발전지원 의지, 메가이벤트 및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초광역경제생활권으로서의 역량 우위, 잠재 경쟁력 극대화에 높은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과제를 추진해 특별연합의 운영 기반을 조기에 안정화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초광역발전은 초기단계로서 부울경이 다른 광역권대비 선제적으로 발전을 위한 각종 투자,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회의 우위가 있는데, 이는 타 광역권의 특별지자체 설치 노력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시간적 제한이 있는만큼 적시에 활용할 필요

② 강점-위협(ST) 전략

- 국가의 양대축으로서 부울경이 지닌 높은 성장잠재력과 기대효과로 초광역연합에 대한 우려를 불식
 - 부울경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양대축으로 수도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2수도권으로서의 잠재력과 기대효과가 큰 지역임을 설득, 수도권 집중, 일극화와 공고화의 지속에 대한 사회적 무력감을 쇄신
 -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청년실업, 부동산 폭등과 같은 사회 주요 현안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과제임을 강조

③ 약점-기회(WO) 전략

- 초광역발전의 긍정적 기회를 지역적 약점의 극복과 이를 통한 친환경 첨단산업으로의 성공적 고도화에 적극 활용
 - 중앙정부의 초광역 발전지원 의지 등 긍정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특별연합이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추진하며, 첨단 미래 산업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광역 인재·산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 정부지원 등 우호적 기회를 적극 활용,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내 일부 부정적 여론, 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등 문제를 해소
 -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다른 지역의 긍정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시·도, 초광역권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무이양, 재정이양을 확보: 초기단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연합 행정자원 수준 제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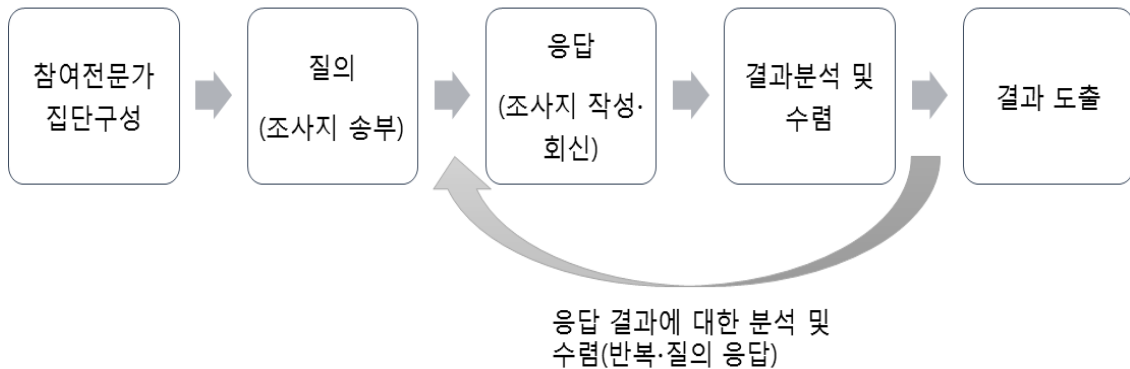
④ 약점-위협(WT) 전략

-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다양한 지역주체와 함께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해 지역 간 갈등 문제를 극복
 -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사회단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집권화, 소외 논란을 해소하고 정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강화
 -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메가시티의 전략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 간 갈등,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최소화

2. 전문가 델파이 분석

1) 조사분석 개요

- 특별연합의 초광역 사무 및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분석을 진행
 - 전문가 패널을 활용, 체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서, 익명의 반복적 피드백을 거친 의견수렴을 특징으로 함
- 델파이조사 진행 과정
 - 조사 참여 전문가는 1차 조사지를 작성해 연구진에게 제출하면, 1차 조사지 물음의 전체 통계 값과 다른 전문가 의견 전체를 회신받게 됨
 - 이를 검토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2차 조사지를 작성(1회 반복)



자료: 이장욱 외(2020), p13. 일부수정

〈그림 5-2〉 델파이조사 진행 절차

- 본 조사에서 참여 전문가는 조사 착수시점까지 발굴된 초광역 협력사무¹⁷⁾를 9개 사무분야로 묶어 사무분야별 포괄성, 준비 수준, 기여 수준, 공동협력 효과성, 상대적 우선순위 등을 진단

17) 2022. 1. 시점으로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사무는 이후 포함

〈표 5-1〉 사무분야별 초광역협력과제

사무 분야	과제
1.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철도망 구축 초광역 도로망 구축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2. 경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탄소중립 기반 구축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초광역 공동투자 유치 체계 구축
3.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물류 체계 구축
4. 인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5.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문화·관광 체계 구축
6. 먹거리(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7.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8.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재난 대응 체계 구축
9.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5명으로 관계 분야 전문연구자들임
 - 전문성 위주로 섭외하되, 3개 시·도 인원을 동등하게 지역 안배
- 지역기관은 부산, 울산, 경남 각 6명이며 지역 외 기관은 7명
 - 지역기관은 부울경 지역 지자체 출연기관, 지역 소재대학, 지역 기반 민간단체임
 - 지역 외 기관은 중앙정부 관할 출연연구기관(소재지 무관, 출연주체 기준)과 부울경 지역 외 지자체 출연 기관임

〈표 5-2〉 참여 전문가의 지역별 소속기관

(기관명: 가나다순)

부울경 지역기관(18명)			지역 외 기관(7명)
부산(6명)	울산(6명)	경남(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연구원 신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대학교 경남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지방분권경남연대 창원대학교 창원시정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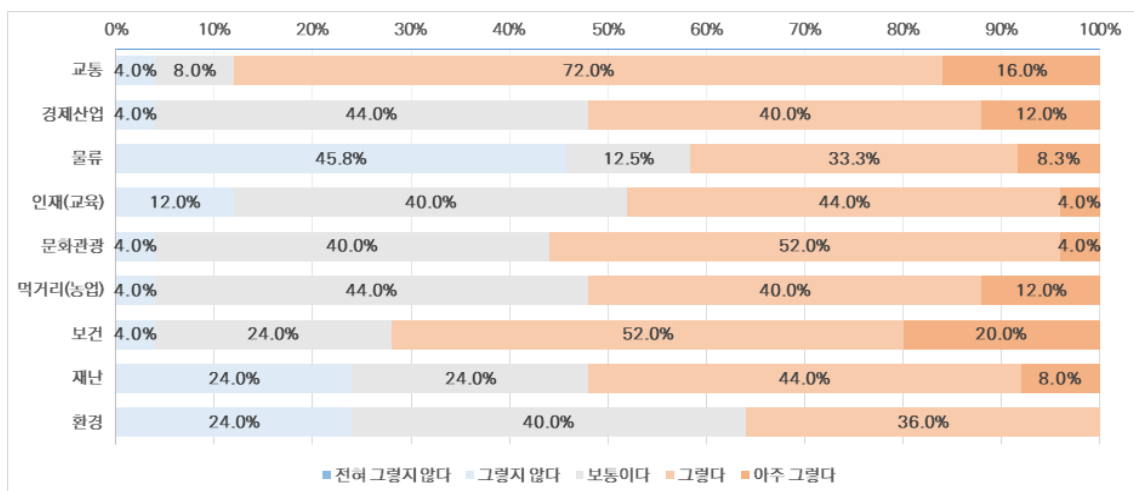
2) 조사분석결과

(1) 사무분야의 포괄성

- 사무분야의 포괄성 제시된 사무분야가 해당 분야 사무 관련 정책 대상, 영역을 충분히 포괄하는지를 의미
- 전문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 분야(4.00)의 포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3.88), 경제·산업, 먹거리(농업) (3.60) 순임
 - 긍정응답 기준으로는 교통(88.0%), 보건(72.0%), 문화관광(60.0%) 순임
- 포괄성 수준은 제시된 모든 사무분야가 보통 수준(3.0점) 이상으로 나타남
-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 사무분야로 인식되는 교통, 경제·산업 외에 보건, 먹거리(농업)의 포괄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비핵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 종합적 수준의 초광역협력 추진에 긍정적 기여가 가능한 부분

〈표 5-3〉 사무분야의 포괄성에 대한 응답결과

사무 분야	평균(5점 만점)	표준편차
교통	4.00	0.645
경제·산업	3.60	0.764
물류	3.04	1.083
인재(교육)	3.40	0.764
문화·관광	3.56	0.651
먹거리(농업)	3.60	0.764
보건	3.88	0.781
재난	3.36	0.952
환경	3.08	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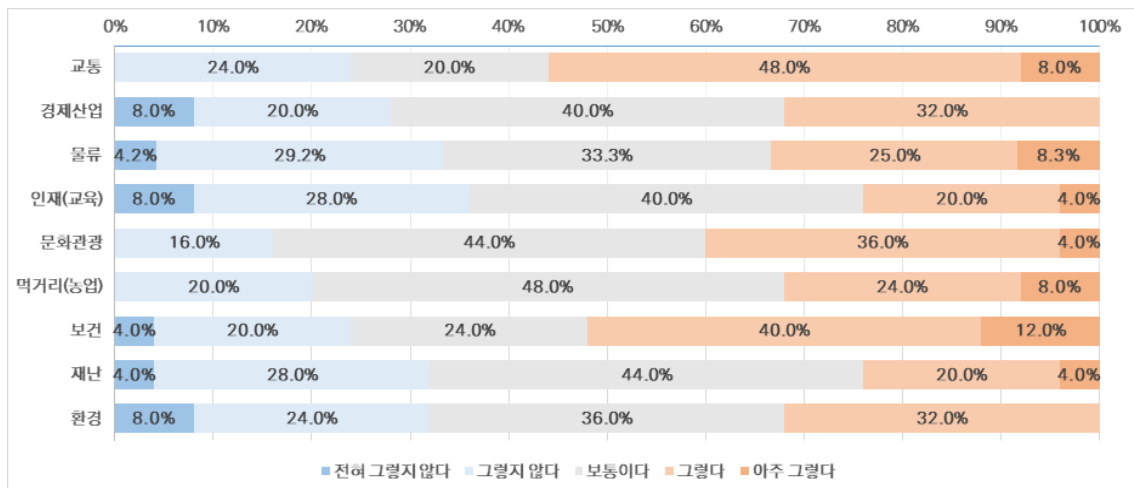
〈그림 5-3〉 사무분야의 포괄성에 대한 응답결과

(2) 사무분야의 준비 수준

- 사무분야의 준비 수준은 사무분야별 발굴 사무와 관련 사업의 준비 정도를 의미
- 전문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 분야(3.40)의 준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3.36), 문화·관광 (3.28) 순임
 - 긍정 응답 기준으로는 교통(56%), 보건(52.%), 문화관광(40.0%) 순임
- 인재(교육), 환경(각 2.84), 재난(2.92), 경제·산업(2.96) 등 3개 분야는 중간점수인 3.0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4〉 사무분야의 준비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사무 분야	평균(5점 만점)	표준편차
교통	3.40	0.957
경제·산업	2.96	0.935
물류	3.04	1.042
인재(교육)	2.84	0.987
문화·관광	3.28	0.792
먹거리(농업)	3.20	0.866
보건	3.36	1.075
재난	2.92	0.909
환경	2.88	0.971



〈그림 5-4〉 사무분야의 준비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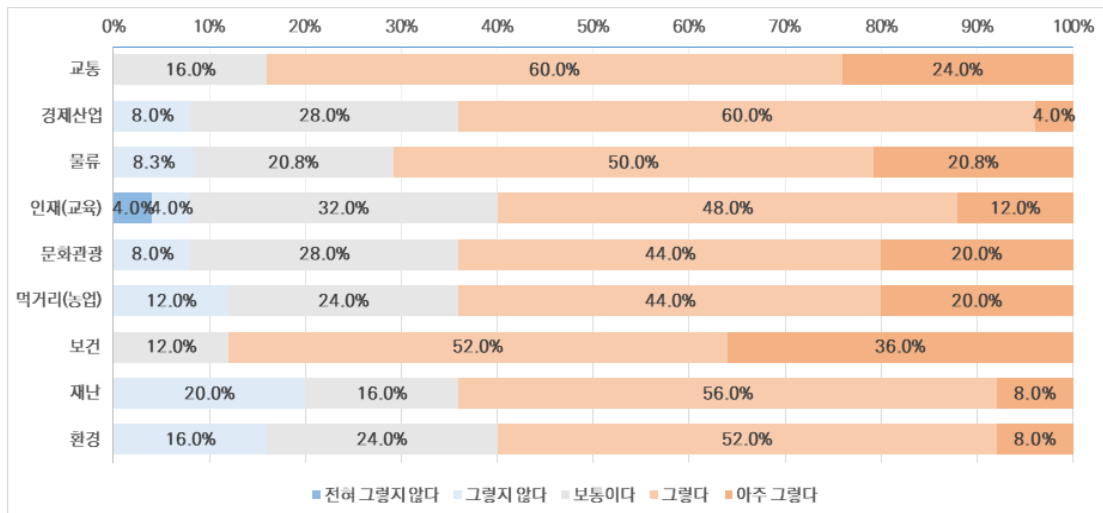
(3) 사무분야의 정체성 기여 수준

- 사무분야의 정체성 기여 수준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분야의 구성 사무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메가시티의 전략적 정체성 실현에 기여하는 수준을 의미

- 전문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 분야(4.24)의 기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통(4.08), 물류 (3.83) 순임
 - 긍정응답 기준으로는 보건(88.0%), 교통(84.0%), 물류(70.8%) 순임
- 정체성 기여 수준은 제시된 모든 사무분야가 상당 수준(3.5점) 이상으로 나타남

〈표 5-5〉 사무분야의 정체성 기여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사무 분야	평균(5점 만점)	표준편차
교통	4.08	0.640
경제·산업	3.60	0.707
물류	3.83	0.868
인재(교육)	3.60	0.913
문화·관광	3.76	0.879
먹거리(농업)	3.72	0.936
보건	4.24	0.663
재난	3.52	0.918
환경	3.52	0.872



〈그림 5-5〉 사무분야의 정체성 기여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4) 사무분야의 공동협력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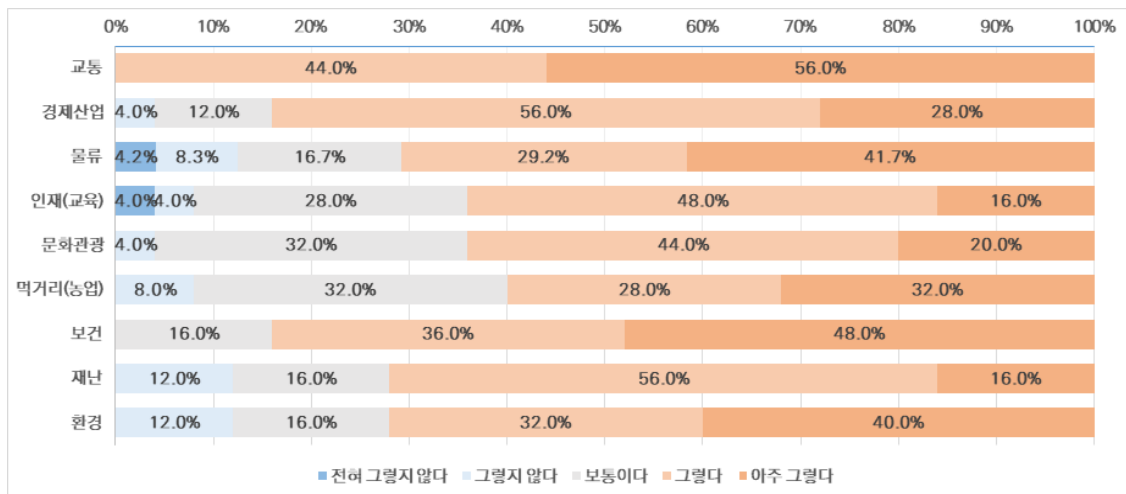
- 사무분야의 공동협력 효과성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경우의 효과성 수준을 의미
- 전문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 분야(4.56)의 기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4.32), 경제·산업(4.08) 순임

- 긍정응답 기준으로는 교통(100.0%), 보건, 경제산업(각 84.0%이나 아주 그렇다 응답이 보건 분야가 경제산업 분야보다 20.0%p 높음) 순임

○ 공동협력 효과성 수준은 제시된 모든 사무분야가 상당 수준(3.5점) 이상으로 나타남

〈표 5-6〉 사무분야의 공동협력 효과성에 대한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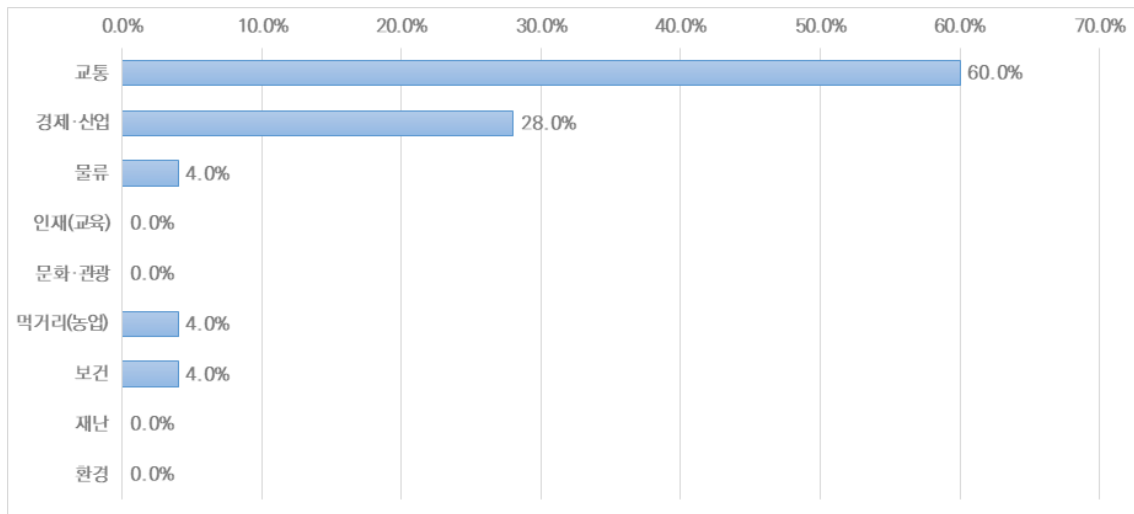
사무 분야	평균(5점 만점)	표준편차
교통	4.56	0.507
경제·산업	4.08	0.759
물류	3.96	1.160
인재(교육)	3.68	0.945
문화·관광	3.80	0.816
먹거리(농업)	3.84	0.987
보건	4.32	0.748
재난	3.76	0.879
환경	4.00	1.041



〈그림 5-6〉 사무분야의 공동협력 효과성에 대한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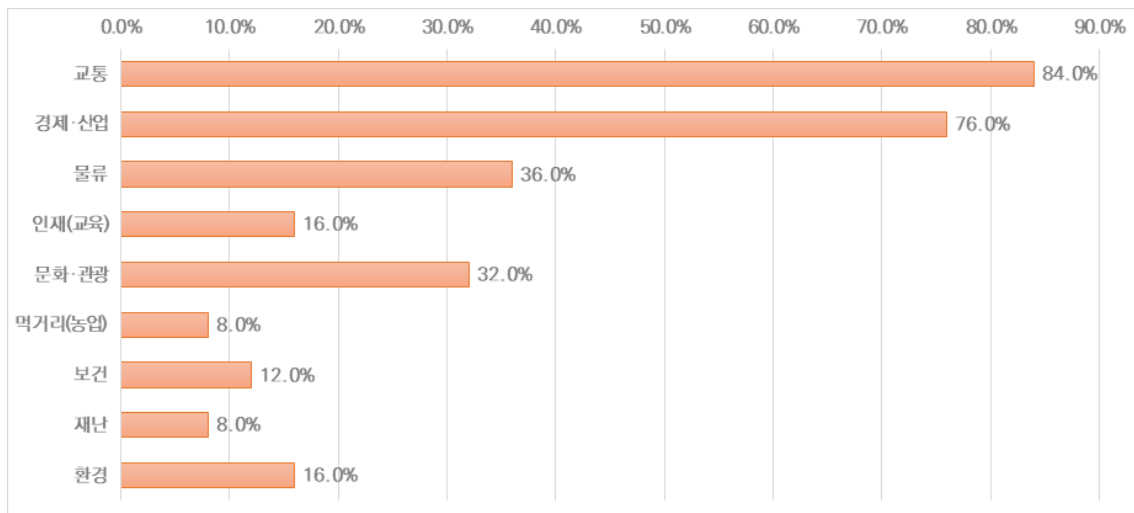
(5) 처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큰 사무

-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처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큰 사무를 묻는 물음에 대해 1순위 기준으로 교통(60.0%), 경제·산업(28.0%), 보건, 먹거리(농업) (각 4.0%) 순으로 응답



〈그림 5-7〉 필요성과 중요성이 큰 사무(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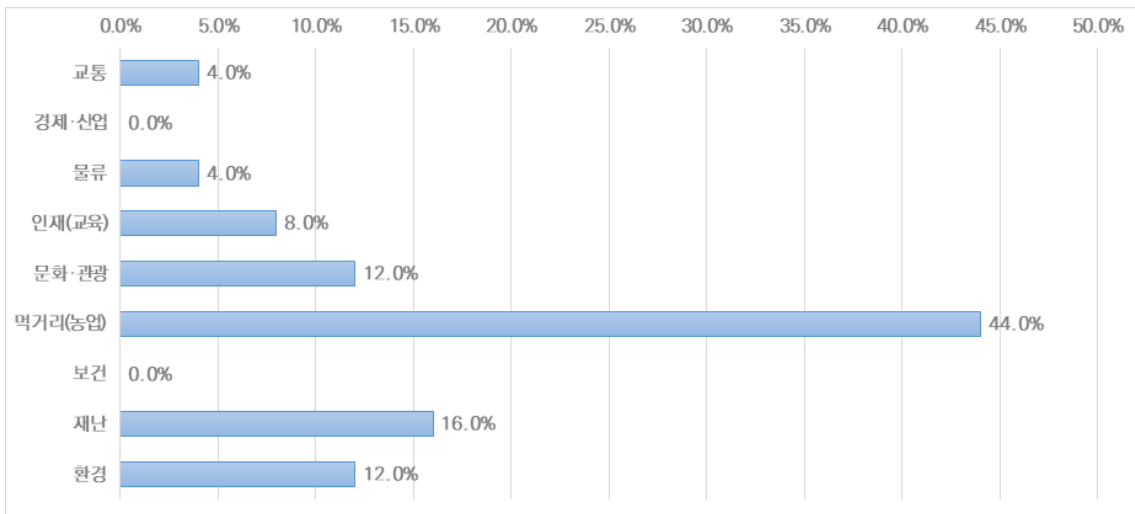
- 1~3순위 기준으로 교통(84.0%), 경제·산업(76.0%), 물류(36.0%) 순으로 높게 나타남
-메가시티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통적 분야가 강세를 보임



〈그림 5-8〉 필요성과 중요성이 큰 사무(1~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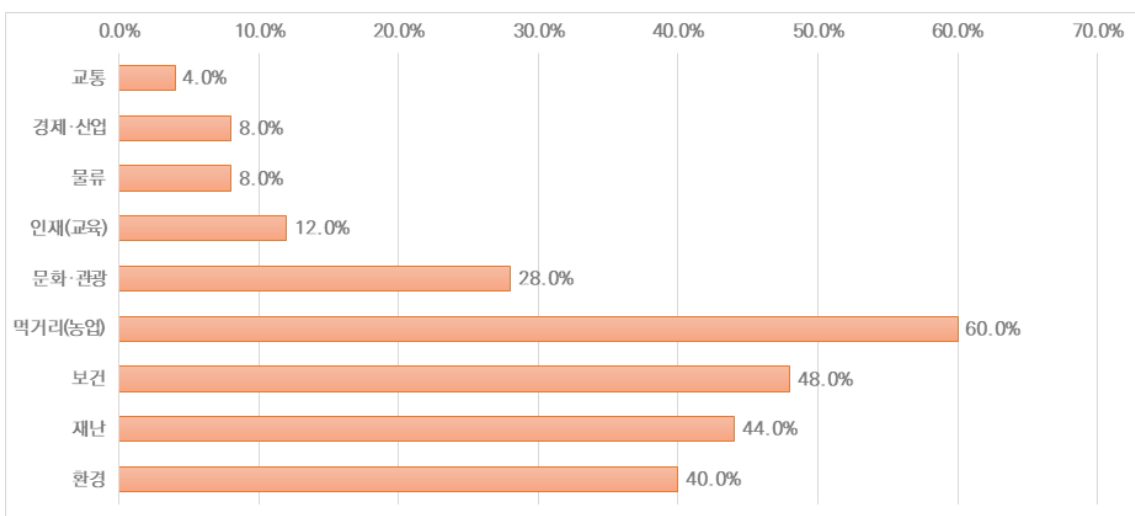
(6) 처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무

-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처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무를 묻는 물음에 대해 1순위 기준으로 먹거리(농업)(44.0%), 재난(16.0%), 문화·관광, 환경(각 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5-9〉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무(1순위)

- 1~3순위 기준으로 먹거리(농업)(60.0%), 보건(48.0%), 재난(44.0%) 순으로 나타남
- 먹거리, 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가 진단은 비교적 긍정적이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무로 주된 응답을 받았다는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먹거리 분야는 포괄성 수준에서 순위권 내에 들고 정체성 기여 수준, 공동협력 효과성 수준의 응답결과는 긍정적이나 필요성과 중요성의 상대적 순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
 - 보건 분야는 포괄성 수준, 준비 수준, 정체성 기여 수준, 공동협력 효과성 수준 모두에서 순위권 내의 긍정응답을 받았음에도 상대적 순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먹거리 분야의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과 보건 분야의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뒷받침할 정교한 논리 확보가 필요



〈그림 5-10〉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무(1~3순위)

3) 조사이후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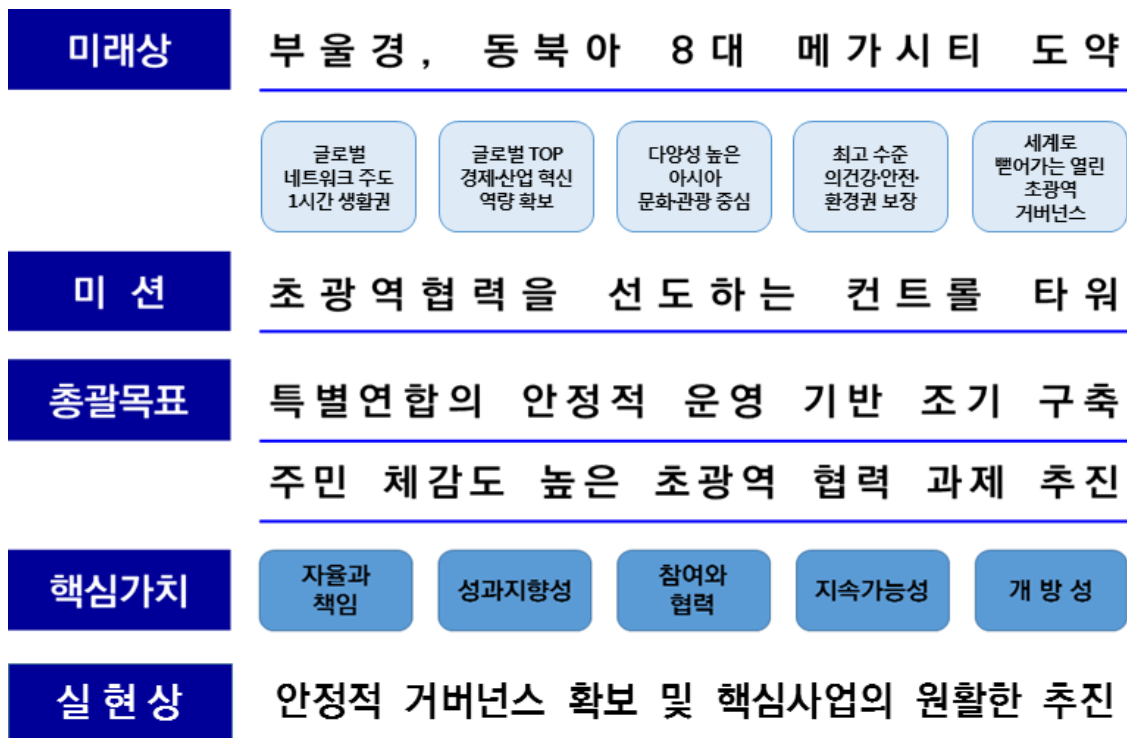
- 부울경 특별연합의 소관 사무로 경제·산업 분야의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2개 사무가 추가되었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경제·산업 분야는 필요성, 중요성, 공동협력 효과성 등이 높게 평가되면서도 준비 수준에 대한 인식은 타 분야에 못 미쳤는데, 해당 분야 사무의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로 준비 수준의 향상이 기대
- 신규 추가 사무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제기
 - 광역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울산지역 전문가), 경남 KAI(Korea Aerospace Industries, 한국항공우주산업)와 가덕도신공항 등의 지역 기반을 활용해 항공산업을 광역으로 묶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부산지역 전문가)

3. 기본계획의 총괄구상

1) 구상 개요

- 기본계획의 총괄구상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총괄적, 전체적 지향성을 제시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6조에 따른 특별연합의 사무별 처리계획(제6장), 성공적 협력을 위한 과제(제7장)의 근간이 되는 핵심영역
- 기본계획 총괄구상의 주요 항목
 - 미래상: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처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부울경의 미래상
 - 미션: 초광역협력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부여된 핵심적 역할
 - 총괄목표: 미래상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2023~2027년, 5년)중 총괄적으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상적 상태
 - 핵심가치: 계획기간(2023~2027년, 5년) 중 목표 달성을 위한 사무처리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 계획추진의 실현상: 계획(2023~2027년, 5년) 중 이루고자 하는 부울경의 실현상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사무처리 기본계획에 관한 법·제도, 지역현황, 협력사례분석, SWOT분석, 전문가 자문의견¹⁸⁾ 등 다양한 방법, 접근을 활용에 기초하여 타당성, 적실성 높은 구상 도출 노력
- 기본계획의 총괄구상을 요약하면 <그림 5-11>과 같음

18) 델파이 조사의 전문가 25인과 같음



〈그림 5-11〉 기본계획의 총괄구상 요약

2) 부울경의 미래상

(1) 미래상 체계

- 부울경의 미래상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사무수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부울경 지역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
- 종합적 미래상과 이를 구체화한 분야별 미래상으로 구분해 살펴봄
 - 종합적 미래상: 이상적 상태에 도달한 지역의 총체적 역량과 성과로서 핵심 주제는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임
 - 분야별 미래상: 주요 정책 분야별로 제시된 종합적 미래상의 구체적 모습으로 5개 분야로 구성



이미지 출처 : <https://unece.org/issue-based-coalition-health-and-well-being>
<https://www.condoauthorityontario.ca/condominium-living/governance>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0/solving-mobility-challenges-in-megacities>

<https://waferpro.com/silicon-wafer-manufacturing>
<https://k-water.newsnstory.com/pages/story/MF/cont?wzVoI=633&rawid=502443>
<https://trmtaryet.com/index.php/infrastructure>

〈그림 5-12〉 부울경의 미래상 체계

(2) 종합적 미래상: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

- 부울경 특별연합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추진 결과, 부울경 지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
 - 교통, 산업, 인재,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공적인 초광역협력과 광범위한 지역혁신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의 인구유출, 지역산업 쇠퇴 등의 총체적 위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국가의 양대 축으로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선도
 - 수도권뿐 아니라 도쿄, 간사이, 베이징, 상하이 등 세계적 수준의 동북아 대표 메가시티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역혁신 역량 확보
 - 부울경 어디에서든지 양질의 만족도 높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양질의 교육, 문화,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민생활 혁신 실현

(3) 분야별 미래상

- ①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1시간 생활권
 - 부울경 전 지역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계하는 초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공간의 압축’을

통한 1시간 생활권이 실현

- 광역철도, 도로 및 대중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구축, 고도화로 부울경 지역의 단절이 없는 단일
경제생활권 실현

- 부울경 지역 동부와 서부를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혁신 효과의 신속한 공간적 확산을 통한 균형
발전, 초광역통합이 심화

○ UAM(Urban Air Mobility), 어반루프,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교통체계의 선도적 도입이
추진되는 스마트 공간혁신 기반 확보

○ 가덕도 신공항, 신항, 철도 연계 트라이포트에 기반한 첨단 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세계 물류산업
을 선도하고 부울경 지역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크 주도권 강화

- 물류허브 배후에 조성된 스마트 물류도시는 글로벌 첨단 물류 기업 입지, 지역의 공간적 혁신
주도

② 글로벌 탑 경제·산업 혁신 역량 확보

○ 공간의 압축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경제·산업 혁신 역량은 단일도시 수준으로 산업 분야별, 지역
간 연계가 극대화, 초광역경제생활권에 걸맞는 규모의 경제 실현, 시너지 효과 발생

○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 주력 산업은 친환경 첨단산업화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선박 산업
으로 고도화, 글로벌 TOP 수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 탄소중립, 수소산업,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과 같은 신규 전략적 육성 지역 산업 분야도
세계시장을 주도

○ 전통적 경쟁력 우위 산업의 혁신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가 뒷받침

○ 지역대학은 지역 산업과 전문연구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글
로벌 TOP 수준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확보

- 지역인재의 선순환 시스템을 주도하고, 외부 우수인재의 지역유입을 촉진

○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통해 부울경 지역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소비 구조 확립

- 지역 농업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먹거리 안전성의 안정적 보장을 통한 생산, 유통 체계 고도화
실현

○ 농업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부울경 서부지역의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동서격차 완화 및 지역 간 연대 공고화 실현

③ 다양성이 넘치는 아시아 문화·관광 중심

○ 단일 초광역 경제생활권 실현을 통해 지역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활용 역량
고도화

- 부울경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분야 초광역 협력의 성공적 추진 결과, 국내외 관광객 지속적

증가

- 2030 월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시아 문화·관광 중심으로 도약
- 초광역 문화거버넌스의 정책적 노력 결과 지역 간 문화향유권 격차 해소
-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거대 문화 시장 창출로 부울경 전역 수준에서 문화서비스 이용의 상향 평준화, 다양화 실현 및 문화예술인의 개성과 생활이 존중되는 문화 산업 성장 기반 구축

④ 최고 수준의 건강·안전·환경권 보장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크게 해소, 부울경 지역 전반의 상향 평준화 실현 및 주민 건강권의 보편적 보장
 - 부울경 지역 어디에서라도 적시대응이 가능한 전문 응급의료 시스템 확보
- 지진, 원전 사고 등 대규모 광역적 재난의 예측·저감 및 재해구조 대응을 위한 초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시,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히 피난가능하고, 피난상황에서도 기본적 생활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는 안전메가시티 실현
- 그린 수소 항만 조성, 친환경 첨단산업 혁신으로 대기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초광역 대기환경 공동대응 체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상시적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상태를 유지

⑤ 세계로 뻗어가는 열린 초광역 거버넌스

- 중앙정부의 충분한 권한, 재정 이양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정책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여건 구현
- 이전한 국가 공공기관과 지역내 혁신도시가 부울경 지역 관련 부분과의 연계 고도화를 통해 지역 혁신에 실질적 기여
- 시·도, 관할 지역기초지자체, 주민을 비롯한 민간부문이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 실현, 부울경 지역의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성찰적 민주주의 구현
- 글로벌 메가시티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심화되어 이웃나라의 초광역권과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광역권 형성이 논의
- 초광역협력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이 우선적 강조

3) 특별연합의 미션

- 초광역경제생활권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미션은 ‘초광역협력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임

- 부울경 특별연합이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초광역경제생활권) 추진을 위한 초광역협력의 거버넌스 기반으로 그 자체가 부울경 메가시티는 아님
- 부울경 지역의 초광역 거버넌스에서 특별연합이 배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공적 기구중의 하나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부울경 초광역협력 거버넌스에는 특별연합 외에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관할구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 추진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사회단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지역 경제생활주체가 참여
 -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은 초광역협력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인 특별연합의 성공을 그 전제로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 성공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되, 종속되지 않고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 특별연합은 초광역협력에서 충분한 기획·조정 역량을 발휘해, 참여주체 간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두고 협력과제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냄으로써 신뢰를 확보

4) 총괄 목표

- 장기적 미래상 실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의 계획기간내 총괄 목표를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수행 정책 측면에서 제시
 - (운영) 특별연합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기 구축
 - (정책) 주민 체감도 높은 초광역 협력 과제 추진
- 계획기간인 2023~2027년은 특별연합 출범 초기 시점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부울경 초광역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충분하지 못한 권한, 자원, 부울경 초광역협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인식 등 법·제도, 행정역량 등 여러 측면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특별연합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고, 부울경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기반을 계획기간내 조기에 구축할 필요
 - 사무 처리를 위한 충분한 행·재정적 역량을 확보하고, 초광역협력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3개 시·도, 중앙정부, 지역주민, 등 관계 주체들로부터 확고하게 인정받아 기관 존속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해소
- 정책 측면에서는 주민이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과제 추진을 통해, 부울경 초광역협력과 이 협력의 핵심적 거버넌스 주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에 보다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5) 핵심 가치

- 특별연합의 목표 달성 노력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율과 책임, 성과지향성, 참여와 협력, 지속가능성, 개방성을 들 수 있음

(1) 자율과 책임

- 부울경 특별연합은 초광역권 공동의 이익 실현 및 증진을 목적으로 충분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자기책임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사무를 처리
 - 실질적인 초광역협력 사무 수행 보장을 위한 충분한 권한, 행·재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
 - 구성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등 타 거버넌스 주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초광역협력 사무의 수행에서 충분한 자기책임성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정책추진 주도권 확보 노력

(2) 성과지향성

- 부울경 특별연합은 주민, 기업 등 부울경 경제생활 주체들이 초광역협력의 정책적 혜택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성과지향적 정책 추진
- 특별연합 설치 이전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높은 정책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초광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불필요한 조직 설치, 인력 증원은 지양하고, 내실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중점

(3) 참여와 협력

- 부울경 내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초광역사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환경의 조성을 지향
 - 부울경 초광역 거버넌스는 특별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3개 시·도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며, 관할지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 사회단체, 주민 등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도 중요
 - 초광역발전은 광범위한 관할구역만큼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폭넓은 참여의 필요성을 요구
 - 다양한 지역주체들 간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민주성 제고

(4) 지속가능성

- 부울경 특별연합은 정책 과제 추진 및 거버넌스 운영에서 초광역협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진행
- 정책과제 추진에서 친환경, 균형발전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 경제·산업 분야 과제 추진에서도 환경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섬
- 경제적 이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간, 사회계층간 격차 완화 등 부울경의 전방위적 균형 발전에 적극적 의지

(5) 개방성

- 초광역권은 개방된 글로벌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권역 간 경쟁, 협력 가운데 지역경제의 번영을 위한 혁신노력 중요
- 수도권 및 다른 초광역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외개방 중심적 역량 확보
 - 가덕도신공항, 신항 등을 활용한 첨단 교통·물류 인프라를 토대로 글로벌 메가시티와의 연계 고도화
 - 수소경제, 디지털 신산업 등 친환경 첨단산업, 초광역권 경제협력을 가속화

6) 계획추진의 실현상

(1) 종합적 실현상

- 계획기간인 2023~2027년은 특별연합 출범 초기로서 기반조성기에 해당되는데, 계획기간내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초광역협력 사무처리·사업추진 기반 구축
- 출범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초광역협력 사무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부울경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 전략을 추진
- 기존 추진 초광역권 차원 사업은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초광역 거버넌스의 충분한 지원 속에서 원활히 지원을 받으며, 사무별 핵심 사업은 계획기간내에 완료하거나, 충분한 진행단계에 도달
- 추진 부담이 낮고 주민체감도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해, 특별연합의 초광역협력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부울경 주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

(2) 분야별 실현상

- ①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초광역 철도망, 도로망,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의 추진에 대해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부울경의 공간적 압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타당성 검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정절차를 요구
 - 기존 추진사업을 제외하고 대형건설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료되기는 어려움
 - 계획기간 내에는 1시간 생활권 실현, 지역산업연계 고도화를 통한 공간혁신, 트라이포트 등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교통·물류 분야에서 지역주도의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실제화를 위한 각종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충분한 재원확보 노력을 진행

- 이를 통해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부울경 주민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광범위하고 공고한 지지를 확보

- 환승할인, 광역급행버스 도입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으로 높은 주민체감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계획기간내에 완료

② 경제산업 혁신을 위한 초광역협력 기반 확보

-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통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지역 주력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디지털 신산업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전개

- 사무 범위가 넓고,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력산업 고도화의 성공과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를 계획기간내에 가시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움

- 계획기간내에는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등 산업 근간 인프라 조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부울경권의 지속적인 경제산업 혁신을 위한 역량,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

-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공동 투자유치 체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착수함으로써 산업혁신을 위한 R&D등 협력기반 구축과 지역혁신 노력을 본격화

- 부울경 경제산업혁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R&D 역량 및 지산학 협력체계, 투자유치 지원체계, 자생적 인재 양성 기반 구축에서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고, 지역인재 유출의 가속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계획기간내에는 지역대학 등 혁신주체의 역량, 지산학 협력의 지속성, 질적 수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회복에 관한 충분한 성과가 기대

-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소비, 도농간 교류활성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 확보를 위한 먹거리 공동체 구축 관련 사업을 추진

- 동서균형발전을 통한 격차완화, 부울경 전역에 걸친 높은 정서적 일체감 실현의 필요성, 공감대를 확산

③ 문화·관광분야 초광역협력 실제화

- 부울경권 차원에서 문화, 예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초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공동관광 마케팅, 관광벨트 조성 공동 대응 등 각종 사업 추진

- 초광역권 차원의 문화·관광 자원의 공동이용, 개발을 본격화하여, 향후 사무·사업의 꾸준한 확대노력 전개

- 부울경의 통합적 정체성 위에서 지역내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문화향유권 격차 해소, 문화적 다양

성 실현을 위한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 심화될 수 있도록 함

④ 초광역권 차원의 건강·안전·환경권 보장 추진

-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 주민의 필요성 인식과 사업 체감효과 수준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수준의 보건·의료 사무를 추진
 - 소아전문응급센터, 감염병전문병원, 닥터헬기 운영 등
- 초광역 협력이 절실한 지진, 원전 사고 등 대규모 재난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사업을 공동추진
- 초광역 협력이 절실한 대기환경분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초광역 협력사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물관리 등 다른 환경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
 - 대규모 산업단지, 항만 입지 등 부울경의 공통적인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공유

⑤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전환

- 특별연합의 설치 및 사무수행과 함께,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진행되어 초광역 협력사무의 효과적 추진 기반이 구축
- 부울경권의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기구가 설치·운영되며, 각자 운영하던 사업추진 조직의 공동, 통합운영 추진
 - 부울경 지역협업위원회, 광역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광역 지역방호협의회 등 정책기구 설치, 혁신플랫폼 총괄범인의 공동출연 설립, 해외사무소 공동운영 등 진행
- 초광역 협력사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존 3개 시·도 소속 기관의 기능 조정, 재구조화 추진
 - 초광역적 범위에서 지역산업 및 대학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 관련 기존 3개 시·도 출연기관의 기능조정
- 중앙정부 소속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모색

제 6 장

초광역협력 사무별 처리계획

1. 사무별 처리계획 개요

1) 사무별 처리계획의 구성

- 18개 초광역협력 사무는 기본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사무에 대응
 - 규약 제6조 제1항의 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무로서 그 자체가 각각 부울경 초광역 경제생활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지향성을 지님
 - 초광역협력 과제는 구성지방자치단체 이관 사무에 일대일 대응
- 규약 제6조 제2항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인데, 제6조 제1항 사무의 과제지향성을 뒷받침
 - 국가위임사무는 3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는 교통분야 3대 과제(초광역 철도망, 도로망,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는 초광역 도로망 구축 과제,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을 뒷받침
 - 국가 위임사무는 사무 자체가 독자적인 정책과제의 성격을 지닌다기 보다,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

〈표 6-1〉 관련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 및 국가 위임 사무

기본계획의 초광역협력 사무	관련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무	관련 국가위임사무
초광역 철도망 구축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초광역 도로망 구축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초광역 재난 대응에 관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초광역협력 사무별 처리계획은 〈표 6-2〉의 제시 주요 항목으로 구성

〈표 6-2〉 사무별 처리계획의 주요 항목

항목	내용
- 사무 필요성	- 해당 사무의 필요성 총괄적 제시
- 목표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방향 	- 해당 사무의 목표와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방향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기간중 달성해야 할 해당과제의 전체적 목표 • 계획기간중 목표 실현을 위한 초광역협력 측면의 접근 방향
-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사무 • 발굴사업 • 추진 주요 사항 • 소요예산 	-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성 사무 및 발굴사업의 타당한 추진방법을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구성 세부사무 • 사무에 근거해 발굴된 사업 • 구성사무와 발굴사업의 추진 기준, 점검 관련 주요 사항 • 발굴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규모, 분담에 관한 사항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3개 시·도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 사무별 처리계획은 구성사무, 발굴사업에 관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제시
 - 기본계획은 종합성, 구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단위의 구체적 사항은 사무 혹은 정책 분야 단위에서 별도 계획의 수립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사이 광역연합은 광역계획 외에 구체성 높은 7개 정책 분야별 계획을 수립
- 사무별 처리계획에 포함되는 구성사무 및 발굴사업은 3개 시도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통해 수용된 사무, 사업에 기초
 - 규약, 사무(사업) 현황,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활용

2) 구성사무 및 발굴사업 내역

- 과제별 처리계획에 포함되는 18개 초광역협력 사무의 구성 세부사무는 각각 61개(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 65개(국가 위임사무)이며, 발굴사업은 총 132개
- 과제별 구성 세부사무 평균 개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 3.4개, 국가 위임사무 3.6개
 -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는 1~6개, 국가 위임사무는 0~34개로 분포
 - 구성 세부사무는 초광역 도로망 구축,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이 각 6건(9.8%)로 상대적으로 많음
 - 국가위임사무는 초광역 철도망 구축(1개), 초광역도로망 구축(1개),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31건),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34개) 4개 과제에만 해당
- 사무별 발굴사업 평균건수는 7.2개로 2~17개로 분포
-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이 17개(1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14개, 10.6%), 초광역 철도망 구축(12개, 7.9%)순
- 구성 세부사무는 권한, 범위의 수준 등이 상이하므로 건수가 많다는 점이 반드시 사무의 권한이나 관할 범위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작다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사무별 발굴사업의 수준 진단은 예산규모, 계획기간내 실현여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표 6-3〉 초광역협력 사무별 구성사무와 발굴사업

(단위: 수(건), 비율(%))

	구성 세부사무				발굴사업	
	구성지자체 이관사무		국가위임 사무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체 (평균)	61 (3.4)	100.0	65 (3.6)	100.0	132	100.0
초광역 철도망 구축	2	3.3	1*	1.5	12	9.1
초광역 도로망 구축	6	9.8			7	5.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6	9.8	30	46.2	4	3.0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	2	3.3			4	3.0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5	8.2			17	12.9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2	3.3			7	5.3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4	6.6			8	6.1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2	3.3			3	2.3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6	9.8			14	10.6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4	6.6			7	5.3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	2	3.3			9	6.8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2	3.3			10	7.6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	3	4.9			9	6.8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3	4.9			8	6.1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5	8.2			5	3.8
초광역 재난 대응 체계 구축	4	6.6			4	3.0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2	3.3			2	1.5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	1	1.6	34	52.3	2	1.5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사무로 3개 사무 모두에 해당

○ 발굴사업의 유형 구분

- 기간내완료: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는 사업
- 향후 지속: 향후 정기적(예: 연례, 5년주기)으로 지속되는 사업
- 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이후 계속되는 사업
- 미확정: 유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발굴사업은 기간내 완료가 48.5%(64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향후 지속(31.8%, 42개), 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17.4%, 23개), 미확정(2.3%, 3개)

○ 기간내완료 비중은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100.0% 각각 8개, 3개),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94.1%, 16개)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향후 지속사업 비중은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100%, 9건), 초광역 재난 대응 체계 구축(100%, 4건),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87.5%, 7건),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80.0%, 4건)등이 높게 나타남
 - 주로 사업추진체계의 지속적 운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비중이 큰 초광역협력 과제
- 초광역 철도망 구축(91.7%, 11개)이 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사업 비중이 큰데, 철도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물적 투자와 장기간 사업기간을 소요
 - 사전타당성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구상단계의 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계획기간동안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

〈표 6-4〉 사무별 발굴사업 유형 내역

(단위: 수(건), 비율(%))

	총계		기간내완료		향후 지속		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미확정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127	100.0	64	48.5	42	31.8	23	17.4	3	2.3
초광역 철도망 구축	10	100.0	1	8.3	0	0.0	11	91.7	0	0.0
초광역 도로망 구축	6	100.0	4	57.1	0	0.0	1	14.3	2	28.6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4	100.0	3	75.0	0	0.0	1	25.0	0	0.0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	4	100.0	0	0.0	2	50.0	2	50.0	0	0.0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15	100.0	16	94.1	0	0.0	1	5.9	0	0.0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7	100.0	4	57.1	1	14.3	2	28.6	0	0.0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8	100.0	8	100.0	0	0.0	0	0.0	0	0.0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3	100.0	3	100.0	0	0.0	0	0.0	0	0.0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14	100.0	12	85.7	2	14.3	0	0.0	0	0.0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7	100.0	3	42.9	3	42.9	1	14.3	0	0.0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	9	100.0	0	0.0	9	100.0	0	0.0	0	0.0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10	100.0	5	50.0	5	50.0	0	0.0	0	0.0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	9	100.0	1	11.1	4	44.4	3	33.3	1	11.1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8	100.0	1	12.5	7	87.5	0	0.0	0	0.0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5	100.0	1	20.0	4	80.0	0	0.0	0	0.0
초광역 재난 대응 체계 구축	4	100.0	0	0.0	4	100.0	0	0.0	0	0.0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2	100.0	1	50.0	1	50.0	0	0.0	0	0.0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	2	100.0	1	50.0	0	0.0	1	50.0	0	0.0

3) 소요예산

- 18개 사무의 발굴사업 소요예산 총계는 30조 8,865억 원(사업비 미산정 사업 제외)
 - 국가 21조 8,463억 원(70.7%), 특별연합 1조 1,862억 원(3.8%), 3개 시·도 4조 692억 원(13.2%), 기타 3조 7,849억 원 부담(12.3%)
- 계획기간 내 예산총계는 7조 3,588억 원으로 소요예산 총액의 23.8%
 - 국가 4조 8,733억 원(66.2%), 특별연합 1조 1,090억 원(15.1%), 3개 시·도 3,780억 원(5.1%), 기타 9,984억 원(13.6%) 부담
- 특별연합의 연간부담액은 최소 1,499억(2027년)에서 최대 2,824억(2024년)이며, 계획기간중 연평균 부담액은 2,218억 원

〈표 6-5〉 초광역협력사무 사업 소요예산 총계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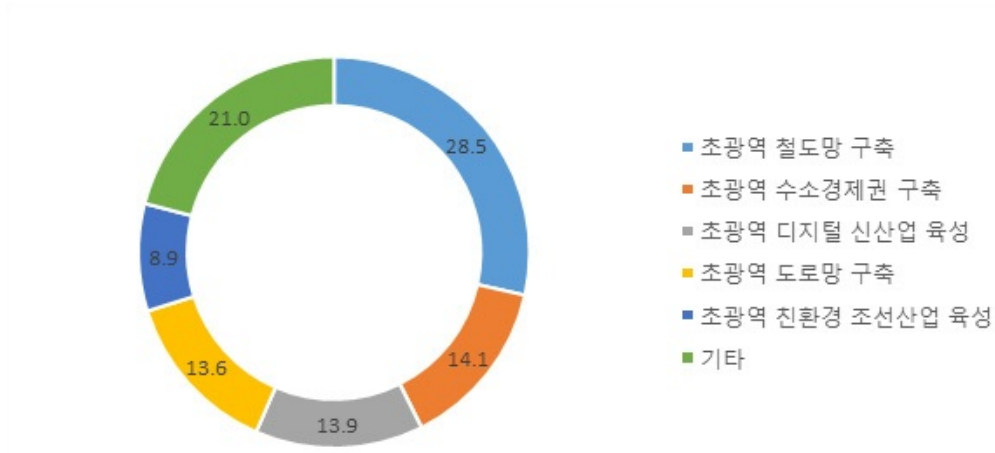
사무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총계	소계	11,011	13,361	11,974	14,708	22,532	73,588	235,278	308,865
	국가	6,037	7,947	7,068	10,106	17,578	48,733	169,729	218,463
	특별연합	2,345	2,824	2,457	1,966	1,499	11,090	771	11,862
	시·도	298	86	86	1,063	2,247	3,780	36,913	40,692
	기타	2,331	2,505	2,365	1,575	1,208	9,984	27,865	37,849
초광역 철도망 구축	소계	218	357	496	4,895	15,007	20,974	187,155	208,128
	국가	191	315	454	3,878	12,785	17,624	150,262	167,886
	특별연합								
	시·도	27	42	42	1,017	2,222	3,350	36,893	40,242
	기타								
초광역 도로망 구축	소계	2,284	2,044	2,042	2,042	1,620	10,033	46,149	56,182
	국가	946	821	821	821	649	4,058	18,460	22,518
	특별연합		2				2		2
	시·도	94	21	21	21		157		157
	기타	1,244	1,200	1,200	1,200	971	5,815	27,689	33,50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소계	954	808	788	35	35	2,620	30	2,650
	국가	88	13	10	10	10	131	10	141
	특별연합	11	17				28		28
	시·도	177	23	23	25	25	273	20	293
	기타	679	755	755			2,189		2,189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	소계	232	302	302	402	402	1,640	550	2,190
	국가	151	191	191	241	241	1,016	280	1,296
	특별연합	81	111	111	161	161	624	270	894
	시·도								
	기타								

사무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소계	2,656	3,261	1,907	1,552	1,012	10,388	272	10,660
	국가	1,589	1,899	1,119	974	616	6,195	156	6,351
	특별연합	788	1,091	716	515	372	3,481	116	3,597
	시·도
	기타	279	272	73	64	24	712	.	712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소계	964	1,461	1,599	1,470	1,031	6,524	456	6,980
	국가	640	1,047	1,148	1,073	758	4,665	347	5,012
	특별연합	201	161	161	122	86	731	.	731
	시·도
	기타	123	254	290	275	187	1,128	109	1,237
초광역 자동차 산업 육성	소계	972	1,231	1,077	912	705	4,898	.	4,898
	국가	634	796	684	646	515	3,275	.	3,275
	특별연합	337	435	392	266	190	1,621	.	1,621
	시·도
	기타	1	1	1	.	.	2	.	2
초광역 항공 신산업 육성	소계	480	655	685	655	475	2,950	.	2,950
	국가	220	390	420	440	330	1,800	.	1,800
	특별연합	260	265	265	215	145	1,150	.	1,150
	시·도
	기타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소계	1,693	2,307	2,218	2,062	1,960	10,239	.	10,239
	국가	1,271	1,880	1,772	1,659	1,559	8,141	.	8,141
	특별연합	422	427	436	393	391	2,068	.	2,068
	시·도
	기타	.	.	10	10	10	30	.	30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소계	315	479	269	269	20	1,353	.	1,353
	국가	184	381	171	171	.	908	.	908
	특별연합	131	98	98	98	20	445	.	445
	시·도
	기타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	소계	20	18	18	19	18	93	.	93
	국가
	특별연합	20	18	18	19	18	93	.	93
	시·도
	기타
초광역 지식혁신 플랫폼 구축	소계	105	150	250	150	4	659	.	659
	국가	57	77	127	77	.	336	.	336
	특별연합	44	64	114	64	4	288	.	288
	시·도
	기타	5	10	10	10	.	35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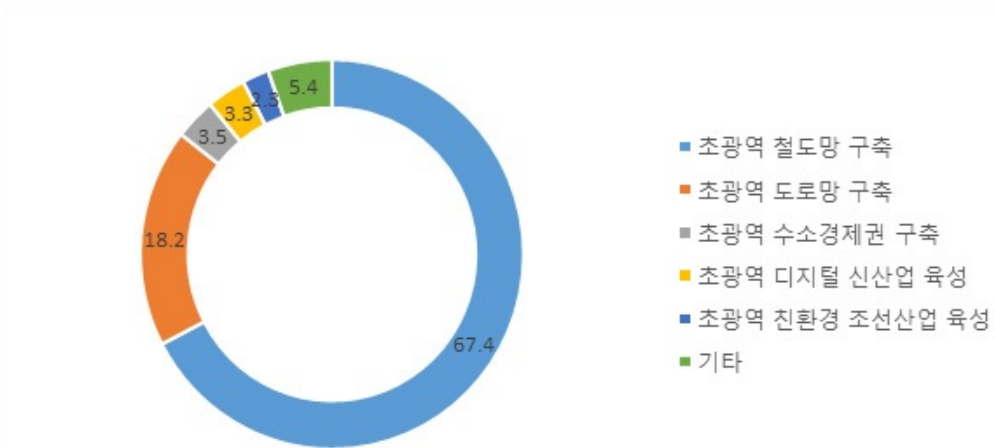
사무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초광역 문화·관광 체계 구축	소계	10	136	148	113	113	521	666	1,187
	국가	1	55	55	41	41	192	214	406
	특별연합	9	68	68	56	56	256	385	641
	시·도
	기타	.	14	26	16	16	73	67	140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소계	34	100	125	82	80	423	.	423
	국가	17	50	63	41	40	211	.	211
	특별연합	17	50	63	41	40	211	.	211
	시·도
	기타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	소계	60	50	50	50	50	259	.	259
	국가	38	33	33	33	33	172	.	172
	특별연합	22	17	17	17	17	88	.	88
	시·도
	기타
초광역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소계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소계	4	2	.	.	.	6	.	6
	국가
	특별연합	4	2	.	.	.	6	.	6
	시·도
	기타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	소계	10	10	.	10
	국가	10	10	.	10
	특별연합
	시·도
	기타

- 사무별 예산비중은 계획기간 내 소요예산 기준으로 초광역 철도망 구축 28.5%(2조 974억 원),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14.1%(1조 388억 원),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13.9%(1조 239억 원)순
- 전체 소요예산 기준으로 초광역 철도망 구축 67.4%(20조 8,128억 원), 초광역 도로망 구축 18.2%(5조 6,182억 원),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3.5%(1조 660억 원)순
- 교통 인프라 구축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메가시티 실현의 핵심적 전제가 교통망 고도화를 통한 ‘공간의 압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
 - 철도,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과제의 예산비중은 기간 내 45.7%, 전체 86.4%를 점유

<계획기간 내>



<전체>



단위: %

주: 예산 미산정 과제, 사업 제외

<그림 6-1> 과제별 소요예산 비중

2. 사무 ① 초광역 철도망 구축

1) 사무 필요성

-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부울경의 공간적 압축에서 광역철도망 구축은 핵심 과제
 - 철도는 정시성 확보에 최적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합리적인 비용부담으로 이동이 가능한 교통 수단
 - 거점 도시 중심의 철도망 연계를 통한 생활권, 산업 연계의 실현은 경제생활공동체의 본격적 구축과 동서 연계를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의 전제

- 부울경 지역의 철도망 구축 수준은 비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소폭 우위에 있으나,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경제생활권화로 만들기에는 크게 미흡
 - 수도권 지역이 전권역적 연계가 된 반면, 부울경권은 일부 거점도시(부산, 울산) 간 혹은 거점도시권(부산권) 내 부산, 김해, 양산 간 연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인접한 거점 대도시인 부산과 창원 사이에도 도시철도 노선이 없어, 비용, 시간의 불이익
 - 부산-창원(35.5km)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151분으로 도시철도 노선이 있는 비슷한 거리의 서울-수원(32.6km, 93분)보다 58분(62%)더 소요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초광역 철도망 구축의 안정적 추진기반 확보
 - 확정, 사업진행중인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초광역 경제생활권 실현을 위한 타당성 높은 철도 노선 설정 및 사업 추진

(2) 방향

- 초광역 철도망 구축은 부울경 단일 경제생활권 실현의 핵심 전제이나 출범 초기단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관련 사무, 권한, 재원 등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원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내재
-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철도망 구축의 지역주도 기반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
 -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역량 조기 안정화, 3개 시·도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로부터의 충분한 권한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
- 단일경제생활권 실현에 대한 기여가 크고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
 - 거점도시 중심 생활권 실현, 산업간 연계 심화, 물류 기반 조성 등 단일경제생활권 실현 효과 강화에 초점을 두되, 지역 간 격차완화,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병행
 - 단일생활권 형성의 주민 체감효과가 큰 초광역 철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철도망 구축의 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2개 사무, 국가 위임 1개 사무로 구성
 -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2개 사무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변경(협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협의)

획 수립(협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국가 위임 1개 사무는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관련 작성·제출 사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 사무 수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제한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대응되는 지위에서 기본계획의 협의과정에 참여하거나(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의견을 제시(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시행계획의 경우, 국가사무의 위임에 따라 특별연합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응되는 지위에서 부울경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2 제1항)
 - 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2 제1항)
- 운영 초기 단계로서 특별연합이 스스로 지역 철도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재정적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

- 광역철도에서도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운영토록 하며, 신설형도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건설,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3조)
- 장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재원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2) 발굴사업

- 초광역 철도망 구축의 발굴사업
 - 부산신항~거제 연결선 건설
 - 경부고속선 부전KTX역 신설
 - 동남권순환(울산~김해) 광역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 1시간 생활권 부울경 광역 철도망 구축
 - 부울경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 대심도 GTX 급행철도 건설
 - 부산신항 연결지선 건설
 - 내륙 산단간 물류철도망 구축
 - 울산~부산~창원~진주 급행열차 도입
 -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 발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계획되거나 확정될 경우,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
- ① 부산신항~거제 연결선 건설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실현 노력)
 - 사업비: 1조 9,399억 원
 - 사업내용
 - 복선전철 L= 31.3km
 - 주요경유 : 남부내륙철도(177.89km) → 부산 가덕도 → 부산 신항선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미반영된 상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비: 4,151억 원

- 고속철도 부전 KTX역 신설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미반영된 상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③ 동남권순환(울산~김해) 광역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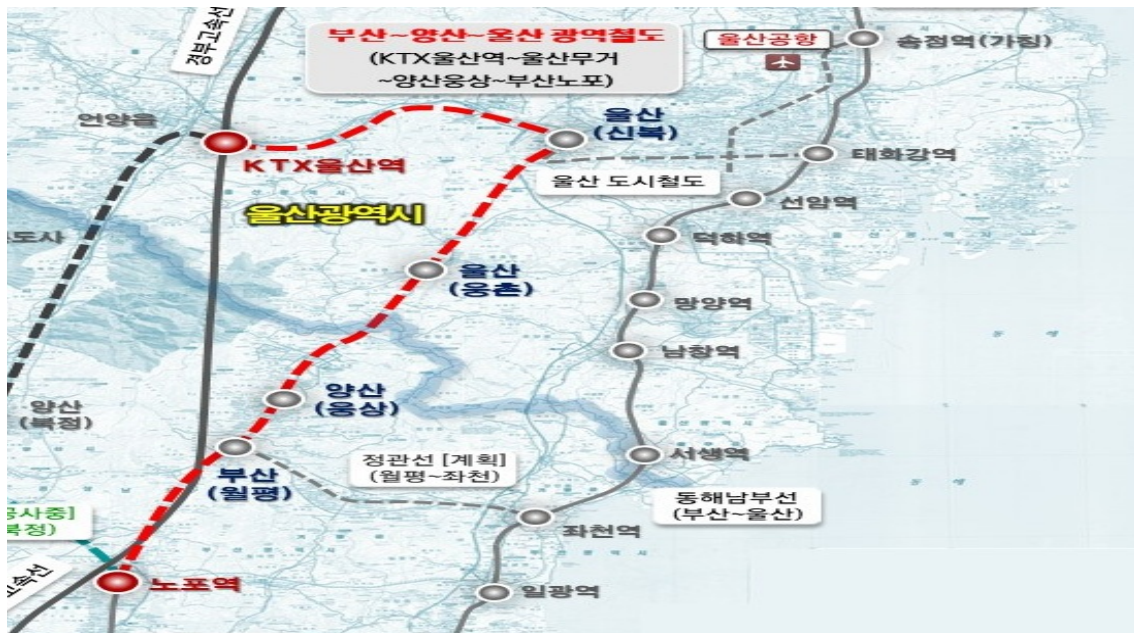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2029년(2021년~)
- 사업비: 2조 179억 원
- 사업내용
 - 연장 L = 51.4km(KTX울산역 ~ 양산 북정 ~ 김해진영)



〈그림 6-4〉 동남권순환(울산~김해) 광역철도

④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2029년(2021년~)
- 사업비: 1조 631억 원
- 사업내용
 - 트램 L= 50.0km, 25개 정거장
 - 주요 경유지 :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무거)~울산(신북)~울산KTX역



〈그림 6-5〉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⑤ 1시간 생활권 부울경 광역 철도망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5년
- 사업비: 615.2억 원
- 사업내용
 -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시설보완공사 및 차량제작사업
 - 2023년부터 전동열차 17편성 연장 운행이 가능토록 하며, 4편성 전동열차를 추가로 제작하여, 2025년부터는 21편성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⑥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실현 노력)
- 사업비: 9,656억 원
- 사업내용
 - 급행열차 구축 (L=297.3km)
 - 영남권 광역순환(창원~부전~일광~울산(태화강역)~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창원)
-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부·울·경 3개 시도뿐 아니라 대구, 경북과의 공동대응이 필요

⑦ 대심도 GTX 급행철도 건설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실현 노력)
- 사업비: 6조 2000억 원
- 사업내용
 - 2개 노선 총연장 L = 103.4km
 - 1-1노선: 울산태화강역~센텀시티역~서면역~사상역~가덕도신공항
 - 1-2노선: 창원중앙역~가덕도신공항
 - 평균속도 110km/h(설계속도 200km/h, 최고속도 180km/h)

⑧ 부산신항 연결지선 건설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2027년(2020년~)
- 사업비: 2,151억 원
- 사업내용
 - 단선전철(연결지선) L=6.5km

⑨ 내륙 산단간 물류철도망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5~2034년
- 사업비: 2조 3,146억 원
- 사업내용
 - 창녕 대합산단 ~ 창원역 ~ 성주사역 ~ 부산항 신항 L=85km(단선)

⑩ 울산~부산~창원~진주 급행열차 도입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28년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 진주~창원~부산~울산간 노선에 KTX-이음, EMU-150* 운행
 - * 최고속도 150km/h의 간선형 전기동차
 - 부전~마산 노선 운영예정인 KTX-이음을 진주~울산까지 확대

- 부전~마산 노선에 EMU-150 신규투입, 진주~창원~부산, 부산~울산 노선의 기운행 무궁화 열차를 EMU-150으로 대체 투입
- 부울경 메가시티 거점도시를 광역철도망으로 연결, 공간의 압축 효과를 강화

⑪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5년~2034년
- 사업비: 1조 3,000억 원
- 사업내용
 - L=30km(거제~가덕신공항 복선 노선)

⑫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32년
- 사업비: 4조 3,200억 원
- 사업내용
 - L=96km(가덕도신공항~부산항신항~창원~대구 복선노선)

(3) 추진 주요 사항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계획 미반영 사업이 다수이며, 계획 반영 사업도 예비 타당성조사 미시행 사업이 적지 않음
 -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사시행, 준공확인의 과정진행에서 길게는 10년 가량 소요됨을 감안하면, 현재 공사중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계획기간 내 예비타당성 조사만 통과, 면제받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음
- 철도망 구축은 중앙정부 주도사업으로 초광역협력 추진에 따른 특례(예타면제, 국비분담비율 상향)을 일정 수준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용상 타당성 높은 철도사업안을 제안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
- 타당성 높은 철도사업안 제출을 위해 특별연합의 산업분야 초광역협력 사무 추진과 그에 따른 공간 활용의 유의미한 효과 실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체적인 부울경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필요
 - 타 초광역협력 사무 구상, 공간계획 반영을 통한 공간적 압축의 파급효과 증대
 - 발굴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보완, 개선 진행

- 메가시티 전략 차원의 장기적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 확보
- 부울경 지역에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철도사업은 특별연합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되,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동대응 노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접근, 의사결정 참여는 메가시티 시·군·구 협의회 운영 등 특별연합 관할구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활용

(4) 소요예산

- 총소요예산(사업비 미산정 사업 제외)는 총 20조 8,128억 원
 - 중앙정부 부담이 16조 7,886억 원(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3개 시·도 4조 242억 원(19.3%)
 - 사무 특성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은 없음
- 계획기간중 예산은 2조 974억 원으로 총 소요예산의 10.1%를 점유
 - 중앙정부 부담은 1조 7,624억 원(84.0%), 시·도 3,350억 원(16.0%)
- 중앙정부 부담예산 비중이 크므로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교부 확보 방안 필요

〈표 6-6〉 초광역 철도망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218.1	357.1	496	4,895.2	15,007.45	20,973.85	187,155.35	208,128.2
	국가	191.1	315.1	454	3,878.2	12,785.45	17,623.85	150,262.35	167,886.2
	특별연합
	시·도	27	42	42	1,017	2,222	3,350	36,893	40,242
	기타
① 부산신항~거제 연결선 건설	소계	19,399	19,399
	국가	19399	19399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② 경부고속선 부전KTX역 신설	소계	4,151	4,151
	국가	4,151	4,151
	특별연합
	시·도
	기타

[illegible]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⑪ 거제~가덕도 신공항 연결철도	소개	.	.	13	390	1,575	1,978	11,022	13,000
	국가	.	.	13	390	1,575	1,978	11,022	13,000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⑫ 동대구~창원~ 가덕신공항 고속철도	소개	43,200	43,200
	국가	43,200	43,200
	특별연합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중앙정부 교통 분야 계획의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자료 제공, 대응 논리 공동개발 등의 협력
- 사업계획 및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자료 제공 등 각종 지원, 협력
- 사업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 방안 마련, 사업 관련 관할 지역 기초지자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 논란 해결 노력
- 특별연합의 초광역 교통망 구축 추진과 연계한 관할 지역의 교통망 개선, 공간 계획 조정 등 정책, 사업 추진

3. 사무 ② 초광역 도로망 구축

1) 사무 필요성

- 부울경 공간의 압축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
 - 현 도로연장 경남 12,185km, 부산 3,397km, 울산 2,491km로 전국 대비 각각 10.9%, 3.0%, 2.2% 점유
 - 신항 물동량 증대,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정체구간 및 고속도로 연결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도로망 확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도로망 구축을 통해 거점 간 물류수송, 거점 간 접근성 제고, 생활권 간 통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울경 단일생활권, 트라이포트 고도화 등 메가시티의 성과 실현 필요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초광역 도로망 구축의 안정적 추진기반 확보
 - 사업 진행중인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 초광역 경제생활권 실현을 위한 타당성 높은 도로 건설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 방향

- 초광역 도로망 구축은 부울경 단일 경제생활권 실현의 주요 전제중 하나이나 출범 초기단계에서 특별연합의 정책주도권은 제한
 - 관련 사무, 권한, 재원 등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원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내재
- 권한과 자원의 한계를 인식, 특별연합은 도로망 구축의 지역주도 기반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
 - 특별연합 행정역량 조기 안정화, 3개 시·도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로부터의 충분한 권한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
- 단일경제생활권 실현에 대한 기여가 크고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
 - 거점도시 중심 생활권 실현, 산업간 연계 심화, 물류 기반 조성 등 단일경제생활권 실현 효과 강화에 초점을 두되, 지역 간 격차 완화,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병행
 - 단일생활권 형성의 주민 체감효과가 큰 도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도로망 구축의 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6개 사무, 국가위임 1개 사무로 구성
 -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6개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협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행)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행),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요청),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시행, 도로 건설·관리계획의 수립임
 - 국가 위임 1개 사무는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관련 작성·제출 사무
- 의사결정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협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행),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요청)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관련 의견을 제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의 지위에 대응하여 요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행)의 경우,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의 지위에 대응하여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동조 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요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의 지위에 대응하여 요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실현 가능한 사무
 -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시행
 - 도로 건설·관리계획의 수립
-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시행에서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의 지위에 대응하여 특별대책지구

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로 건설·관리계획의 수립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시·도에 대응되는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부울경 권역에 걸친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도로법』 제6조)
 - 계획이 부울경 전체의 지역적 이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높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시·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

(도로법 제6조)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관련 작성·제출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인데, 특별연합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부울경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 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2 제1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굴사업

- 초광역 도로망 구축의 발굴사업
 -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 미음~가락 광역도로 건설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 동김해 IC~식만JCT광역도로 건설
 - 주요 거점도시연결 광역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 울산~창원 고속도로 건설
- ①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144.6억 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55km(김해 2.05, 부산 1.5), B=20~27.8m(4차로)



〈그림 6-6〉 조정~화명 광역도로 노선도

② 미음~가락 광역도로 건설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2026년(2021년~)
- 사업비: 186.7억 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76km, B=18m(4차로)



〈그림 6-7〉 미음~가락 광역도로 노선도

- ③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9,620억 원
- 사업내용
 - 총연장 L=14.6km, B=4차로



〈그림 6-8〉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노선도

④ 동김해 IC~식만JCT광역시도로 건설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79.4억 원
- 사업내용
 - 총연장 L=4.6km, B=4~8차로

- 사업비: 3조 1,159억 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115.4km, 4차로



〈그림 6-10〉 창원~울산 고속도로 노선도

(3) 추진 주요 사항

- 초광역 도로망 구축 사무 추진의 근간은 될 부울경 중장기 도로망 계획 수립
 - 시·도 희망사업의 기계적 망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연합의 산업분야 초광역협력 과제 추진과 그에 따른 공간활용 유의미한 효과 실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타 교통망 구축계획과도 충분한 연계성을 갖춘 계획(안)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수행 전문기관의 연구환경을 보장해줄 필요
- 부울경 중장기 도로망 계획 연구를 통해 타당성 높은 도로망 구축 사업의 발굴 필요
 -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사업 추진을 추구하는 만큼, 메가시티 전략 차원의 장기적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 확보 필요
- 도로사업 계획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조정관을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조정 진행
- 환경문제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환경파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공법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진행
 -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 노력을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비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근거 확보

- 사업 추진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대응 노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접근, 의사결정 참여는 메가시티 시·군·구 협의회 운영 등 특별연합 관할구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활용

(4) 소요예산

- 총소요예산(사업비 미산정 사업 제외)는 총 5조 6,182억 원
 - 중앙정부 부담이 2조 2,518억 원(40.1%), 특별연합 2억 원(0.0%),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3개 시·도 157억 원(0.3%), 기타 3조 3,504억 원(59.6%)
 - 기타는 초정~화명 광역도로건설, 동김해IC~식만JCT는 관할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울산~양산, 울산~창원 고속도로건설은 한국도로공사임
 - 특별연합 지출은 광역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사업 1개임(2억 원)
- 계획기간중 예산은 1조 33억 원으로 총 소요예산의 17.9%를 점유
 - 중앙정부 부담은 4,058억 원(40.4%), 특별연합 2억 원(0.0%), 시·도 157억 원(1.6%), 기타 5,815억 원(58.0%)

〈표 6-7〉 초광역 도로망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2,284	2,044	2,042	2,042	1,620	10,033	46,149	56,182
	국가	946	821	821	821	649	4,058	18,460	22,518
	특별연합	.	2	.	.	.	2	.	2
	시·도	94	21	21	21	.	157	.	157
	기타	1,244	1,200	1,200	1,200	971	5,815	27,689	33,504
①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소계	144.6	144.6	.	144.6
	국가	96.2	96.2	.	96.2
	특별연합
	시·도	24.2	24.2	.	24.2
	기타	24.2	24.2	.	24.2
② 미음~가락 광역도로 건설	소계	60	42.3	42.3	42.1	.	186.7	.	186.7
	국가	30	21.15	21.15	21.05	.	93.35	.	93.35
	특별연합
	시·도	30	21.15	21.15	21.05	.	93.35	.	93.35
	기타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③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소계	2,000	2,000	2,000	2,000	1,620	9,620	.	9,620
	국가	800	800	800	800	649	3,849	.	3,849
	특별연합
	시·도
	기타	1,200	1,200	1,200	1,200	971	5,771	.	5,771
④ 동김해 IC ~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소계	79.4	79.4	.	79.4
	국가	19.4	19.4	.	19.4
	특별연합
	시·도	40	40	.	40
	기타	20	20	.	20
⑤ 주요 거점 도시연결 광역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소계	.	2	.	.	.	2	.	2
	국가
	특별연합	.	2	.	.	.	2	.	2
	시·도
	기타
⑥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소계	14,990	14,990
	국가	5,996	5,996
	특별연합
	시·도
	기타	8,994	8,994
⑦ 울산~창원 고속도로 건설	소계	31,159	31,159
	국가	12,464	12,464
	특별연합
	시·도
	기타	18,695	18,695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중앙정부 교통 분야 계획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특별연합에 대한 정보, 자료 제공, 대응 논리 공동개발 등의 협력
- 사업계획 및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자료 제공 등 각종 지원, 협력
- 사업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 방안 마련, 사업 관련 관할 지역 기초지자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 논란 해결 노력
- 특별연합의 초광역 교통망 구축 추진과 연계한 관할 지역의 교통망 개선, 공간 계획 조정 등 정책, 사업 추진

4. 사무 ③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1) 사무 필요성

-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의 환승 편의 제고,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 광역급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단일경제생활권에 걸맞는 대중교통망 구축 노력 필요
 - 권역내 광역통행의 피크시 통행시간은 92.8분으로 승용차 평균 통행시간 39.4분에 비해 135% 높음(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2021),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부산울산권)
 - 증가하는 대중교통 통행률¹⁹⁾과 이용 편의성의 괴리를 축소하고, 운송수단 간 연결성 강화로 이용자 편의 제고 필요
- 대중교통망 구축은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에 비해 시간적, 물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면서도 주민들의 정책 체감 효과 실현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필요성 높음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초광역 대중교통망 체계 구축의 안정적 추진
 - 초광역 수준의 환승체계를 도입하고, 간선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제도개선 노력을 본격적으로 진행

(2) 방향

- 초기단계로서 정책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많은 거점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 간 격차 완화,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병행
 - 거점도시 간 연계에서 시작,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연계로 확대하는 접근
- 부·울·경 3개 시·도,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 소통, 협력을 통해 추진
 - 철도, 도로망 공사 대비 대규모 투자재원을 요구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상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존 3개 시·도 간 운영체계 간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사업 추진에 기존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존재

19) 광역통행 주수단 연평균 증가율 예상(2017~2040년): 버스(3.21%), 철도(3.94%) > 승용차 1.72%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무는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사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들 사무 모두의 공통구성사무는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관련 작성·제출 사무(국가 위임 사무)임
 - 특별연합의 장은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간선급행 및 광역급행버스 등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부울경권의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직접 수립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도시 광역교통 계획 관련 사무를 제외한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관련 사무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협의), 통합광역환승할인 및 환승시스템 구축임
-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의 협의에 대응해 통합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합 광역 환승할인 및 환승시스템 구축 사무는 통합 광역 환승할인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재정지원(동법 제12조)을 위한 것임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초광역 수준의 환승 편의 증진과 재정지원을 수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2개 사무, 국가위임사무 사무로 구성
-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2개 사무는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 종합계획 수립·변경(협의),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 개발계획 수립임
 -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의 협의에 대응해 부울경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종합계획에 따라 부울경 지역 실정에 합당한 광역 간선급행버스 개발계획을 수립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3. 운영효율화 방안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자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6.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7.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4.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5.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6. 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 국가 위임사무는 광역간선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포괄적 범위의 사무로 총30개의 세부사무로 살펴볼 수 있음(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별표 2>)

〈표 6-8〉 광역간선버스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국가위임 세부사무

처리 세부사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 조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제7조 제1항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및 공고,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	제7조 제3항
실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 등 공공시설 관리청과 협의에 관한 사무	제7조 제4항
실시계획 승인 시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고지에 관한 사무	제7조 제5항
실시계획 승인 후 고시 및 관련 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	제7조 제6항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제7조 제8항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제9조 제2항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	제11조 제2항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제13조 제1항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준공확인에 관한 사무	제14조 제1항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고시에 관한 사무	제14조 제2항
체계건설사업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	제14조 제4항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제19조 제1항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위한 운송사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제19조 제3항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에 관한 사무	제19조 제4항
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제19조 제6항
운송개시 기일·기간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무	제22조
운임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제23조 제1항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제24조 제1항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제25조 제1항
운송사업계획 변경 제한에 관한 사무	제25조 제2항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제26조 제1항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에 관한 사무	제26조 제2항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이행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제26조 제3항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제34조 제1항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변경, 공사 중지·변경 등 명령 및 고시에 관한 사무	제34조 제2항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제35조 제1항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제36조 제1항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운송사업 면허취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제37조
상속 및 운임 미신고,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미제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 방해,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호

출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별표 2〉

○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사무는 광역 급행버스 운영 및 재정지원임

- 광역급행버스의 운수사업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발굴사업

○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의 발굴사업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협의), 통합 광역 환승할인 및 환승시스템 구축)

- 부울경 통합환승할인 시스템 구축
-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변경(협의),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

-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광역 급행버스 운영, 광역 급행버스(보조) 재정지원)

- 부울경 광역급행버스 도입

① 부울경 통합환승할인 시스템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4년(2022년~)

○ 사업비: 17억 원

○ 사업내용

- 부울경 통합 광역환승 할인 및 환승시스템 도입
- 2024년까지 통합 광역환승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자 선정, 운영협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

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②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28년
- 사업비: 2,759억 원
- 사업내용
 - 주요 환승거점의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 환승센터(6개): 사상역 환승센터, 북울산역 환승센터, 경남마산역 환승센터, 양산 북정영 환승센터, 태화강 환승센터,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2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진주역 복합환승센터

③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4년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 부울경 연결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위한 타당성 높은 노선 발굴 및 대광위 협의 등 관련 절차 진행

〈표 6-9〉 초광역 BRT 노선 검토안

구분	운행 구간	연장	노선	비고
부산시	① 동래구(내성R)~해운대구(중동) ② 동래구(내성R)~서면(광무교) ③ 중앙대로(서면)~충무동(충무R)	10.4km 6.6km 8.6km	3개	운영 중
초광역 BRT	① 창원역~밀양~울산(태화강역) ② 울산(태화강역)~부산 동래구(내성R) ③ 부산(충무동,사상)~신공항~창원(창원역) ④ 창원역~김해~부산(충무동,사상) ⑤ 김해(시청)~양산 울산(태화강역)	노선 선정 후 운영구간 확정	5개축 7개 노선 (동서가로축)	
중장기 서부경남 BRT연결	① 경남 진주~창원 ② 경남 진주~인근 도시 연결	노선개발 후 운영구간 확정	2개축 2개 노선 (중·장기적 개발)	

④ 부울경 광역급행버스 도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4년
- 사업비: 15억 원
- 사업내용
 - 초광역권 수준의 노선 발굴 및 대광위 협의
 - 노선 시범운행(1~2개, 2023년), 이후 노선 확대(2024년~)

(3) 추진 주요 사항

- 통합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특별연합 주관으로 3개 시·도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
 - 기존 환승할인체계, 각종 교통이용 여건 등의 차이가 존재해 충분한 협의 필요
 -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된 타당성 높은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활용
- 광역 BRT 구축은 대광위 협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높은 노선계획이 필요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수행,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타당성 제고 노력
- BRT 구축 단계에서부터 기존 버스운행체계와 구분되는 시스템임을 강조하기 위한 차별화 진행
 - 브랜드화를 통해 자체적인 네이밍 및 디자인 체계 구축, 도시철도 방식의 노선 명명체계 반영, 환승 동선 안내 제공 등 노력 진행
 - 브랜드화만으로도 10~20%의 승객수 증가 기대(이원규, 2015: 58)



자료: <https://www.yrt.ca/en/about-us/about-us.aspx>, http://www.brio-innovation.com/nova-bus_york-transit_english.html

〈그림 6-11〉 BRT 브랜드화 사례: YRT VIVA BRT의 브랜드 디자인 체계

- 광역급행버스 도입은 전문 연구를 활용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포함 관계기관과 협의, 운행노선을 확정

- 주요 과업

- 부울경 광역급행버스 도입 방안 연구
- 최적 운행노선 발굴 및 관련 지자체·정부부처(대광위) 협의
- 광역급행버스 운행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손실 지원(구성 지방자치단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협조체계 활용)

(4) 소요예산

- 소요예산은 2,650억 원으로 계획기간중 대부분(2,620억 원, 98.9%) 지출예정
- 국가 141억 원(5.3%), 특별연합 28억 원(1.0%), 시·도 293억 원(11.1%), 기타 2,189억 원(82.6%)

〈표 6-10〉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954	808	788	35	35	2,620	30	2,650
	국가	87.5	13	10	10	10	131	10	141
	특별연합	10.5	17	.	.	.	28	.	28
	시·도	177	23	23	25	25	273	20	293
	기타	679	755	755	.	.	2,189	.	2,189
① 부울경 통합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소계	7	10	.	.	.	17	.	17
	국가
	특별연합	7	10	.	.	.	17	.	17
	시·도
	기타
②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소계	942	788	788	35	35	2,588	30	2,618
	국가	86	10	10	10	10	126	10	136
	특별연합
	시·도	177	23	23	25	25	273	20	293
	기타	679	755	755	.	.	2,189	.	2,189
③ 광역간선급행버스 체계 (BRT) 구축·운영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④ 부울경광역급행버스 도입	소계	5	10	.	.	.	15	.	15
	국가	1.5	3	.	.	.	4.5	.	4.5
	특별연합	3.5	7	.	.	.	10.5	.	10.5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업계획 및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자료 제공 등 각종 지원, 협력
- 사업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 방안 마련, 사업 관련 관할 지역 기초지자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 논란 해결 노력

5. 사무 ④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

1) 사무 필요성

-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은 전지구적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 과제
- 부울경 지역의 주력산업은 중화학, 기계 공업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친환경·저탄소화로 체질전환 없이는 생산위축이 불가피

〈표 6-11〉 산업별 탄소배출 현황 및 탄소세 부과영향

순위	탄소배출량	생산비용 상승	생산비중 하락
1	1차 금속제품	1차 금속제품	운송장비
2	운송서비스	금속가공제품	1차 금속제품
3	화학제품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4	석탄 및 석유제품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5	비금속 광물제품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자료 : 한국은행(2021).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산업지원 체계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은 산업정책으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부울경의 탄소중립 노력을 위한 사회적, 환경적 여건의 개선에도 기여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탄소중립산업 추진 기반의 안정적 구축 및 지역 자체추진역량 확보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산업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연구역량 강화 추진

(2) 방향

- 중앙정부 대형 사업의 연계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를 통해 자체적인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정부의 공고한 정책 우위, 권한과 자원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특별연합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탄소중립 산업 분야의 대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형사업을 통한 지역에 대한 지원의 안정적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
 - 부울경 3개 시·도와 중앙정부 관계부처 간 초광역지원협약 등 국가지원의 차별화된 근거를 충분히 활용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R&D 사업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충분히 진행,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등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 노력 필요
- 초광역권 차원의 자체적인 탄소중립기반 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과제 도출
 -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서는 산업육성의 자주성 확보가 중요
 - 지역 산업구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한 스스로의 정책계획 수립 및 과제 모색 노력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임
-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무임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기후위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9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9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은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관 설치, 연구수행, 지원 등을 위한 사무임(『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 제2항)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국가 시책과 부울경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 제2항)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발굴사업

○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을 위한 발굴사업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

-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

- 탄소중립종합기술원 설립
- 2050 탄소중립 실현 CO2 해외저장소 확보 전주기 실증사업
- 부울경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①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2억 원(연간)

○ 사업내용

- 탄소중립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마련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주요 인력의 전문위탁교육 실시

② 탄소중립종합기술원 설립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30년

○ 사업비: 1,430억 원

○ 사업내용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술 실증화 국가기관인 탄소중립종합기술원 설립
- 탄소중립 선도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화 수행
- 다탄소 배출산업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전환 기술개발 및 적용
- 지역별 특성화된 저탄소·그린테크기업 육성
- 분야별 탄소중립 실증화 전문가 그룹 및 차세대 전문가 육성

③ 2050 탄소중립 실현 CO2 해외저장소 확보 전주기 실증사업(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실증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30년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 CCUS²⁰⁾ 핵심기술 개발 실증 및 연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다부처 사업
- 주요 과업
 - 탄소 포집 실증 테스트 구축 및 국내외 포집 기술 경제성 비교
 - 정제, 저장, 육상운송 실증 및 CO₂ 해상수송선 설계 제작
 - CO₂ 주입 공정기술 및 안정성 평가기술 실증
 - 해외 현지 법률 검토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해외 육·해상 저장소 확보 사업화



〈그림 6-12〉 CCUS 기본 개념

④ 부울경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150억 원(연간)

○ 사업내용

- 탄소중립산업 기업지원(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지원)
- 주요 지원 사업
 - R&D 과제 지원: 과제당 10억 원 규모
 - 비R&D 프로젝트별 자유 공모 과제 지원: 사업화 및 기술지원 과제, 5억 원 규모

20)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발전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한 후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거나 화학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는 기술(K-CCUS 추진단)

(3) 추진 주요 사항

-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은 특별연합이 산업동향, 인력수요를 토대로 타당성 높은 인력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 내 대학, 교육역량 높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
 - 양성인력의 탄소중립 기반 구축 사업 참여 기회 모색 등 교육과 산업간 유기적 연계 노력
- 탄소중립종합기술원 설립은 UNIST의 탄소중립융합원을 모태로 탄소중립기술원을 설립, 탄소중립 전문 R&D 기관으로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3단계 추진계획을 참조, UNIST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노력

태동기 (~2023년)		도약기 (2024년~26년)		확장기 (2027년~30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IST에 탄소중립 융합원 설립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IST 부설 '탄소 중립종합기술원' 승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경남에 분원 설치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산업분야 별 전문인력) 16명 채용 연구장비 운영은 연구지원본부(UCRF) 기술원 참여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산업분야 별 전문인력) 30명 채용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기업지원 사업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산업분야 별 전문인력) 40명 채용 특화분야 및 지역 주력산업 지원 사업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탄소중립 분야 관련학과 연구공간 중심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종합기술원 별도 공간 구축 계획 수립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원 인프라 구축 지자체 인프라 제공 (연구공간, 생활공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기술개발 연구 인프라 구축 CCUS 기술,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 기술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실증화 장비 설치 분석, 소자공정, 기기공, 클린룸 등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특화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특화분야 핵심장비 구축

〈그림 6-13〉 탄소중립종합기술원의 단계별 추진방안

- CO2 해외저장소 확보 전주기 실증사업과 같은 국가공모사업 참여는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부울경 관련 출연 전문기관, 관련 민간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당성 높은 사업계획을 준비
-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탄소중립 산업 동향, 지역산업 현황 및 기술 수요, 연구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거쳐 지원계획을 마련한 후, R&D, 사업화지원 사업 추진
 - 탄소중립 기반구축과 관련성 높은 타 초광역협력 과제 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모색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소요예산은 총 2,190억 원(사업비 미정사업 제외)

- 국가 1,016억 원(59.2%), 특별연합 624억 원(40.8%)을 부담
- 계획기간중 소요예산은 1,640억 원으로 총소요예산의 74.9% 점유
 - 국가 1,016억 원(62.0%), 특별연합 624억 원(38.0%)임

〈표 6-12〉 초광역 탄소중립산업 기반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232	302	302	402	402	1,640	550	2,190
	국가	151.2	191.2	191.2	241.2	241.2	1,016	280	1,296
	특별연합	80.8	110.8	110.8	160.8	160.8	624	270	894
	시·도
	기타
①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소계	2	2	2	2	2	10	.	10
	국가	1.2	1.2	1.2	1.2	1.2	6	.	6
	특별연합	0.8	0.8	0.8	0.8	0.8	4	.	4
	시·도
	기타
② 탄소중립 종합기술원 설립	소계	80	150	150	250	250	880	550	1,430
	국가	60	100	100	150	150	560	280	840
	특별연합	20	50	50	100	100	320	270	590
	시·도
	기타
③ 2050 탄소중립 실현 CO2 해외저장소 확보 전주기 실증 사업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④ 부울경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소계	150	150	150	150	150	750	.	750
	국가	90	90	90	90	90	450	.	450
	특별연합	60	60	60	60	60	300	.	300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지역 내 홍보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대형사업 확정 및 국비확보를 위한 특별연합과의 공동대응 노력

6. 사무 ⑤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1) 사무 필요성

- 탄소중립의 강조에 따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적인 수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 급증
 - McKinsey(2017)에 따르면 수소 수요 급증(2020년 90백만 톤 → 2050년 546백만 톤)으로 2.5조 달러의 부가가치 및 3,0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정부는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2021. 10.)에서 청정수소 경제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 전 주기 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하는 등 국가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부울경 지역은 성공적인 수소경제권 실현의 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소산업을 지역의 미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선박·항만·모빌리티 등을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가 이미 조성, 2,246개 사의 사업체, 21,607명의 근로자를 보유, 국내 수소산업 생산액의 28.0%를 창출
 - 수소 생산에서 활용의 관련 단계에서 연구기관, 전·후방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는 강점

〈표 6-13〉 부울경 지역 수소 분야 산업 현황(2019년)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부울경	부산	972	7,219	1,272,087	464,527
	울산	401	5,319	1,329,047	494,464
	경남	873	9,069	3,020,871	913,294
소 계		2,246	21,607	5,622,005	1,872,285
기타 권역		7,882	69,695	14,463,297	5,600,380
총 계		10,128	91,302	20,085,302	7,472,665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기반의 안정적 확립 및 지역 자체추진역량 확보
 - 부울경 지역을 우리나라 수소경제 산업의 선도하는 대표적 수소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권 차원의 산업육성 정책 추진 및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방향

- 중앙정부 대형 사업의 연계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를 통해 자체적인 수소경제권 구축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정부의 공고한 정책 우위, 권한과 자원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특별연합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수소산업 분야 대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형사업을 통한 지역에 대한 지원의 안정적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
- 부울경 3개 시·도와 중앙정부 관계부처 간 초광역협력 양해각서 등 국가지원의 차별화된 근거를 충분히 활용
- 수소경제권 실현에서 부울경 지역의 차별적 우위를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함

○ 초광역권 차원의 자체적인 수소경제권 수립 및 과제 도출

-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의 지역 주도성 확보가 중요
- 지역 산업구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한 스스로의 정책계획 수립 및 과제 모색 노력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수소산업 기술개발, 수소산업 기업 등 유치, 수소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임
- 사무의 법적 근거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 법률과 별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시·도 사무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자가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음([별표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3개 시·도 합의로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일련의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은 정부의 부울경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임
 - 부울경 자체계획인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차원의 계획수립을 요구하지 않음
 - 충분한 연구수행 역량을 지닌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등을 통해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
- 수소산업의 육성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전기차 보급 등의 추진을 위한 사무임
- 수소산업 기술개발은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권리 확보 및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무임

- 수소산업 기업 등 유치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을 각종 시설(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 등) 등의 유치를 위한 사무임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데, 출범 초기 특별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
 - 관련 권한의 법·제도적 보장 기반 미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미확보
-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행정적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와 적극적인 협력 및 법적 기반 확보 노력
 - 특별연합은 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 기획, 지자체 및 이해 관계자 간 조정 업무 등을 맡고, 인센티브 지원 실무는 유치시설의 입지를 원하는 시·도가 수행
 - 첨단산업 분야 기업 등의 부울경 유치를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 검토
- 수소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은 수소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로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자문, 학술대회 개최, 참가 등 사무를 수행
 -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초기에 대규모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
 - 대형 국가과제의 공모 지원, 기존 활성화된 사업, 행사에 대한 지원 등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서 사업 범위를 확대

(2) 발굴사업

-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을 위한 발굴사무

(수소산업의 육성)

- 부울경 수소버스(저상) 운행 및 충전소 구축
- 부울경 수소버스(저상) 공동구매 추진
- 부울경 수소버스(고상) 운행 시범사업
-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
- 수소배관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수소배관망 구축 추진

(수소산업 기술개발)

-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
- 극저온 액체수소 저장 이송 핵심기자재 시험평가 체계 구축
- 초광역 협력 수소 규제자유특구
- 수소연료전지 BOP(부품) 신뢰성 구축센터 구축
-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원전 연계 수전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해상 유기계 폐기물 열분해 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 친환경 수소내연기관 개발사업
-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 CCU기반 수소 청정생산 플랫폼 기술·개발 실증

- 풍력기반 그린 수소 생산·활용 실증단지 구축사업
- 디지털 수소 생태계 기반 제로 이미션 스마트팜 실증화 단지 구축

① 부울경 수소버스(저상) 운행 및 충전소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6년(2022년~)
- 사업비: 160억 원
- 사업내용
 - 부울경 지역의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망 구축
 - 부울경 간 광역노선에 저상 수소버스를 운행하고, 버스노선 운영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추진
 - 부울경 수소버스의 공동 로고 제작 및 사용

② 부울경 수소버스(저상) 공동구매 추진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5년(2022년~)
- 사업비: 수요량에 따라 변동
- 사업내용
 - 2025년까지 총 624대의 저상 수소버스 구매를 추진
 - 공동구매를 통해 100대 이상의 공동구매를 진행할 경우 10대 단위별 인센티브가 제공
 - 부울경 지역의 저상 수소버스를 공동으로 구매할 경우 약 48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

③ 부울경 수소버스(고상) 운행 시범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투입시점 기준)
- 사업비: 18.9억 원
- 사업내용
 - 부울경 수소버스 홍보
 - 수소버스 운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④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372억 원

○ 사업내용

- 항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
- 수소를 활용한 하역장비와 선박, 드론 등을 개발
-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전력 공급망 구축
- 물류 운송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그림 6-14〉 그린 수소항만 조성 계획

⑤ 수소배관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12억 원

○ 사업내용

- 부울경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에서 주요 시설로의 수소이송을 위해 배관망 구축 확대가 예상됨
- 수요 예측을 통한 주요 거점지역 간 연계 계획 수립
-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⑥ 수소배관망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4~2028년
- 사업비: 1,400억 원
- 사업내용
 - 동남권 수소산업 벨트구축을 위한 핵심 기간시설인 수소배관망 구축
 -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을 연결하는 140km의 수소배관망 구축
 - 배관망을 통해 수소를 대량 이송함으로써 운송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



〈그림 6-15〉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안)

⑦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사업비: 352억 원
- 사업내용
 - 친환경 플라즈마 소각 모듈을 탑재한 다목적 해양쓰레기 처리 선박 확보 및 운영
 -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동결파쇄기술 개발
 - 친환경 연료 활용 선박 전력공급 기술개발
 - 해양쓰레기 해상 처리시스템 제작 및 검증, 운항 실증 수행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⑧ 극저온 액체수소 저장 이송 핵심기자재 시험평가 체계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1,200억 원
- 사업내용
 - 액체수소 저장·운송 시스템 제작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기술 지원, 성능·실증평가 및 부품 및 제품 실용화 지원

⑨ 초광역 협력 수소 규제자유특구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4년(실증사업 기준)
- 사업비: 3,000억 원
- 사업내용
 - 초광역 협력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수소사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
 - 생산·공급 : 부울경 항만특화 수입, 생산수소 부울경 수소배관망 실증
 - 저장·운송 : 수소캐리어 암모니아 및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
 - 보급·활용 : 수소기반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 보급·활용 실증

⑩ 수소연료전지 BOP(부품) 신뢰성 구축센터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290억 원
- 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 BOP(부품)의 분석 및 성능평가, 시험·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원기관 설립
 - 수소연료전지 BOP 기술개발 및 관련 기업을 지원
 - 주요 업무
 - 스택성능평가장비 등 신뢰성 장비, 연구 및 분석용 장비 및 시설 구축
 - 연료전지 관련 제작 및 상용화 기술 지원
 - 신뢰성 지원센터 공인인증기관 취득
 - 연료전지 시스템 및 공정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교육 실시

⑪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원전 연계 수전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사업비: 200억 원

○ 사업내용

- 고온의 열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하여, MW급 고온 수전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개발 목표
 - 해수 고온 수전해를 위한 고내구성 전극 촉매 개발
 - 해수 직접 이용으로 인한 침전물 및 염소 생성 억제 기술 개발
 - KW급 프로토 타입 고온 수전해 시스템 개발
 - 시스템 scale-up을 통한 MW급 고온 수전해 시스템 설계 및 운전전략 개발
 - 원자력발전소와의 연계를 통한 MW급 고온 수전해 시스템 실증

⑫ 해상 유기계 폐기물 열분해 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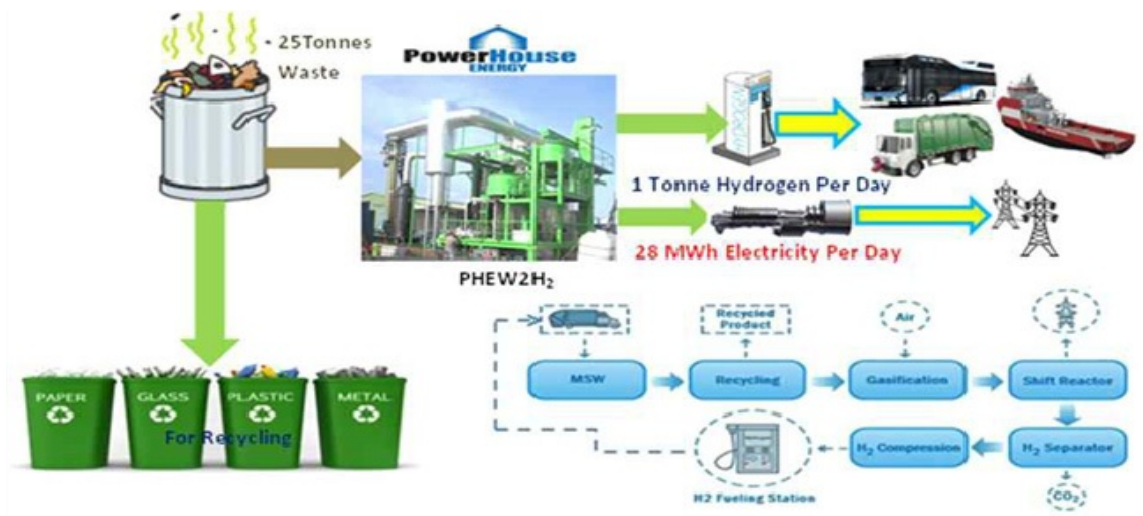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250억 원

○ 사업내용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연소를 통한 에너지 회수만이 가능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통해 수소 생산 가능성을 모색
- 개발 목표
 - 해양폐기물의 전처리공정 개발
 - 해양폐기물의 파쇄 및 공급 장치 개발
 - 해양폐기물 가스화 공정 및 합성가스 생산기술 개발
 - 해양폐기물 유래 합성가스 이용 고순도 수소생산기술 개발
 - 고순도 수소 정제, 생산 기술 개발



〈그림 6-16〉 폐자원을 활용한 수소생산 개념도(Powerhouse Energy)

⑬ 친환경 수소내연기관 개발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500억 원

○ 사업내용

- 기존 내연기관(디젤, LNG)의 부분 개조를 통한 수소 연소 엔진 개발
- 수소 연소 엔진 시제품 제작을 통한 실증연구 수행
- 주요 과업
 - 수소 연소 엔진의 유해물 배기량 측정
 - 배기 시스템 및 부품 구성 완성도 재고
 - 차량 안전성 확보
 - 차량 성능 시험

⑭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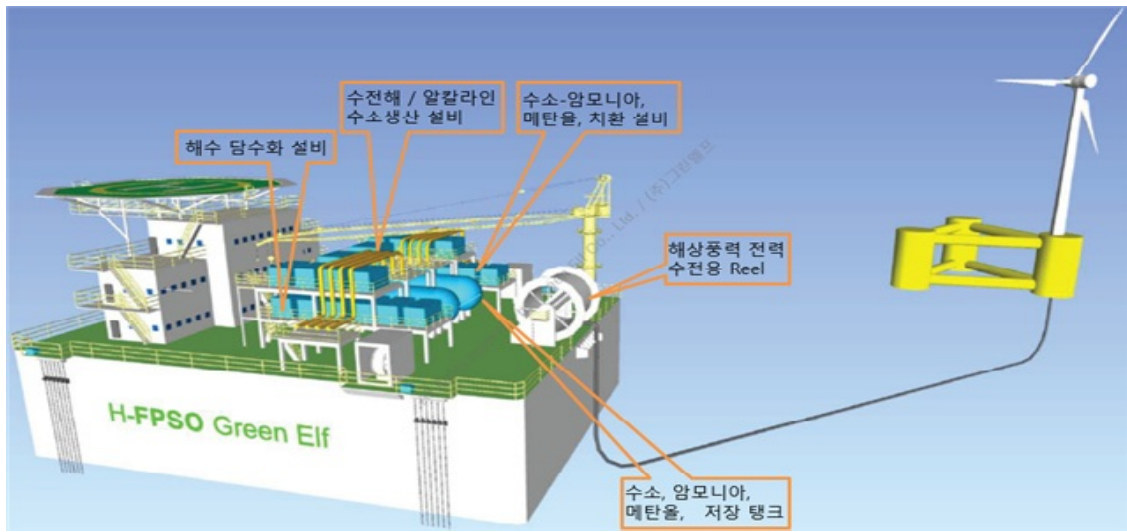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사업비: 460억 원

○ 사업내용

-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 선박 기술개발을 통해 그린수소 수요에 대응
- 1MW급 재생에너지 연계 해양 수소생산 선박 설계 및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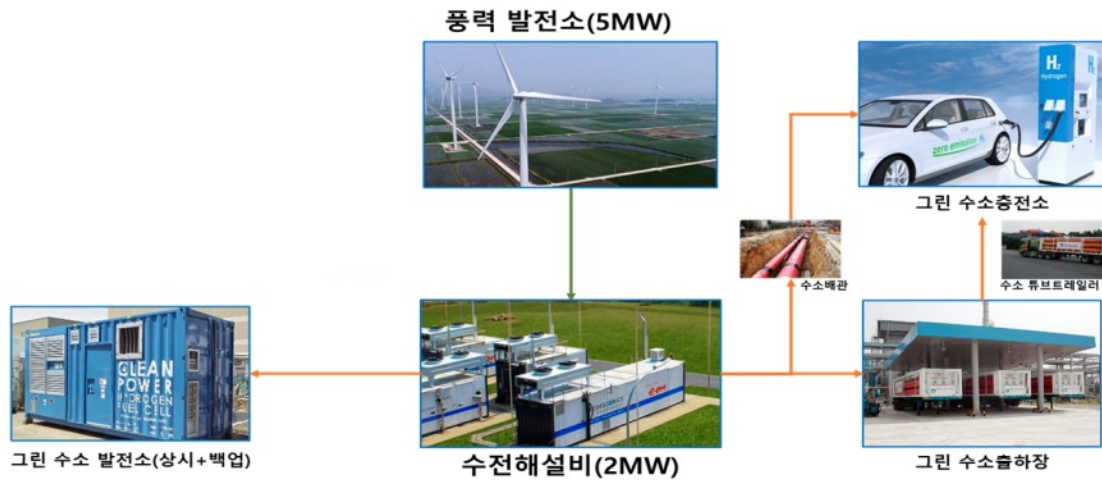
〈그림 6-17〉 1MW급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 선박

⑮ CCU기반 수소 청정생산 플랫폼 기술·개발 실증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1,000억 원
- 사업내용
 - 연구기관,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 협력을 통한 수소 청정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

⑯ 풍력기반 그린 수소 생산·활용 실증단지 구축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6년
- 사업비: 275억 원
- 사업내용
 - 풍력발전 및 수전해 설비를 설치하여 수요 대응형 그린수소 생산
 - 풍력기반 그린 수소 생산, 유통 및 활용 모델 실증



〈그림 6-18〉 풍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테스트베드 체계

⑰ 디지털 수소 생태계 기반 제로 이미션 스마트팜 실증화 단지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1,230억 원

○ 사업내용

- 수소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및 스마트팜 콜드체인, 스마트팜용 연료전지 및 기자재 실증

(3) 추진 주요 사항

- 수소산업 육성 사무의 수소버스 운행, 버스 공동구매, 충전소 구축 사업은 시범사업, 초기단계 사업의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고, 향후 지속 여부의 결정은 수소차 산업 동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 주민들이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 관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초광역 협력의 주민 체감도 측면에서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시범사업으로서의 긍정적 역할이 기대
 - 그런데 차세대 친환경차 표준으로서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 가능성의 우위에 있으며,²¹⁾ 국내 유일의 수소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역시 전기차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
 - 수소차 개발이 수소산업 기술 확보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수소차의 대중화 가능성은 불투명

21) 한 예로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환은 수소차가 향후 전체시장의 10~20% 수준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전기차의 우위를 부인하지 않음. 단, 전기차는 독일, 일본이 앞서가고 있어 팔로워가 되는 것보다는 수소차의 퍼스트 무버가 되는 편이 낫다며 수소차 산업 준비의 필요성 강조(경남CBS. 2020. 5. 29. 시사포커스 경남)

- 계획기간 내 시범사업으로서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되, 확대, 지속 운영 여부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 수소배관망 구축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 추진
 - 부울경 지역 여건에 맞게 수소배관망 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무 진행
 - 부산: 그린 수소 항만조성사업과 연계한 항만 내 수소 수요처 확보 등
 - 울산: 산단 내 주요기업 수소생산 확대 방안 및 공급처 확보 등
 - 경남: 창원 스마트산단 내 수소 수요처 확보 및 통영 LNG 기지 내 수소 생산 및 저장 설비 확대방안 검토 등
- 수소산업 분야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은 대부분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사업 목표와 주요 내용, 추진형태의 기본적인 사항이 결정되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자체추진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계획기간 중에는 국가지원의 안정적 지속 및 확대를 위해 부울경 초광역권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성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 필요
- 수소산업 기업 등 유치, 수소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은 사업발굴 노력 추진
 - 수소산업 기술개발 사무의 각종 R&D 사업의 원활한 지원확보, 사업운영을 위해 중요
- 수소경제권 실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부울경권 수소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운영을 국가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 검토
 - 수소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 관련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소요예산은 총 1조 660억 원(미추정사업 제외)
 - 국가 6,351억 원(59.6%), 특별연합 3,597억 원(33.7%), 기타 712억 원(6.7%)
- 계획기간중 소요예산은 1조 388억 원으로 총소요예산의 97.0%점유
 - 국가 6,195억 원(59.6%), 특별연합 3,481억 원(33.5%)임, 기타 712억 원(6.9%)

〈표 6-14〉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2,656	3,261	1,907	1,552	1,012	10,388	272	10,660
	국가	1,589	1,899	1,119	974	616	6,195	156	6,351
	특별연합	788	1,091	716	515	372	3,481	116	3,597
	시·도								
	기타	279	272	73	64	24	712		712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① 부울경 수소버스(저상) 운행 및 충전소 구축	소계	40	40	40	40	-	160	-	160
	국가	28	28	28	28	-	112	-	112
	특별연합	12	12	12	12	-	48	-	48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② 부울경수소버스(저상) 공동구매 추진	소계	수요량에 따라 사업비 변동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③ 부울경수소버스(고상) 운행 시범사업	소계	18.9	-	-	-	-	18.9	-	18.9
	국가	4.5	-	-	-	-	4.5	-	4.5
	특별연합	5.1	-	-	-	-	5.1	-	5.1
	시·도	-	-	-	-	-	-	-	-
	기타	9.3	-	-	-	-	9.3	-	9.3
④ 부울경 그린수소 항만 조성사업	소계	86	75.1	86	81.1	44	372	-	372
	국가	39	33.8	38.7	36.5	19.8	168	-	168
	특별연합	41	33.8	38.7	36.5	19.8	170	-	170
	시·도	-	-	-	-	-	-	-	-
	기타	6	7.5	8.6	8.1	4.4	35	-	35
⑤ 수소배관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소계	12	-	-	-	-	12	-	12
	국가	6	-	-	-	-	6	-	6
	특별연합	6	-	-	-	-	6	-	6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⑥ 수소배관망구축 추진	소계	-	282	282	282	282	1,128	272	1,400
	국가	-	161	161	161	161	644	156	800
	특별연합	-	121	121	121	121	484	116	600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⑦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건조 및 실증	소계	88	88	88	88	-	352	-	352
	국가	56	56	56	56	-	224	-	224
	특별연합	20	20	20	20	-	80	-	80
	시·도	-	-	-	-	-	-	-	-
	기타	12	12	12	12	-	48	-	48
⑧ 극저온 액체수소 저장 이송 핵심기자재 시험평가 체계 구축	소계	240	240	240	240	240	1,200	-	1,200
	국가	160	160	160	160	160	800	-	800
	특별연합	80	80	80	80	80	400	-	400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⑨ 초광역 협력 수소 규제자유특구	소계	1,500	1,500	-	-	-	3,000	-	3,000
	국가	900	900	-	-	-	1,800	-	1,800
	특별연합	400	400	-	-	-	800	-	800
	시·도	-	-	-	-	-	-	-	-
	기타	200	200	-	-	-	400	-	400
⑩ 수소연료전지 BOP(부품) 신뢰성 구축센터 구축	소계	61	61	61	61	46	290	-	290
	국가	20	20	20	20	20	100	-	100
	특별연합	16	16	16	16	16	80	-	80
	시·도	-	-	-	-	-	-	-	-
	기타	25	25	25	25	10	110	-	110
⑪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원전 연계 수전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소계	50	50	50	50	-	200	-	200
	국가	30	30	30	30	-	120	-	120
	특별연합	20	20	20	20	-	80	-	80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⑫ 해상 유가계 폐기물 열분해 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소계	50	50	50	50	50	250	-	250
	국가	25	25	25	25	25	125	-	125
	특별연합	25	25	25	25	25	125	-	125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⑬ 친환경 수소내연기관 개발사업	소계	100	100	100	100	100	500	-	500
	국가	60	60	60	60	60	300	-	300
	특별연합	30	30	30	30	30	150	-	150
	시·도	-	-	-	-	-	-	-	-
	기타	10	10	10	10	10	50	-	50
⑭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소계	120	120	120	100	-	460	-	460
	국가	70	70	70	67	-	277	-	277
	특별연합	33	33	33	24	-	123	-	123
	시·도	-	-	-	-	-	-	-	-
	기타	17	17	17	9	-	60	-	60
⑮ CCU기반 수소 청정생산 플랫폼 기술·개발 실증	소계	150	160	280	280	130	1,000	-	1,000
	국가	100	100	200	200	100	700	-	700
	특별연합	50	60	80	80	30	300	-	300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⑯ 풍력기반 그린 수소 생산·활용 실증단지 구축사업	소계	20	75	60	60	-	215	-	215
	국가	20	75	60	60	-	215	-	215
	특별연합	-	-	-	-	-	-	-	-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⑰ 디지털 수소 생태계 기반 제로 이미션 스마트팜 실증화 단지 구축	소계	120	420	450	120	120	1230		1230
	국가	70	180	210	70	70	600		600
	특별연합	50	240	240	50	50	630		630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수소버스 사업 관련 충전소 구축 등 협력·지원
- 지역내 수소배관망 구축 입지 확보 협력·지원
- 수소산업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및 지역내 홍보

7. 사무 ⑥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1) 사무 필요성

- 부울경은 국내 조선 산업 전체생산액의 67.2%를 창출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표 6-15〉 부울경 지역 조선분야 산업현황(2019년)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부울경	부 산	2,088	22,895	5,273,237	1,951,723
	울 산	980	35,798	15,820,379	5,617,282
	경 남	2,562	64,928	24,541,458	7,795,087
소 계		5,630	123,621	45,635,074	15,364,092
기타 권역		8,812	88,823	22,229,739	7,140,090
총 계		14,442	212,444	67,864,813	22,504,182

- 탄소중립 기조가 날로 강조되는 오늘날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디지털화가 절실
 - 부울경 지역은 글로벌 TOP 수준의 생산 기반 외에도 관련 분야 대학, 연구소 등이 다소 포진해 있고,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경험에 적지 않음
 - 그러나 친환경 선박 핵심 기자재 경쟁력이 부족해 MAN-ES, WIN-GD 등 외국 전문기업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디지털 전환이 저조하다는 한계
- 부울경 초광역 수준에서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노력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친환경 조선산

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기반의 안정적 확립 및 지역 자체추진역량 확보
 - 전통적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첨단친환경 지향적 고도화를 통해 미래 주력산업으로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방향

- 중앙정부 대형사업의 연계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를 통해 자체적인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구축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정부의 공고한 정책 우위, 권한과 자원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특별연합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수소산업 분야 대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형사업을 통한 지역에 대한 지원의 안정적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
 - 부울경 3개 시·도와 중앙정부 관계부처 간 초광역협력 양해각서 등 국가지원의 차별화된 근거를 충분히 활용
- 초광역권 차원의 자체적인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과제 도출
 -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의 지역주도성 확보가 중요
 - 지역 산업구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한 스스로의 정책계획 수립 및 과제 모색 노력
 - 친환경조선, 조선기자재, 인력양성, 경영 지원 등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 필요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구성 세부사무는 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부울경 친환경 스마트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임
- 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은 지역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산업,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의 시책 추진에 관한 사무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 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울경 친환경 스마트 조선 기재(機材)산업 육성은 친환경 스마트 조선 기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마찬가지로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발굴사업

○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의 발굴사업

(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 선박기자재 예지보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업
- 부울경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 부울경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
- 스마트 야드 핵심기술 및 기반구축

(부울경 친환경 스마트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

- 극저온 연료탱크 소재 국산화 및 제조공정 스마트화
- 디지털트윈 기반 전기추진선박 핵심부품 실증센터 구축

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31년(2022년~)
- 사업비: 2,540억 원
- 사업내용
 - 「친환경선박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조선산업 전반에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저탄소·무탄소 선박 및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및 실증기술 확보가 필요함
 - 사업 핵심기술 개발 내용
 - 암모니아(무탄소) 연료 기반의 선박 추진 시스템
 - 하이브리드 추진(전기추진) 시스템

② 선박기자재 예지보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6년
- 사업비: 172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민자 12억 원)
- 사업내용
 - 조선업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선박 능동형 유지/보수, 수리 부품 재고 관리, 기자재 A/S 산업 육성, 스마트 안전관리 비대면 선금검사 등을 위한 선박 운항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서비스 가능 플랫폼 개발 목적
 - 주요 과업
 - 3D 디지털 트윈 모델 기반 선박 예지보전 및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 부울경 생산·제조 기자재 3D 모델링 지원 및 디지털 데이터화 지원
 - 선박 향해 데이터 벨류체인 활용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③ 부울경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640억 원

○ 사업내용

- 조선산업 인력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선박 수주량 증가에 대응
- 조선업 생산분야 인력양성 및 공급 확대

④ 부울경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5년(2021년~)

○ 사업비: 111억 원

○ 사업내용

- 해외 영업 능력 및 설계능력이 부족한 소형 조선사의 해외 수주를 지원
- 수주협업체 구성을 통해 설계 및 기자재, 조선 건조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패키지로 제공
- 수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수출 확대, 조선업 종사자 30,000여 명 고용유지 달성
- 주요 업무
 - 선박중개사를 활용한 동남아 수주 활동 지원 및 발주요구서 확보
 - 선가(영업설계/기자재견적/건조가) 산출 체계화 지원
 - 중소형 선박 건조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⑤ 스마트 야드 핵심기술 및 기반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28년

○ 사업비: 2,664.5억 원

○ 사업내용

- 조선소 야드내 물류, 생산 등 전공정 자동화 기술, 최적화된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한 스마트 야드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 스마트 야드 기반, 공장지능화, 효율화, 실증 기술 분야 중심으로 진행

⑥ 극저온 연료탱크 소재 국산화 및 제조공정 스마트화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475억 원

○ 사업내용

- 글로벌 선박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도입 확대에 IMO Type C Tank 형태의 LNG저장용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개발한 고망간강(Hi-Mn) 소재 LNG저장용기 디지털 생산기술 실증을 통해 국내 조선업 및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
- 주요 과업
 - 고망간강 소재 LNG저장용기 자동화 및 스마트화 생산기술 실증
 - 대형 선박 기자재 디지털 비파괴 검사(RT, PAUT 등) 기술 실증
 - 조선소-기자재 기업 연동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 실증
 - 선박 기자재 스마트·디지털 제조 기술 커스터마이징 및 보급/확산

⑦ 디지털트윈 기반 전기추진선박 핵심부품 실증센터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450억 원

○ 사업내용

- 미래 전기추진선박 부품 디지털트윈 엔지니어링 센터, 장비 구축 및 성능평가 인증기관 설립
- 전기추진기 핵심부품 디지털 트윈 및 실증 기술 확보, e-파워 트레인 플랫폼 다양화 추진
- 미래 전기선박 핵심부품 디지털 제조설계를 위한 메타버스 등 MR 구축

(3) 추진 주요 사항

- 발굴사업 대부분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사업 목표와 주요 내용, 추진형태의 기본적인 사항이 결정되어 있음
 -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업운영, 집행 주관업무도 국가 출연기관이 수행
 - 특별연합이나 부울경 3개 시·도는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예산분담, 사업지원 등 제한적 범위에서 역할 수행
 - 장기적으로는 자체추진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계획기간 중에는 국가지원의 안정적 지속 및 확대를 위해 부울경 초광역권 차원에서의 필요성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 필요
- 특별연합이나 시·도의 주도적 참여가 어려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 참여가능 산업주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
 - 국가지원을 지역 자체 역량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연구기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보공유, 컨설팅, 보조금 교부 등 각종 지원 노력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소요예산은 총 6,980억 원
 - 국가 5,012억 원(71.8%), 특별연합 731억 원(10.5%), 기타 1,237억 원(17.7%)
- 계획기간중 소요예산은 6,524억 원으로 총소요예산의 93.5%점유
 - 국가 4,665억 원(71.5%), 특별연합 721억 원(11.2%), 기타 1,128억 원(17.3%)

〈표 6-1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964.3	1,461	1,598.7	1,469.6	1,030.8	6,524	456	6,980
	국가	640.2	1,046.5	1,147.8	1,072.7	757.8	4,665	347	5,012
	특별연합	201	161	161	122	86	731	.	731
	시·도
	기타	123.1	253.5	289.9	274.9	187	1,128	109	1,237
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소계	228	389	469	499	499	2,084	456	2,540
	국가	168	285	343	365	365	1,526	347	1,873
	특별연합
	시·도
	기타	60	104	126	134	134	558	109	667
② 선박기자재 예지보전 메타버스플랫폼 개발사업	소계	43	43	43	43	.	172	.	172
	국가	25	25	25	25	.	100	.	100
	특별연합	15	15	15	15	.	60	.	60
	시·도
	기타	3	3	3	3	.	12	.	12
③ 부울경조선업 생산· 기술인력 양성사업	소계	128	128	128	128	128	640	.	640
	국가	117	117	117	117	117	585	.	585
	특별연합	11	11	11	11	11	55	.	55
	시·도
	기타
④ 부울경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	소계	37	37	37	.	.	111	.	111
	국가	25	25	25	.	.	75	.	75
	특별연합	12	12	12	.	.	36	.	36
	시·도
	기타
⑤ 스마트 야드 핵심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	소계	383.3	669	726.7	604.6	208.8	2,592	.	2,592
	국가	215.2	474.5	517.8	445.7	155.8	1,809	.	1,809
	특별연합	113	53	53	26	5	250	.	250
	시·도
	기타	55.1	141.5	155.9	132.9	48	533	.	533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⑥ 극저온 연료탱크 소재 국산화 및 제조공정 스마트화	소계	55	105	105	105	105	475	.	475
	국가	30	60	60	60	60	270	.	270
	특별연합	20	40	40	40	40	180	.	180
	시·도
	기타	5	5	5	5	5	25	.	25
⑦ 디지털트윈 기반 전기추진선박 핵심부품 실증센터 구축	소계	90	90	90	90	90	450	.	450
	국가	60	60	60	60	60	300	.	300
	특별연합	30	30	30	30	30	150	.	150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관련 지역산업동향, 자료 정보 공유 및 공동협력
- 친환경 조선산업 관련 사업의 지역내 홍보·정보 제공

8. 사무 ⑦ 초광역 자동차 산업 육성

1) 사무 필요성

-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적 자동차 산업은 동력원의 변화, 이른바 ‘4차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ICT 기반으로의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맞고 있음
- 친환경화, 지능화, 서비스화 등 혁신적 변화가 가속화(관계부처 합동, 2019:1), 기계에서 전자제품으로 성격이 변화
 - (친환경화) 내연기관 시장 정체속, 전기 수소차 시장 크게 확대
 - (지능화) IT기업의 적극적 참여속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및 사업화 가속
 - (서비스화) 스마트폰·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
- 자동차 산업은 부울경권의 주요 지역산업중 하나이나,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첨단 자동차로의 전환 대응에는 취약
- 완성차 제조사의 주요 생산시설이 입지해 있으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
 -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친환경차 생산 계획이 불확실

〈표 6-17〉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부울경 지역 생산 상황

제조사	현황
현대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공장에서는 전기차모델인 아이오닉5, 수소차모델인 넥소가 생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내연기관 비중이 큼 울산공장의 전기차 중심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과 부품산업 등에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르노코리아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2022. 5.) 전기차 판매모델이 없으며, 부산공장은 내연기관 차량만 생산 모그룹인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차원의 전기차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중국 제조사인 지리의 플랫폼을 도입해 2026년 자체 전기차 모델 출시 예정
한국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공장에서는 가솔린 경차모델(스파크)만 생산중으로 아직까지 친환경차 생산 계획 없음

- 지역 부품산업의 문제는 더 심각한데, 자동차 산업의 정체성이 근본적 변혁중에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화되면 자동차 부품수는 약 37% 감소될 것으로 예상(BNK경제연구원, 2021: 8)
 - 엔진 및 엔진용 부품은 100%, 동력전달장치 부품은 40% 감소(BNK경제연구원, 2021: 9)
 - 완전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자동차 산업 일자리의 19.3%에 달하는 약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BNK경제연구원, 2021: 9)
 - 이를테면 김종욱 외(2021: 64)의 부울경권의 부산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업체의 84.0%가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
 - 특정 자동차 제조사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거래구조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둔감하고, 부품업체의 영세성으로 충분한 대응역량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술연구소가 없거나 종사자수 50인 미만인 업체가 각각 76%(김종욱 외, 2021: 49)
- 친환경화, 첨단화와 같은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기술 개발, 역량 높은 친환경차 부품기업 육성,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기반의 안정적 구축 및 지역 자체 정책 역량 확보
 -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이 가능한,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능동적 대응 기반을 구축

(2) 방향

- 산업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부울경 지역혁신기관 참여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지역의 강점을 잘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조성 및 초광역권 수준의 산업진흥을 위한 기능 재구조화
- 부울경 지역 자체계획 사업 비중이 큰 만큼, 중앙정부의 안정적 지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자동차산업 육성 사업의 다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참여가 아니라, 지역주도로 기획한 결과물임
 - 특별연합 출범 초기단계에는 자체재원 확보가 쉽지 않고, 대형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 안정적 지원확보가 중요
 - 지역계획 사업이라 중앙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적 대응 요구
- 초광역 자동차산업의 핵심은 자동차산업의 친환경화, 디지털화를 위한 성공적 전환에 있는만큼, 초광역 디지털산업 육성, 탄소중립산업기반 구축, 수소경제권 구축 노력과 긴밀하게 연계해 진행할 필요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구성 세부사무는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자동차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자동차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임
 - 초광역권 자동차 산업 육성 사무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부울경권의 광역협력권 산업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 지역산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곤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항의 광역협력권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을 인식하고, 특별연합이 산업육성에 관한 사무를 처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 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동차산업 육성계획 수립은 부울경권 수준에서 자동차산업 육성 전략 및 정책의 기반이 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자동차산업 육성은 부울경권 수준의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교도화, 투자유치, 육성 기반조성 등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무임
- 자동차 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은 부울경권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대학-연구기관간 효과적 협력체계의 공고화에 관한 사무임
- 자동차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는 부울경권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혹은 기업-대학-연구기관간 복수의 협력체계에 의해 추진되는 자동차 관련 R&D 추진에 관한 사무임

(2) 발굴사업

-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의 발굴사업
 - 다중 자동주차 충전(수소, 전기) 플랫폼 개발 및 실증화
 - 미래모빌리티 부품 베틀 개발 협력센터 구축
 - 친환경 수송기기용 전력변환모듈 개발플랫폼 구축
 - 그린모빌리티 부품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험기반 연계 고도화 기술지원
 - 미래모빌리티용 전기 소재·부품 및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 (실증)
 - 부울경 수소미래모빌리티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
 - 초광역 연계 XR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 ① 다중 자동주차 충전(수소, 전기) 플랫폼 개발 및 실증화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800억 원

○ 사업내용

-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충전가능한 다중자동차 충전 플랫폼 개발 및 실증화
- 3개 시·도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개발, 실증, 지원하며, 지역별 장점에 따른 역할분담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성

② 미래모빌리티 부품 버추얼 개발 협력센터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1,200억 원

○ 사업내용

- 자동차부품의 디지털 모델, 성능평가 데이터 확보 및 지원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트윈 기반 부품협력 센터 구축
 - 전기차와 같은 미래모빌리티의 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을 위해 실제 모델과 가상 환경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개발·평가와 이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
- 자동차 부품 인증, 실증, 버추얼 모델 개발 등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기능 수행
- 인력양성: 버추얼 모델 개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실무연계 교육

③ 친환경 수송기기용 전력변환모듈 개발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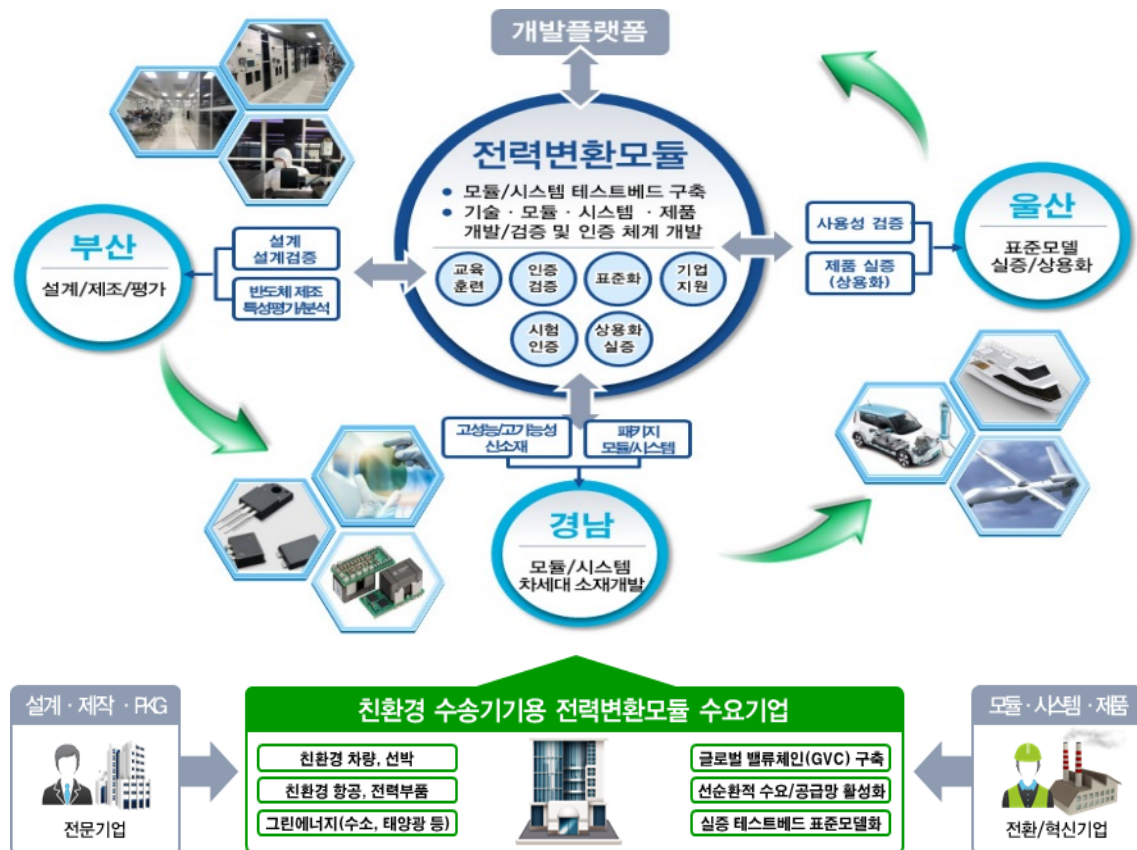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1,080억 원

○ 사업내용

- 고성능, 고효율화 전력변환모듈(소자·패키지·시스템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사용성 평가
- 전력변화모듈 실증·상용화 등 개발플랫폼 구축·운영
- 3개 시·도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개발, 실증, 지원하며, 지역별 장점에 따른 역할분담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성



〈그림 6-19〉 부울경 친환경 수송기기용 전력변환모듈 개발플랫폼 협력체계도

④ 그린모빌리티 부품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험기반 연계 고도화 기술지원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400억 원
- 사업내용
 -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품 기술 고도화 지원
 - 시험(test) 기반 중심: 전장부품 전자파 적합성, 신뢰성, 부품 진동, 유압, 환경, 구동모터 성능, 구동계 성능 및 내구성 관련 시험 지원
 - 인력 양성: 그린모빌리티 부품관련 전문인력 양성
 - 지역별 혁신기관 등의 강점에 따른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성



〈그림 6-20〉 시험기반 연계 고도화 기술지원체계(안)

⑤ 미래모빌리티용 전기 소재·부품 및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 (실증)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450억 원
- 사업내용
 - 미래모빌리티용 전기 소재·부품 및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 전장소재·부품(센서, 모터 등), 에너지소재·부품(중대형 이차전지, 태양전지, 압전, 열전 등), 프레임 경량화 원천기술 개발 등
 - 인증·실증, 마케팅, 네트워킹 지원
 - 인력양성: 기구측 장비를 활용, 장비 테크니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진행
 - 지역별 혁신기관 등의 강점에 따른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성

⑥ 부울경 수소 미래모빌리티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2026년
- 사업비: 400억 원
- 사업내용
 - 수소 미래모빌리티 분야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 기반 확보
 - 낙후 도심을 벤처·창업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검토

⑦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2025년

○ 사업비: 192억 원

○ 사업내용

-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 추진
 - 전기차 전환에서 차량가의 30%이상을 점유하는 배터리 가격저감을 위해서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중요
- (플랫폼 구축)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개발지원에 필요한 보유 기술, 인력, 장비 공동활용과 인력양성 및 네트워킹 지원체계 구축과 재사용 배터리 순환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
- (장비확충 및 기술지원)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재조립 배터리팩 성능 및 안전성 평가, BMS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및 기술지원
- (전문인력양성) 구축 장비 활용한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 기반의 미래차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⑧ 초광역 연계 XR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2025년

○ 사업비: 145.8억 원

○ 사업내용

-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XR*기반 제조공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 eXtended Reality(확장현실): VR, AR, MR 기술을 포괄하는 초실감형 기술
 - XR·AI·디지털 트윈기반 등을 제조설비에 적용,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자 작업능력 증강 및 재조경쟁력 향상 기대
 -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혼류생산 및 유연생산 구조 전환 및 부품개발 지원에 초점
- (플랫폼 구축): XR, CPS(Cyber-Physical Systems), 보안시스템 구축 등
- (장비확충) 전문SW,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s), 자동차 부품 모델링, 해석 및 협업시스템, 생산시뮬레이션 AR 장치 등 도입
- (기술지원) CPS 기반 제품설계 및 공정설계 기술자문, 가상모델 설계 기술지원, 최적생산 공정시뮬레이션 지원 등
- (인력양성) 메타버스 기반 자동차산업 제조 품질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추진 주요 사항

-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을 구성 세부사무로 하는만큼, 부울경 초광역권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을 준비해 체계적인 육성 전략, 정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산업 정체성의 근본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자동차 산업구조를 완전히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역량있는 전문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대학에 연구과제로 의뢰하거나, 이들 기관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획수립 T/F 운영을 통해 타당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수립 과정을 진행
-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차 전환 기조를 감안해 사업 추진
 - 수소차 기술은 관련 사업추진에 시장성, 향후전망을 엄밀하게 진단해 추진
- 각종 육성 사업추진 단계 초기에는 사업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계획의 개선, 보완 노력 진행하면서 사업규모를 확대
 - 지역 자체기획 사업 비중이 큰 편으로, 착수시점부터 단일 대형사업으로 할 경우, 예타 통과까지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
- 3개 시도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간 효과적인 협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 추진
 - XR 등 디지털 분야는 지역내 충분한 역량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관련 기업, 연구기관 유치, 지역 R&D 자원의 재구조화를 통한 역량 확보 등 노력 중요
- 지역내 완성차 업체가 글로벌 협력을 통해 친환경차 개발 노력을 추진중인만큼, 지역내 부품업체의 글로벌 R&D, 납품 네트워크 참여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소요예산은 총 4,897.83억 원으로 모두 계획기간내 지출예정
 - 국가 3,275억 원(66.9%), 특별연합 1,621억 원(33.1%), 기타 1.83억 원(0.0%)

〈표 6-18〉 초광역 자동차 산업 육성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971.64	1,231.37	1,077.42	912.40	705.00	4,897.83	.	4,897.83
	국가	634	795.57	684.45	645.98	515	3,275	.	3,275
	특별연합	337.03	435.19	392.36	266.42	190	1,621	.	1,621
	시·도
	기타	0.61	0.61	0.61	.	.	1.83	.	1.83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① 다중 자동차 충전(수소, 전기) 플랫폼 개발 및 실증화	소계	200	200	200	200	200	1,000	.	1,000
	국가	160	160	160	160	160	800	.	800
	특별연합	40	40	40	40	40	200	.	200
	시·도
	기타
② 미래모빌리티 부품 버추얼 개발 협력센터 구축	소계	240	340	240	220	160	1,200	.	1,200
	국가	150	250	150	150	100	800	.	800
	특별연합	90	90	90	70	60	400	.	400
	시·도
	기타
③ 친환경 수소기기용 전력변환모듈 개발플랫폼 구축	소계	270	225	235	175	175	1,080	.	1,080
	국가	144	120	136	140	140	680	.	680
	특별연합	126	105	99	35	35	400	.	400
	시·도
	기타
④ 그린모빌리티 부품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험기반 연계 고도화 기술지원	소계	80	80	80	80	80	400	.	400
	국가	55	55	55	55	55	275	.	275
	특별연합	25	25	25	25	25	125	.	125
	시·도
	기타
⑤ 미래모빌리티용 전기 소재·부품 및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실증)	소계	120	90	90	90	90	480	.	480
	국가	80	60	60	60	60	320	.	320
	특별연합	40	30	30	30	30	160	.	160
	시·도
	기타
⑥ 부울경 수소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소계	10	190	100	100	.	400	.	400
	국가	10	90	50	50	.	200	.	200
	특별연합	.	100	50	50	.	200	.	200
	시·도
	기타
⑦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	소계	.	58.1	86.5	47.4	.	192	.	192
	국가	.	28.07	40.95	30.98	.	100	.	100
	특별연합	.	30.03	45.55	16.42	.	92	.	92
	시·도
	기타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⑧ 초광역 연계 XR 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소계	51.64	48.27	45.92			145.83		146
	국가	35	32.5	32.5			100		100
	특별연합	16.03	15.16	12.81			44		44
	시·도								
	기타	0.61	0.61	0.61			1.83		1.83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자동차산업 육성 관련 지역산업동향, 자료 정보 공유 및 공동협력
- 자동차 산업 관련 사업의 지역내 홍보·정보 제공
- 육성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내 출자출연 혁신기관 기능 재편, 공공부문 기능 재구조화

9. 사무 ⑧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1) 사무 필요성

-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짧은 기간내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조선, 자동차 산업 등 타 운송수단 산업분야에는 못미침
 - 항공산업은 IT,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며 진입장벽이 높음
 - 우리나라는 매출액 기준 세계 15위(43억 달러, 2015년 기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항공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국, 에스파냐와 같은 중급기종 독자개발 단계에는 집입한 것으로 평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 보잉(961억 달러), 에어버스(719억 달러) 양대 제조사를 중심으로 록히드마틴(461억 달러), U TC(331억 달러) 등 상위권 항공기업은 미국, 유럽의 제조사들이며, 우리나라 최대 항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사천시 소재)의 매출액은 26억 달러로 세계 39위(2015년 기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 상당한 양적 성장, 질적 발전을 이루어냈음에도, 군수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2021년 57.0%)와 기체 구조물 하청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장태진, 2018: 11)
- 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 부울경권 항공산업 관련 생산액은 42.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50.3억 달러)의 74.6%를 점유(2021년 기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 경남 34.5억 달러(68.6%), 부산 8.1억 달러(16.0%)
 - 최대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사업(2조 8120억 원, 사천), 2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 600억 원, 창원) 등 소재(2020년 기준)

- 부울경권 특히 경남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강점과 한계가 곧 지역의 강점과 한계이기도 함
-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울경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
 - 세계 항공산업 규모는 2030년 9,462억 달러로 전망되며 2020~30년 연평균 7.3% 전망할 것으로 예측(관계부처 합동, 2021: 12)
 -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2020년 4,687억 달러로 2019년 대비 36. % 급감하였으나 이후 지속적 성장 속에서 2024년 경 코로나 19 이전(2019년)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항공산업은 PAV/UAM, 탄소중립 대응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기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존 선도국가와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유익한 기회
 -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새로운 미래항공 패러다임이 부상,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중
 - 미래 UAM 및 관련 서비스 산업규모 추정은 상당한 수준으로 2040년 기준 5,000억~1조 달러 이상 수준으로 전망
 - 5,000억 달러(BoozAllenHamilton), 5,430억 달러(NEXA Advisors), 1조 4,740억 달러(Morgan Stanley) (하이투자증권, 2020: 147)
 -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현 노력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배출 저감, 소음억제 등 친환경화에 대한 요구가 큼
 -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항공산업의 탄소중립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항공산업을 부울경권 차원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기반의 안정적 구축 및 지역 자체 정책 역량 확보
 -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항공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초광역 협력 기반을 구축
- 성과높은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부울경권내 성공적 균형발전을 선도
 - 서부경남 주력산업인 항공산업의 추진·협력 범위를 부울경권 전역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서부경남지역이 메가급 산업혁신체계 주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동서격차 완화 노력

(2) 방향

- 산업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부울경 지역혁신기관 참여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지역의 강점을 잘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조성 및 초광역권 수준의 산업진흥을 위한 기능 재구조화
- 권역내 저개발지역의 공간혁신을 통한 우수인재의 안정적 유입,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진행하여, 산업육성의 관련 장애 요인 통제
-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타 사무의 디지털, 친환경 역량 연계 활용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구성 세부사무는 항공산업 육성, UAM항로개발 및 노력임
- 초광역 항공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부울경 광역협력권 사업 수준에서 육성을 위한 사무가 처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 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공산업 육성 사무는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R&D 등 각종 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것임
- UAM 항로개발 및 노력은 미래항공모빌리티인 UAM의 항로개발에 관한 사무임
 - 상용화이전의 개발단계에서도 R&D 결과 실증의 시범운행을 위한 항로의 설정 및 항로 운항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

(2) 발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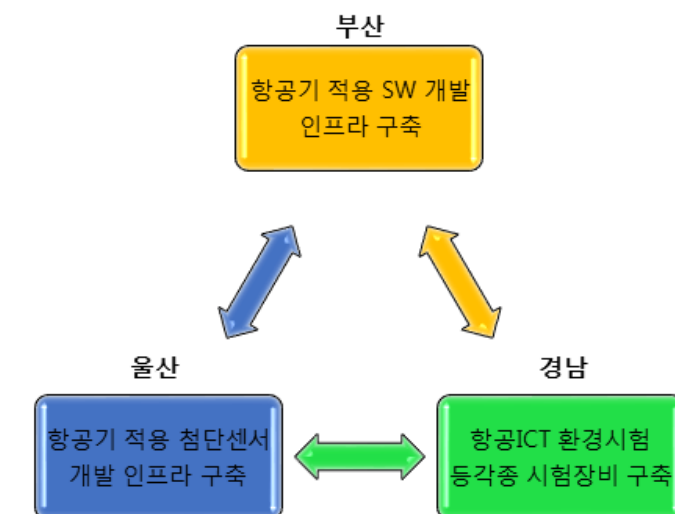
-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의 발굴사업
 - 동남권 UAM 실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영
 -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시범기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① 동남권 UAM 실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영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1,100억 원
- 사업내용
 - UAM 실증센터 설치를 통해 울산, 부산, 경남간 UAM 핵심부품과 해상 및 도심환경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등 각종 지원정책 추진
 - 테스트 베드는 해안 교통망이 고도로 형성되어 있고, 항만물류가 발달한 임해지역의 특성을 감안, 해상지역 중심으로 운영
 -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기반형 생태계 구축 가능

②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1,100억 원
- 사업내용
 - 항공 ICT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민군기술융합 클러스터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 완제기, 기체, 엔진, 부품·소재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항공 ICT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 중요
 - 지역별 기존 축적 역량과 강점에 기초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용이한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그림 6-21〉 항공ICT 관련 지역별 분업 및 협력체계의 예시

③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시범기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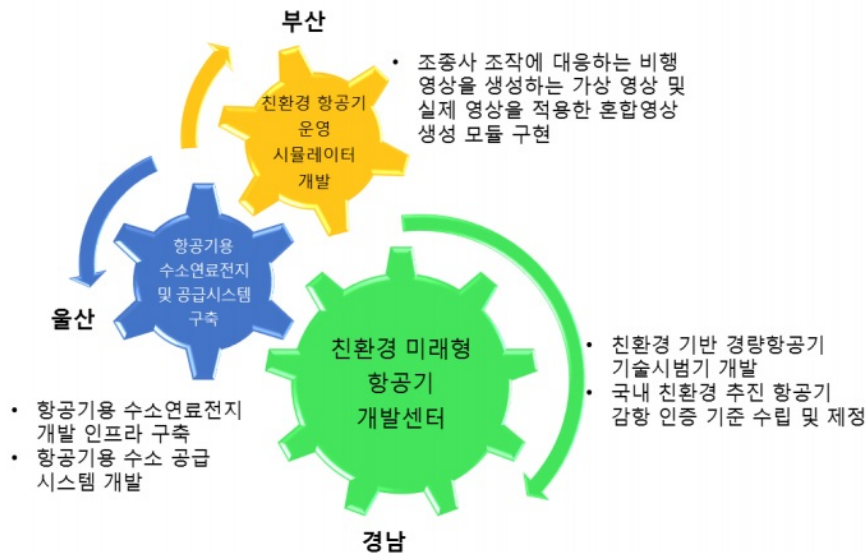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2027년

○ 사업비: 450억 원

○ 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 사용 미래형 친환경 비행체 기술시범기 개발 및 인증체계 마련
 - 수소 추진체 검증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선제적 대응
- 지역별 기존 축적 역량과 강점에 기초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용이한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그림 6-22〉 친환경 기술시범기 개발 등 관련 지역별 분업 및 협력체계의 예시

(3) 추진 주요 사항

- 부울경 지역 상황에 기초한 초광역권 차원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항공산업은 경남의 영향력이 큰 반면, 나머지 시, 도의 발전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그러나 낮은 발전 수준과 별개로 타 시·도도 적지 않은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고, 민간부문의 긍정적 신호도 확인
 - 예) UAM 수직이착륙장 설치 등 실증사업 추진(부산), 하늘자동차 특구, 현대차 UAM 진출 및 미국 법인 설립(울산)
 - 지역의 잠재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별 역할 특화가 필요하며, 초광역 계획에 기초한 시·도 사업간 연계 및 재구조화 요구
- R&D 등 전문역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인재친화적 정책 추진이 뒷받침될 필요
 - 첨단산업 육성에서 인재확보의 어려움은 부울경권 전반의 문제이나, 항공산업이 지역주력 사업

으로 전개되는 사천 등 서부 경남지역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

- 일상생활, 문화, 교육 분야 등 정주여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질적 수준이 우수인재 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학, 연구소 등 협력대상 타 혁신주체의 역량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R&D 기능을 아예 수도권에서 수행하는 기업도 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R&D 센터는 수도권의 대표적 연구클러스터인 판교에 소재
 - 우수인재가 일과 일외의 삶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 유입, 정주를 위한 지역공간 혁신 노력을 구성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
-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친환경추진 기술시범기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등 사업은 수소산업 육성 등 타사무 발굴사업의 디지털, 친환경 역량 노력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소요예산은 총 3,950억 원으로 모두 계획기간내 지출예정
- 국가 1,800억 원(61.0%), 특별연합 1,150억 원(39.0%)

〈표 6-19〉 초광역 항공 산업 육성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480	655	685	655	475	2,950	.	2,950
	국가	220	390	420	440	330	1,800	.	1,800
	특별연합	260	265	265	215	145	1,150	.	1,150
	시·도
	기타
① 동남권 UAM 실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영	소계	240	225	225	225	185	1,100	.	1,100
	국가	140	140	140	140	140	700	.	700
	특별연합	100	85	85	85	45	400	.	400
	시·도
	기타
②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소계	190	350	350	300	210	1,400	.	1,400
	국가	60	200	200	200	140	800	.	800
	특별연합	130	150	150	100	70	600	.	600
	시·도
	기타
③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시범기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소계	50	80	110	130	80	450	.	450
	국가	20	50	80	100	50	300	.	300
	특별연합	30	30	30	30	30	150	.	150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항공산업 육성 관련 지역산업동향, 자료 정보 공유 및 공동협력
- 항공산업 관련 사업의 지역내 홍보·정보 제공
- 항공산업 입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정책적 노력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경남)

10. 사무 ⑨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1) 사무 필요성

- ICT(SW) 디지털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대표적 첨단산업으로 산업 성장 및 혁신에 대한 기여 수준이 높음
 - 2019년 SW산업 부가가치율은 71.9로 제조업 29.3의 2.45배에 달함(한국은행, 2021)
- 부울경 지역 4대 국가산단의 2020년 생산액이 2019년 대비 약 21조 원(10.1%) 급감하는 등 전통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으로의 다변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산업에 대한 부울경 지역의 관심은 전부터 지속
- 우리나라 디지털산업 비중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부울경 비중은 제한적
 - 전자부품등 제조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분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중 수도권 기업수는 73개(서울 32개, 경기 35개, 인천 6개)로 지배적 우위에 있으며, 부울경 소재 기업은 경남지역 3개에 불과(2021년 기준)
- 그러나 다양한 전문역량, 인프라, 협력체계 등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작지 않으며, 전통적 우위를 갖춘 제조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효과가 기대
- 현재 지역의 디지털 신산업 역량이 기대에 못미치는 만큼, 지역차원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광역 차원의 육성정책이 필요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의 안정적 기반 및 지역 자체추진역량 확보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지털 분야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기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첨단화를 촉진

(2) 방향

- 중앙정부 대형사업의 연계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를 통해 자체적인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정부의 공고한 정책 우위, 권한과 자원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특별연합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 대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형사업을 통한 지역에 대한 지원의 안정적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
 - 부울경 3개 시·도와 중앙정부 관계부처 간 초광역협력 양해각서 등 국가지원의 차별화된 근거를 충분히 활용
- 초광역권 차원의 자체적인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과제 도출
 -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의 지역주도권 확보가 중요
 - 지역 산업구조,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한 자체적인 정책계획 수립 및 과제 모색 노력
 - 디지털 분야 연구기관 유치, R&D 수행, 인재육성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 필요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디지털산업 육성 종합정책 수립, 과학 기술분야 연구기관 지역조직 유치, 디지털 신산업 육성,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 기존 제조산업 대규모 디지털전환 촉진, 디지털 융합 혁신인재 양성
- 디지털 육성 종합정책 수립은 부울경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을 위한 산업육성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무(『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정보통신융합법』 제3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지역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등 디지털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디지털 육성 종합정책을 수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융합법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 및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과학 기술분야 연구기관 지역조직 유치는 디지털 신산업 R&D 네트워크의 주요 축으로 역할을 수행할 국가관할 전문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을 유치에 관한 사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지역에 설치되는 국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기관 유치의 중요 인센티브로 역할 가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디지털 신산업 육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 사업 수행에 관한 사무로서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종합정책의 방향에 기초해 각종 사업을 추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
-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은 부울경 지역에 5G 관련 각종 테스트베드 설치 등 구축에 관한 사무로서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수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
- 기존 제조산업 대규모 디지털 축진은 디지털 신기술 인식 확산, 기술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수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
- 디지털 융합 혁신인재 양성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관한 사무로서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수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항)

(2) 발굴사업

-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의 발굴사업
 - (과학 기술분야 연구기관 지역조직 유치)
 - 동남권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
 - (디지털 신산업 육성)
 - 부울경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 영남권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

- 동남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 부울경 제조업 메타버스&비대면 솔루션 구축
- 부울경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

-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
- 5G 특화망 기반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확산

(기존 제조산업 대규모 디지털전환 촉진)

- 디지털 신산업 글로벌 전시회 공동 개최
- 전략산업 AI 기술 접목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중소기업 맞춤형 전환기술 개발지원 사업

(디지털 융합 혁신인재 양성)

- AI융합혁신인재 사업 추진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도입
-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확대

① 동남권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제조업, 의료등 부울경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인공지능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동남권 인공지능 연구소를 2025년 설립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ICT R&D 전문기관 설립
- 정부출연연 융합연구단(ETRI + KERI) 협력사업 추진

② 부울경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1,605억 원

○ 사업내용

- 디지털 신산업 육성의 초광역권 차원의 협력이 가능한 혁신거점을 부울경권내 거점대도시 혹은 주요도시에 구축
- 디지털 신산업 관련 공동 작업, R&D, 공용지원, 교육공간, 체험, 문화 공간 등을 갖춘 복합공간 조성
- 5G, 데이터, AI, 메타버스 등 특화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구축, 및 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부울

경 기업의 실험, 실증, 인증 지원을 고도화

- 기업유치, 육성을 위한 과감한 세제혜택, 정주여건 개선 등의 각종 행정적 방안 모색

③ 영남권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2,300억 원
- 사업내용
 - 지역의 인공지능 역량 향상 및 주력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 지방자치단체별 분절적·소규모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정책·뉴딜 사업의 영남권 내 연계 및 대형화를 모색함으로써 성과 극대화
 - AI기반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능
 - 지역별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 계획’과 연계, ‘영남권 AI’ 발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사업 구성
 - AI 지역거점사업: 영남권 초광역 제조·물류분야 AI 서비스 개발·활용
 - 지역특화 AI 융합사업: 주력산업(기계, 조선, 철강 등)에 AI를 융합하여, 서비스 실증

④ 동남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300억 원
- 사업내용
 - 디지털 트윈기반 제조업 메타버스 구현 등 제조업의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주요 과업
 - 제조업 플랫폼 및 5G 산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제조업 특화 메타버스 기술 개발
 - 메타캠퍼스 구축을 통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메타버스 허브 구축

⑤ 부울경 제조업 메타버스&비대면 솔루션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2,100억 원

○ 사업내용

- 디지털 모델 개발, 디지털 주행평가, 설계협업 메타버스, XR기반 제품수명 실증, 디지털 확장 현실의 다자간 설계협업 등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 메타버스 솔루션 구축 및 제공
- 비대면 분야 신사업 모델 개발 및 위케이션 전환 지원
- 비대면산업육성지원센터, 위케이션센터, 실용화지원센터 운영

⑥ 부울경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200억 원

○ 사업내용

- 현실세계 기반 초광역 메타버스 구현 및 콘텐츠 개발
- 주요 과업
 - 자동차 생산, 정비, 소재산업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 특화된 지역별 플래그십 기업육성 및 인재 양성
 - 부울경 특화(산업단지) 메타버스 구축 기술 공유 및 연계 표준화
- 영상산업과 메타버스 산업 간 연계 방안 마련
- 지역 특화 산업 연계지역 VR·AR 제작 거점센터 운영 지원

⑦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400억 원

○ 사업내용

-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 5G+ 융합서비스 R&D 중심 오픈랩 구축·운영
- 5G+ 공공분야 시험 중심 테스트베드 구축
- 5G+ 스마트팩토리 시험 중심 테스트베드 구축

⑧ 5G 특화망 기반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확산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5년(3년)
- 사업비: 290억 원
- 사업내용
 - 제조 밸류체인을 디지털 연계를 위한 제조업 맞춤형 디지털 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용 확산 노력
 - 노후산업단지 내 가치사슬(value chain)별 5G 특화망을 구축해 스마트 산업 고도화 및 제조혁신 실현을 기대

⑨ 디지털 신산업 글로벌 전시회 공동 개최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디지털 전환 및 ICT 기술의 융합 트렌드 가속화에 맞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NFT 등 ICT 분야 최신기술 및 서비스 전시회 개최
 - 전시회·컨퍼런스를 통한 신기술 인식 확산, ICT 기반 신산업 토대 마련
 - 글로벌 ICT 동향·기술 공유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행사 진행 사항
 - 기간: 매년 9월중 실시(3일간)
 - 장소: BEXCO(부산), UECO(울산), CECO(창원 등)
 - 내용: 전시회, 컨퍼런스, 해외바이어 상담회, IR 투자상담회 등

⑩ 전략산업 AI 기술 접목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1,050억 원
- 사업내용
 -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기계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AI 서비스 개발 지원
 - 관련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경영, 생산, R&D 등 성과제고 지원

⑪ 중소기업 맞춤형 전환기술 개발지원 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1,050억 원

○ 사업내용

- 신속성, 안전성이 담보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 R&D 플랫폼 구축
- 전략산업, 관련 소재부품 산업과 디지털 신산업 및 혁신 R&D를 통합할 수 있는 광역연계형 수요협력 발굴 추진
- 수요중심 디지털 R&D프로젝트를 통한 R&D 불확실성 해소 및 성과 향상 추구

⑫ AI융합혁신인재 사업 추진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연간 75억 원

○ 사업내용

- 지역산업 수요 기반 AI 지능화 및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산학공동 연구 및 산업별 특화 커리큘럼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
 - AI융합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전문 인력 양성

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도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7년

○ 사업비: 381억 원

○ 사업내용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부울경캠퍼스 설치
 - 지역 중소기업의 ICT/SW 분야 인력난과 지역 청년의 ICT/SW 교육 접근성 한계 문제 해소 목적
- 캠퍼스 운영 주요 사항
 - 교육시스템: 해외 혁신 S/W 교육 프로그램(에폴42)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동료 평가제도, 기업 협력 프로젝트 등 제공(2년 비학위 과정)
 - 교육대상: 성인 또는 고졸 이상 학력자
 - 규모/학비: 연간 300명 수준(연 2회, 150명씩 선발)/무료



자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남영준(2019)

〈그림 6-2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서울)의 교육동 및 교육장

⑭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확대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5년
- 사업비: 187.5억 원
- 사업내용
 - ICT 콤플렉스 운영, AI복합교육 실시, 항만·물류, 자동차·조선, 스마트 공정 등 동남권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 지역별 추진 분야
 - 부산시: ICT 콤플렉스 구축·운영, AI블록체인 교육
 - 울산·경남: AI복합교육

(3) 추진 주요 사항

- 디지털 신산업에 관한 지역역량이 아직 부족한만큼, 계획기간중에는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 도약,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
- 발굴사업 대부분은 국가 공모, 국가 프로그램 유치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사업 목표와 주요 내용, 추진형태의 기본적인 사항이 결정되어 있음
 - 계획기간중 지역 자체적인 디지털 신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은 미조성
 - 사무·권한 제약, 재정 부족 문제
 - 국가 공모에서 선정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당성 높은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부울경 초광역권 차원에서의 필요성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 필요
- 필요에 따라 시·도와 협력해 특별연합 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
 - 서울소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동, 부지 등 공간은 서울시에서 제공

- 특별연합이나 시·도의 주도적 참여가 어려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 참여가능 산업주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노력
 - AI 융합 혁신인재 양성 사업은 지원대상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음
 - 특별연합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만큼, 대학이 부울경 시·도 출연전문기관 및 타 연구기관, 전문 기업과의 타당성 높은 연계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필요
- 동남권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은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을 진행하나, 부울경 특별연합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
 - 자동차 생산, 정비, 소재산업 등 전통적 지역우위 산업에서 활용가능한 메타버스 구현 콘텐츠 산업 육성에 초점
 - 산업 투자의 지역적 배분, 거점센터 입지를 둘러싸고 시·도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성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간 협의를 진행
- 디지털 신산업 글로벌 전시회 공동개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기존 K-ICT WEEK를 발전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부울경 공동협력 사례를 적극 소개하는 등 메가시티 차원의 대형 행사로 그레이드-업 추진

(4) 소요예산

- 발굴사업 총소요예산은 1조 239억 원으로 모두 기간 내에 집행(사업비 미정 사업 제외)
 - 국가 8,141억 원(79.5%), 특별연합 2,068억 원(20.2%), 기타 30억 원(0.3%)부담

〈표 6-20〉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1,692.5	2,306.5	2,218	2,062	1,960	10,238.5		10,238.5
	국가	1,271	1,880	1,772	1,659	1,559	8,141		8,141
	특별연합	421.5	426.5	435.5	393.0	391.0	2,067.5		2,068
	시·도								
	기타			10	10	10	30		30
① 동남권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② 부울경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소계	321	321	321	321	321	1,605		1,605
	국가	300	300	300	300	300	1,500		1,500
	특별연합	21	21	21	21	21	105		105
	시·도								
	기타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③ 영남권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	소계	100	500	600	600	500	2,300	.	2,300
	국가	100	500	600	600	500	2,300	.	2,300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④ 동남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소계	60	60	60	60	60	300	.	300
	국가	30	30	30	30	30	150	.	150
	특별연합	30	30	30	30	30	150	.	150
	시·도
	기타
⑤ 부울경 제조업 메타버스 & 비대면 솔루션 구축	소계	420	420	420	420	420	2,100	.	2,100
	국가	300	300	300	300	300	1,500	.	1,500
	특별연합	120	120	120	120	120	600	.	600
	시·도
	기타
⑥ 부울경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	소계	40	40	40	40	40	200	.	200
	국가	20	20	20	20	20	100	.	100
	특별연합	20	20	20	20	20	100	.	100
	시·도
	기타
⑦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	소계	93	108	69	66	64	400	.	400
	국가	70	80	52	49	49	300	.	300
	특별연합	23	28	17	17	15	100	.	100
	시·도
	기타
⑧ 5G 특화망 기반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확산	소계	100	100	90	.	.	290	.	290
	국가	70	70	60	.	.	200	.	200
	특별연합	30	30	30	.	.	90	.	90
	시·도
	기타
⑨ 디지털 신산업 글로벌 전시회 공동 개최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⑩ 전략산업 AI 기술 접목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소계	210	210	210	210	210	1,050	.	1,050
	국가	150	150	150	150	150	750	.	750
	특별연합	60	60	60	60	60	300	.	300
	시·도
	기타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⑪ 중소기업 맞춤형 전환기술 개발지원 사업	소계	210	210	210	210	210	1,050	.	1,050
	국가	120	120	120	120	120	600	.	600
	특별연합	90	90	90	90	90	450	.	450
	시·도
	기타
⑫ AI융합혁신인재 사업 추진	소계	75	75	75	75	75	375	.	375
	국가	60	60	60	60	60	300	.	300
	특별연합	15	15	15	15	15	75	.	75
	시·도
	기타
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도입	소계	1	200	60	60	60	381	.	381
	국가	1	200	30	30	30	291	.	291
	특별연합	.	.	20	20	20	60	.	60
	시·도
	기타	.	.	10	10	10	30	.	30
⑭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확대	소계	62.5	62.5	62.5	.	.	187.5	.	187.5
	국가	50	50	50	.	.	150	.	150
	특별연합	12.5	12.5	12.5	.	.	37.5	.	37.5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디지털 신산업 육성 관련 지역산업동향, 자료 정보 공유 및 공동협력
- 디지털 신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행사의 지역내 홍보·정보 제공

11. 사무 ⑩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1) 사무 필요성

- R&D 역량은 지역 산업이 자생적 혁신성장을 하는 데에 핵심 요인으로 역할
 - 지속적 산업혁신을 유도할 R&D 체계 구축은 산업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
- 부울경 지역 R&D 지표는 산업 주요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R&D 비용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표 6-21〉 부울경 R&D 분야 현황(2019년)

(단위: 개, 명, 백만 원, 건)

구 분		연구개발수행조직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사업화성과
부울경	부산	2,435(4.4%)	16,507(3.1%)	1,581,706(1.8%)	1,472(5.2%)
	울산	663(1.2%)	8,025(1.5%)	1,109,963(1.2%)	425(1.5%)
	경남	2,692(4.8%)	22,807(4.2%)	3,189,524(3.6%)	1,352(4.7%)
소 계		5,790(10.4%)	47,339(8.8%)	5,881,193(6.6%)	3,249(11.4%)
기타 권역		50,089(89.6%)	490,797(91.2%)	83,165,884 (93.4%)	25,238(88.6%)
총 계		55,879(100%)	538,136(100%)	89,047,077 (100%)	28,487(100%)

- 2020년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R-COSTII)결과 부산, 울산은 혁신 추격지역²²⁾, 경남은 혁신 일반지역²³⁾으로 나타났다
- 최상위 등급인 혁신 선도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 대전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구 분	노란색(혁신 선도지역), 녹색(혁신 추격지역), 붉은색(혁신 일반지역), 푸른색(혁신 후발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경기							
2	서울							
3	대전							
4	경북							
5	울산							
6	충북							
7	부산							
8	충남							
9	인천							
10	전북							
11	경남							
12	광주							
13	강원							
14	전남							
15	대구							
16	세종							
17	제주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그림 6-24〉 시·도별 혁신지역 등급의 변화

- 메가 R&D 혁신체계를 구축, 부울경 산학연관 역량 통합, 연계를 촉진하여 자생적 산업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

22) 혁신 추격지역: R-COSTII가 지역 평균의 85% 이상 150% 미만인 지역

23) 혁신 일반지역 : R-COSTII가 지역 평균의 70% 이상 85% 미만인 지역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기반의 안정적 확립 및 지역 자체 역량 확보
 - 분야별 전략 산업 진흥을 견인할 수 있는 R&D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 연구소 설립, 대학-지역 연계협력 강화 노력 등 초광역권 수준의 협력기반 확보 노력

(2) 방향

- 성과의 전략적 극대화 속 균형발전 노력
 - 부울경지역 R&D 혁신주체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통한 R&D 성과 강화
 - 지역 내 국가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지역 내 국가연구기관의 지역 R&D 혁신 주체화를 통한 총체적 R&D 역량 강화
 - 산업-공간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기존 낙후지역에서도 자생력 갖추고 유의미한 역할 가능한 R&D 기관 설치 가능 여건 조성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부울경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 부울경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 부울경 정부출연(연)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
- 부울경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은 부울경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혁신·협력 체계 실현에 관한 사무(『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연구개발 특구의 발전과 특구의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부울경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은 지역별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

- 특별연합 주도로 설치한 연구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화, 생산기능의 유기적 중개역할을 수행 기대
- 부울경 정부출연(연)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은 부울경 지역 소재 중앙정부 출연연구기관의 R&D 역량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무(『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부울경 지역내 중앙정부 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들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지원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산업기술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특별연합이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

(2) 발굴사업

-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의 발굴사업

(부울경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특구 네트워크 구성·운영
- 부울경 연계형 R&D 프로젝트 추진
- 부울경 공동펀드 조성 및 운영 구축
- 전략금속소재 소성가공 자립화 플랫폼 구축

(부울경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

- 부울경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

(부울경 정부출연(연)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

- 부울경 정부출연(연)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

-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

① 연구개발특구 네트워크 구성·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3천만 원(연간)
- 사업내용

- 부울경 지역의 초광역 협업전략 실현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성, 부울경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기술혁신생태계 및 동반성장체계 조성 필요성에 대응
- 부울경권 혁신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기술교류회 개최, 공동사업 발굴 및 기획 추진

② 부울경 연계형 R&D 프로젝트 추진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5억 원(연간)
- 사업내용
 - 부울경 과학기술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R&D 생태계 조성
 - 부울경의 우수기술을 이전하고, 주요 혁신 기술개발
 - 공동 국내·외 마케팅 지원

③ 부울경 공동펀드 조성 및 운영 구축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5억 원
- 사업내용
 - 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창업기업을 위한 집중(공동)투자 펀드 조성 및 운영

④ 전략금속소재 소성가공 자립화 플랫폼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사업비: 450억 원
- 사업내용
 -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소재 부품 개발을 위한 R&D, 경영컨설팅 및 인력 교육·훈련 지원
 - 기업 공동 활용을 위한 중대형 방사단조 장비 구축을 통해 최소 4천톤 이상의 미래 모빌리티 소재 관련 금형/공구간, 내열강 등의 자립화 기여 기대

⑤ 부울경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사업비: 792억 원

○ 사업내용

- 자금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 애로가 있는 부울경 연구소 및 기업의 성장지원 목적
 -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공공기술 사업화와 생산의 상호 유기적 연계 강화
-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3개소(부산, 울산, 경남) 건립
- 특구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부울경 지역의 R&D 역량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⑥ 부울경 정부출연(연)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20억 원(연간, 2023년은 10억 원)

○ 사업내용

- 부울경 지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력 및 공동연구를 통해 산업계의 변화 및 지역현안에 대응
- 미래기술분야 '가족 기업'의 부울경 공동 지정 및 운영
- 정부출연(연) 중심의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⑦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기간내 1단계 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35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산업기술연구소를 지역 대학 및 유관 기관에 설립
 - 1단계(2023~2025년) 3개 소(시범), 2단계(2026~2035년) 20개 소
- 지방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인력을 산·학·연·관 공동 양성
- 주요 설치 방안
 - 선행적 응용연구 수행 및 종합지원 플랫폼 역할: TP, 대학, 중기연구소 네트워크 기반 연구소 설치를 통한 소규모 혁신클러스터 조성
 - 구체적인 정부 응용 R&D 프로젝트 집중형 연구수행: 정부 공모사업 연계 대학 내 연구소

설치

-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지역혁신자원 활용 목적: 국책기관 내 연구소 설치

(3) 추진 주요 사항

-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은 해당 과제 내 사업 및 타 과제 관련사업과의 연계·통합 수행이 진행되어야 개별 사업의 의미있는 성과 창출 및 R&D 혁신체계의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 가능
-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이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운영상 특징을 수용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과제의 다른 사업, 타 친환경 첨단산업 분야 사업, 지혁혁신플랫폼 구축의 대학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고도의 연계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
 -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구·운영 특징(김정민, 독일 최고의 응용과학연구소 프라운호퍼를 가다)
 - 재원조달의 자주성: 연구비의 2/3 가까이를 민간수탁사업으로 조달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아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에 유리한 연건 확보
 - 적극적 협력: 프라운호퍼연구소 내 다양한 분과연구소 간 융합연계 연구, 기업 수탁연구 활발
 - 스피노프 유도: 연구소 연구원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며, 스피노프 기업에 대한 R&D,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
 - 지속적인 연구수요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R&D주체, 우호적인 창업환경 등의 제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운호퍼 고유의 연구·운영상 특징의 실현은 어려움
 - 시범운영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일정 수준 가시적 효과를 생산하려면, 지역 특화 산업분야에서 지역산업-대학-R&D 전문기관간 네트워크 체계가 일정수준 작동하고 있는 산업도시에 TP센터-대학-중소기업 연계 연구소를 프라운호퍼 유형으로 설치해 연구소가 자생적 R&D 기반을 확보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화하도록 지원할 필요
 - 시범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자생적 생태계의 구축과 연계해 설치 확대를 추구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353.2억 원이며, 계획기간 내 지출 예정(사업비 미정 사업 제외)
 - 국가 907.8억 원(61.7%), 특별연합 445.4억 원(32.9%) 부담

〈표 6-22〉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315.3	479.3	269	269	20	1,353.2		1,353.2
	국가	184.2	381.2	171	171		907.8		907.8
	특별연합	131.1	98.1	98.1	98.1	20	445.4		445.4
	시·도								
	기타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① 연구개발특구네트워크 구성·운영	소계	0.3	0.3	0.3	0.3	-	1.2	-	1.2
	국가	0.21	0.21	0.21	0.21	-	0.8	-	0.8
	특별연합	0.09	0.09	0.09	0.09	-	0.36	-	0.4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② 부울경 연계형 R&D 프로젝트 추진	소계	5	5	5	5	-	20	-	20
	국가	3.5	3.5	3.5	3.5	-	14	-	14
	특별연합	1.5	1.5	1.5	1.5	-	6	-	6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③ 부울경 공동펀드 조성 및 운영	소계	5	5	5	5	-	20	-	20
	국가	3.5	3.5	3.5	3.5	-	14	-	14
	특별연합	1.5	1.5	1.5	1.5	-	6	-	6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④ 전략금속소재 속성가공기반 자립화 플랫폼 구축	소계	160	230	20	20	20	450	-	450
	국가	140	210	-	-	-	350	-	350
	특별연합	20	20	20	20	20	100	-	100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⑤ 부울경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	소계	135	219	219	219	-	792	-	792
	국가	30	150	150	150	-	480	-	480
	특별연합	105	69	69	69	-	312	-	312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⑥ 부울경 정부출연(연)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	소계	10	20	20	20	-	70	-	70
	국가	7	14	14	14	-	49	-	49
	특별연합	3	6	6	6	-	21	-	21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⑦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설립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역별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준비 및 협력
-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 자료·정보 공유

12. 사무 ⑪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

1) 사무 필요성

- 부울경 산업의 정체 국면을 탈피하고, 재도약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체계 정비 필요성
 - 투자유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이 필요
- 부울경권의 무역규모는 2위이나 상대적 비중은 계속 줄고 있으며, 수출 점유율은 충청권에도 뒤지는 상황
 - 2020년 수출입 총액 점유율은 16.5%로 2000년 20.8% 대비 4.3%p 감소
 - 수출점유율은 20.2%로 충청권 21.6% 대비 1.4%p 낮음
- 세계경제 주역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환경 대응 역량 제고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특별연합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부울경 지역산업의 자생력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의 안정적 구축
 - 지역기업 투자유치 및 국제통상 대응을 위한 공동지원 체계 조기 안정화

(2) 방향

- 지역별 분절화된 투자유치역량의 통합을 통한 성과 제고 노력
 - 지역산업의 경영역량 강화, 개방적 글로벌 네트워크 공고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 특별연합 차원의 통상환경 공동대응 범위를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주요 주체로서 충분한 도시외교, 통상 정책 추진 역량을 확보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부울경 기업 유치활동 지원, 기업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통상환경 공동 대응
- 부울경 기업 유치활동 지원은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기반 마련에 관한 사무(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3항)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위치에서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3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통상환경 공동 대응은 부울경 지역산업의 통상진흥을 위한 해외 마케팅, 판로개척, 해외도시와의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 해외사무소 공동운영은 시·도와의 충분한 협의, 협력을 통해 공동운영 추진의 조직적 기반 확보
 - 시·도별 기존 사무소 운영은 직영, 위탁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별 개편 추진의 여건이 상이, 시·도와의 협력이 필수적

(2) 발굴사업**○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의 발굴사무**

(부울경 기업 유치활동 지원)

- 국내외 기업유치 공동 홍보마케팅
-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 투자유치 공무원 역량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업 현황 D/B 구축
- 부울경 투자유치 지원협의회 운영

(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통상환경 공동대응)

- 해외사무소 공동운영(조직개편 및 단계적 통합 추진)
- 부울경 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
- 부울경 추천상품제(QC) 운영
- 부울경 해외통상 자문관 운영

① 국내외 기업유치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유형: 향후지속****○ 사업기간: 2023년~****○ 사업비: 2.5억 원(연간)****○ 사업내용**

- 제조업 등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상황과 산업구조 개편의 현실 속에서 부울경 권역 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선도 핵심기업 투자유치
 - 분산개별 투자유치 전략에서 통합적 공동 투자유치 전략으로의 전환 추진
- 산업별 주요 앵커기업(기관) 및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통해 협력사 등 관련기업 집중 유치 및 육성 전략 전개

-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지원 전반 사업을 수행
- 주요 업무
 - 수도권 및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및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팸투어 추진
 - 부울경 투자유치 홍보·광고자료 제작 및 배포, 설치
 - 민간인 해외유치활동 지원

②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 사업유형: 항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1천만 원(연간)
- 사업내용
 - 투자유치 전문가를 통한 투자유치 동향 수집 및 정보 제공

③ 투자유치 공무원 역량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유형: 항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5천만 원(연간)
- 사업내용
 -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교육
 -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투자유치담당 대상 워크숍 및 기업상담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지역특성화 업종별 우량기업 List-up 및 기업방문 IR활동 지원

④ 기업 현황 D/B 구축

- 사업유형: 항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2억 원(용역시행 년도, 미시행년도는 1억 원)
- 사업내용
 - 현재 각 시도별 관리중인 (잠재)투자기업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기업신용평가기관, KOTRA 등의 연계를 통한 잠재 투자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통계청 자료 활용 등 해외진출 기업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복귀의향 분석 및 발굴
- 기업 대상 유턴 지원제도 및 제도 개편 사항 홍보
-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⑤ 부울경 투자유치 지원협의회 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부울경 투자유치담당 부서장 및 경제자유구역 본부장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지원협의회를 구성
 -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부울경 간 경쟁 과열 시 지원
 -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관련 협력방안 및 공동 IR방안 마련

⑥ 해외사무소 공동운영(조직개편 및 단계적 통합 추진)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6.6억 원(연간, 2024년 기준)
- 사업내용
 -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부울경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초광역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조직적 기반 마련
 - 부산지역의 5개소 및 경남 지역 6개소의 해외사무소 통합운영 체계 및 방안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부울경 차원의 신설 사무소 설립 추진
 - 해외사무소 주요 사무
 - 기업상담회 개최
 - 마케팅네트워크 구축
 -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수출계약(상담)
 - 기업인 비즈니스 센터 운영 등

⑦ 부울경 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5억 원(연간)

○ 사업내용

- 대륙별 부울경 전시박람회 개최로 수출유망기업 홍보 및 수출지원 강화

⑧ 부울경 추천상품제(QC) 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2억 원(연간, 2024년부터)

○ 사업내용

- 부울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공산품, 공예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활동 지원
-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및 TV 홈쇼핑 지원

⑨ 부울경 해외통상 자문관 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1천만 원(연간)

○ 사업내용

- 투자유치, 해외 마케팅 등 기업의 통상 업무 지원
- 국제교류 협력 지원
- 관광홍보
- 취업지원

(3) 추진 주요 사항

-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체계 구축의 각종 기업 투자유치, 통상지원 사업은 기존에 시·도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통합운영의 규모의 경제, 시너지 효과 창출 노력
 - 기존 운영경험을 충분히 공유해 장·단점을 진단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 개선
- 해외사무소 공동운영은 부울경 차원의 국제통상 대응 성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무소 배치, 지역별 업무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점에서 검토
 - 부산 5개소, 경남 6개소 등 4개국 11개 지역에서 운영중
 - 로스앤젤레스(미국), 상하이(중국 대륙), 호치민(베트남)은 부산, 경남 모두 사무소가 소재, 중복 운영 중
 - 해외사무소는 기존 시·도 운영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 규모, 역할, 효과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사업 규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박충훈 외, 2020: 49)

- 부울경 차원의 국제통상정책 기초, 기업 사무소 운영 수요를 엄격히 진단해, 타당한 사무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무소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
 - 직영 외에도 현지여건 등에 따라 공공, 민간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적절히 활용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92.5억 원이며 모두 자체재원으로 지출(사업비 미정 사업 제외)

〈표 6-23〉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20.2	17.8	18	19	18	92.5		92.5
	국가								
	특별연합	20.2	17.8	17.8	18.8	18	92.5		93
	시·도								
	기타								
① 국내외 기업유치 공동 홍보마케팅	소계	2.5	2.5	2.5	2.5	2.5	12.5		12.5
	국가								
	특별연합	2.5	2.5	2.5	2.5	2.5	12.5		12.5
	시·도								
	기타								
②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소계	0.1	0.1	0.1	0.1	0.1	0.5		0.5
	국가								
	특별연합	0.1	0.1	0.1	0.1	0.1	0.5		0.5
	시·도								
	기타								
③ 투자유치 공무원 역량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소계	0.5	0.5	0.5	0.5	0.5	2.5		2.5
	국가								
	특별연합	0.5	0.5	0.5	0.5	0.5	2.5		2.5
	시·도								
	기타								
④ 기업 현황 D/B 구축	소계	2	1	1	2	1	7.0		7
	국가								
	특별연합	2	1	1	2	1	7.0		7
	시·도								
	기타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⑤ 부울경 투자유치 지원협의회 운영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⑥ 해외사무소 공동운영 (조직개편 및 단계적 통합 추진)	소계	7	6.6	6.6	6.6	6.7	33.5		33.5
	국가								
	특별연합	7	6.6	6.6	6.6	6.7	33.5		33.5
	시·도								
	기타								
⑦ 부울경 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	소계	5	5	5	5	5	25.0		25
	국가								
	특별연합	5	5	5	5	5	25.0		25
	시·도								
	기타								
⑧ 부울경 추천상품제 (QC) 운영	소계	3	2	2	2	2	11.0		11
	국가								
	특별연합	3	2	2	2	2	11.0		11
	시·도								
	기타								
⑨ 부울경 해외통상 자문관 운영	소계	0.1	0.1	0.1	0.1	0.1	0.5		0.5
	국가								
	특별연합	0.1	0.1	0.1	0.1	0.1	0.5		0.5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공동추진 참여
- 해외사무소 공동운영을 위한 재구조화 과정 협력 및 지원
- 각종 투자 유치관련 사업, 행사의 지역 내 홍보 및 정보제공

13. 사무 ⑫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1) 사무 필요성

- 청년의 수도권 유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위기, 청년 공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비롯한 지식기반 혁신주체들의 연계·협력이 필요

- 지식기반경제²⁴⁾의 핵심동력은 지식 생산 및 활용의 주체인 인재이며, 대학은 전문역량 갖춘 인재의 배출, 지식생산을 위한 사회 타 주체와의 공동협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의 핵심적 행위자 역할(김태영 외, 2021b: 319)
 -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지식의 생산, 이전 및 활용과 기술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필요성이 증가(홍형득, 2008: 15)
- 부울경 대학의 역량 약화로 지역청년들의 선호도는 지속적 정체, 하락 국면
 - 202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상위 20위권내 부울경 대학 1개에 불과
 - 2021년 등록특허(국내 및 해외특허 총합) 상위 20위권 대학에 부울경 지역은 2개 대학만 포함(대학알리미)
- 지식기반 혁신주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며, 역량 있는 대학을 매개로 한 혁신주체 간 협업 플랫폼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을 촉진할 필요
-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훈련·각종 혁신과업의 참여를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그 역량을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인재중심 지역발전 선순환 모델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절실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대학을 비롯한 부울경의 지식기반 혁신주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의 안정적 구축
 - 지역대학 경쟁력 회복 기반 마련 및 혁신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2) 방향

- 특별연합 출범 초기단계에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은 통합적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내 재구조화에 초점
 -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토대로 사무처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앙정부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탈피, 초광역 지역혁신의 실질적 정책 주도권 확보
 - 사업추진 조직체계 정비, 사업 통폐합 등 재구조화 노력 비중이 큰만큼, 큰 갈등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24)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며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지식의 생성, 분배, 활용 등에 직접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홍형득, 2008: 15)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은 시·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초광역권 수준에 통합해 구성,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무
 -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초광역권 차원의 공동 이익 실현에 초점을 두고, 지역대학 혁신과 관학협업의 정책적 주도 노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발굴사업

-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의 발굴사무
 -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단계별 부울경 협력모델 발굴 및 추진
 - 지역별 배분예산 확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공동대응
 - 수도권 주요 앵커·플랫폼 기업 발굴·지역 유치
 - 부울경 기업 협력·연계 신사업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 인재양성
 - 사업추진 조직체계 정비(대학주도 → 지자체·기업 주도)
 - 유사 인력양성사업 통합 추진
 - 부울경 지역혁신기관 통합 등 기능조정 추진
 - 부울경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산학융합지구 육성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 부울경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① 단계별 부울경 협력모델 발굴 및 추진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2025년
- 사업비: 사업비 조정
- 사업내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교육부 주관)에 참여,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의 선도적 모델 구축
 - 지역 단체장등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의 통합 운영
 - 혁신성장 산업 별 핵심분야 플랫폼 구축 및 단계별 조정

② 지역별 배분예산 확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공동대응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 단계별 모델 추진에 따른 예산배분·조정·확보
 -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등 예산 사전절차 공동 이행 추진

③ 수도권 주요 앵커·플랫폼 기업 발굴·지역 유치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 지역혁신 플랫폼 연계 주요 기업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존 유치 실적
 - 삼성전자 『SSAFY』(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동남권 본부 유치
 - 우아한 형제(배달의 민족) 『테크코스』(SW교육) 동남권 캠퍼스 유치

④ 부울경 기업 협력·연계 신사업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 인재양성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 기업 교육프로그램 협업
 - 기업유치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 추진

⑤ 사업추진 조직체계 정비(대학주도 → 지자체·기업 주도)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15억 원(연간)
- 사업내용
 - 부울경 공동출연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기업 유치·협력, 법인 기능 강화(매년 출연)

⑥ 유사 인력양성사업 통폐합 추진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사업비: 275억 원
- 사업내용
 - 기존 유사 인력양성사업의 통폐합 추진을 통해 효율성 제고
 - 사업 추진 계획
 - 1단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 4개 사업
 - 2단계: 대학협력사업
 - 3단계: 산업별 인력양성사업

⑦ 부울경 지역혁신기관 통합 등 기능조정 추진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계획기간내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 지역별, 혁신관련 공공기관별 기능 조정 및 통합체계 강화
- 대상기관: TP, BISTEP, 정보산업진흥원, 경남SW산업진흥원(가칭) 등

⑧ 부울경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25년
- 사업비: 180억 원
- 사업내용
 - 특별연합 중심의 각종 산학연 사업 추진

⑨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산학융합지구 육성

- 사업유형: 기간내 완료
- 사업기간: 2023년~27년
- 사업비: 175억 원
- 사업내용
 - 산학융합 플랫폼 구축·운영: 부울경권 인적, 물적, 정보자원의 개방적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소통·협력·통합의 공간으로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디지털·그린 융복합 프로젝트 랩 운영: 인재, 기업, 연구기관 등을 연결하여 다양한 산업분야를 융합한 과제를 발굴,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랩 운영
 - 비즈니스 모델링: 프로젝트 랩 우수 성과물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링 스튜디오 운영,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창업 자금 지원 등 진행

⑩ 부울경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 지역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의 통합 운영

(3) 추진 주요 사항

- 단계별 부울경 협력모델 발굴 및 추진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교육부 주관)에 부울경 주요 대학이 참여, 지역혁신플랫폼이 공동으로 운영되어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데에 초점

- 2021년 경남, 울산 지역 5개 대학이 참여, 플랫폼 구축 및 USG+(공유대학) 구축 상태로 부산 지역 대학까지 플랫폼 참여범위를 확장, 통합하는 것이 당초 목표
- 부산지역 대학은 지역혁신 사업의 진행추이를 감안해, 향후 참여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며, 경남, 울산 플랫폼과 통합 진행
- 울산, 경남 지역의 공동운영을 추진하되, 부산지역 혁신주체와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단계별 부울경 협력모델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으로 부울경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추진 조직체계 정비(혁신플랫폼 총괄운영 법인 설립) 추진
 - 현재 지역협업위원회는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 경남 플랫폼 운용조직은 경상국립대 부설 임시기구 형태
- 부울경 지역혁신기관 통합 등 기능조정 추진은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하나, 조직개편에 따른 이해관계자 반발 가능성 등 장애 요인 존재
 -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기능조정대상 기관 및 임직원의 불만, 반발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역혁신 공공부문 주체의 경쟁력과 상호협력 강화 유도
 - 유사 인력양성사업 통폐합 추진도 3개 시·도, 관계기관의 입장 차이와 그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최우선적인 목표를 효율화로 설정하되, 적극적 소통 노력 진행
- 지역 대학의 관련 국가공모사업 참여에서 선정 및 안정적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지원 검토
 -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학관련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캠퍼스 혁신파크는 선정 대학당 사업비가 총1,0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1단계 선정된 한양대(ERICA)의 사업비는 6,900억 원에 달함
 - 부울경 지역대학 중 창원대가 2022년 처음으로 선정
 - 2022~2030년 총 504억 원을 투자, 지능형 제조, 탄소중립, 지능형 방위·항공 분야 사업 추진 예정
 - 부울경 지역대학은 그동안 꾸준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나, 지난 1, 2기 공모에서 모두 탈락
 - 2021년 2기 공모에서 동남권 7개 대학이 지원했으나 전부 탈락
 - 지원 대학은 23개 교로 그 중 부울경 지역대학은 부산대, 부경대, 영산대, 경상대, 경성대, 창원대, 동명대 등 7개 교였는데, 창원대 제외 6개 대학은 서면평가 단계에서 탈락
 - 특별연합은 선정대학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공모참여 지역대학 사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추가선정 및 안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 수도권 앵커·플랫폼 기업 발굴·유치, 부울경 기업 협력·연계 신사업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 인재 양성 등은 지역혁신플랫폼 참여 분야의 성과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



자료: 안산시(2021. 3. 10.). '안산시 혁신 거점'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첫 삽.

〈그림 6-25〉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에리카 이노베이션 파크 조감도)

-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노력은 지역대학에 대한 시혜적 협력·지원에 그쳐서는 곤란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노력이 동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유도방안을 모색
 - 별도 법인의 플랫폼 사업추진 조직 설립에서 대학주도에서 지자체 및 기업 주도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교육 및 연구 수요 변동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 대응, 자기혁신 여건 조성을 위한 것임
 - 대학의 적극적 체질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의 성과는 제약되고, 대학과 협력하는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의 피로감은 가중될 가능성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소요예산은 658.5억 원임(사업비 미정 사업 제외)
 - 중앙정부 336억 원(51.0%) 부담, 특별연합 287.5억 원(43.7%) 부담

〈표 6-24〉 초광역 지식혁신 플랫폼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5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105.0	150.0	250	150	4	658.5	.	658.5
	국가	56.5	76.5	127	77	.	336	.	336
	특별연합	43.5	63.5	113.5	63.5	4	287.5	.	287.5
	시·도
	기타	5	10	10	10	.	35	.	35
① 단계별 부울경 협력모델 발굴 및 추진	소계	사업비 조정필요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② 지역별 배분예산 확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공동대응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③ 수도권 주요 앵커·플랫폼 기업 발굴·지역 유치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④ 부울경 기업 협력·연계 신사업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 인재양성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⑤ 사업추진 조직체계 정비(대학주도 → 지자체·기업 주도)	소계	15	15	15	15	.	60	.	60
	국가
	특별연합	15	15	15	15	.	60	.	60
	시·도
	기타
⑥ 유사 인력양성사업 통폐합 추진	소계	25	50	100	100	.	275	.	275
	국가	10	20	45	45	.	120	.	120
	특별연합	10	20	45	45	.	120	.	120
	시·도
	기타	5	10	10	10	.	35	.	35

사업	항목	2023	2025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⑦ 부울경 지역혁신기관 통합 등 기능조정 추진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⑧ 부울경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인재양성사업 발굴·추진	소계	30	50	100			180		180
	국가	15	25	50			90		90
	특별연합	15	25	50			90		90
	시·도								
	기타								
⑨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산학융합지구 육성	소계	35	35	35	35	35	175		175
	국가	31.5	31.5	31.5	31.5	31.5	157.5		157.5
	특별연합	3.5	3.5	3.5	3.5	3.5	17.5		17.5
	시·도								
	기타								
⑩ 부울경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유사 인력사업의 통폐합 공동 협력 및 이해관계자 대응
- 부울경 지역혁신기관 기능·조정 등과 연계한 지역 관련 기관 재구조화

14. 사무 ⑬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

1) 사무 필요성

- 수도권 일극화는 문화 부문에서도 심각, 부울경 지역문화의 자생력, 활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 문화 부문의 초광역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며 지역별 문화 다양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부울경 지역관광의 위상은 현상 유지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국내여행 주요 방문지 비율은 부울경 지역이 17.2%로 10년 전인 2010년 대비 0.5%p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32.7%로 10년 전 24.6% 대비 8.1%p 증가(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 조사)

- 메가시티 관점에서 부울경 지역 관광의 도약 노력 필요
 - 부울경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통합 활용하는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관광정책 추진에 나설 경우,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문화·관광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 초광역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안정적 지속, 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 정책추진 체계의 구축
 - 체감도 높은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 초광역 사무·사업에 대한 지지 확보

(2) 방향

- 문화 분야는 시·도 상호협의체(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구성 사무만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의 방향, 관할 범위의 설정 노력이 진행되지 않음
 - 문화 분야 사무, 관련 사업 발굴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상호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발굴 노력 진행
- 관광사무의 처리에서는 부울경 지역 내 관광자원의 통합적 연계·활용에 중점을 둔 공동마케팅, 관광 자원개발을 원활한 추진에 초점
 - 3개 시·도뿐 아니라 관할지역 지자체와의 공동협력이 중요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성·운영,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임
-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성·운영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부울경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 등에 초점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위치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그 맥락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상의 문화기구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3조(시책과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특별연합의 문화 분야 사무는 관련 일부 기구(지역문화예술상호협의체)의 통합적 운영 외에 의미 있는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음
-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은 부울경 공동의 광역관광 마케팅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관광자원화, 관광상품 개발,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은 부울경권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토대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광진흥법』 제49조)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관광진흥법 제49조)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사무임에도 관광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은 없는데, 추진이 필요한 부분

(2) 발굴사업

○ 초광역 문화·광역 관광 체계 구축의 발굴사무

(지역문화예술 상호협력체 구성·운영)

- 부울경 문화, 예술 네트워크 구축
-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 합창제 추진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부울경 광역관광 공동 마케팅
-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부울경 미디어 콘텐츠 코스화 사업
- 부울경 메가시티 사찰투어 버스 운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 부울경 해양레저산업 공동기반 구축 및 육성
- 부울경 해양관광 육성사업
- 유희(폐)시설을 활용한 문화관광 복합공간 재생사업

① 부울경 문화, 예술 네트워크 구축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1천만 원(연간)

○ 사업내용

- 3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간 협의체인 부울경 광역문화재단 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행사, 활동

공동 추진

- 지역문화혁신포럼 개최, 문화사업 공동추진

②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 합창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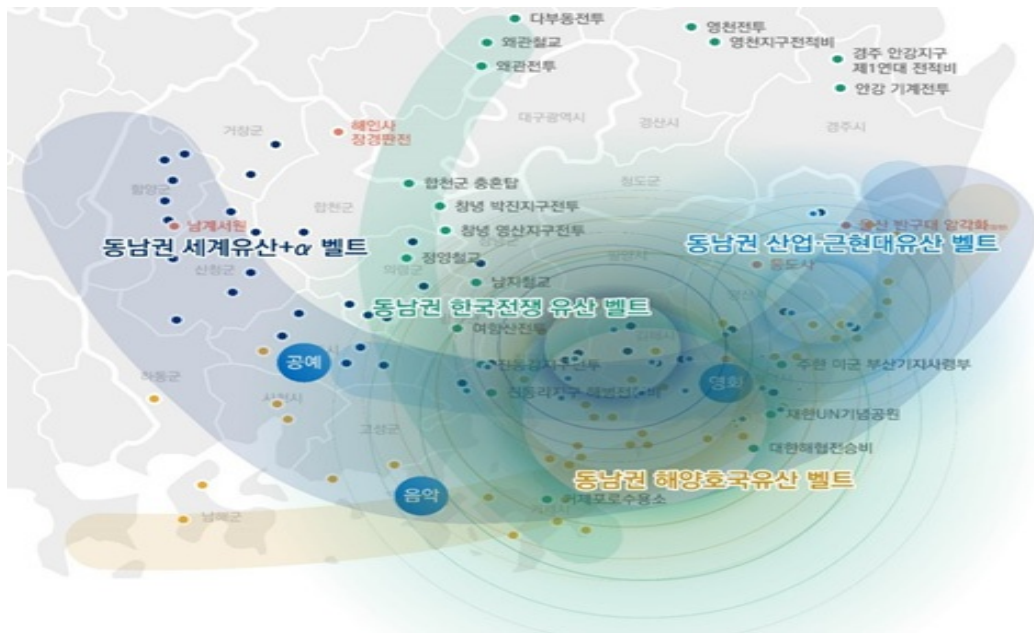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7천만 원(연간, 2024년 기준)
- 사업내용
 - 부울경 시민합창단 공동 주관, 3개 시·도 연도별 순회개최
 - 부울경 시민합창단 합동공연(혼성, 남성, 여성), 특별공연

③ 부울경 광역관광 공동 마케팅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3억 원(연간)
- 사업내용
 - 부울경 광역관광 브랜드 구축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인지도 제고 홍보
 - 광역관광상품 개발

④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사업유형: 미확정
- 사업기간: 2023년~미정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동남권의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연계성을 접목한 주제별,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거점·지역연계 강화 융복합 거점사업, 연계협력 전략사업 등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구성



자료 : 김태영 외(2021a)

〈그림 6-26〉 관광벨트의 공간구상(안)

- ⑤ 부울경 미디어 콘텐츠 코스화 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2030년
 - 사업비: 59억 원
 - 사업내용
 - 동남권 광역관광 체계(통합정보, 통합교통, 통합패스) 구축

〈표 6-25〉 부울경 미디어 콘텐츠 코스화 사업 분야별 세부사업

분야	세부사업
통합정보	① 통합 애플리케이션 ② 비콘(Beacon) 기술서비스 적용 및 운영 ③ 추천 및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 구축 및 운영 ④ 미디어 콘텐츠 영상업로드 시스템 구축
통합교통	⑤ 변동형 트롤리버스 운영 ※ 광역도로망, 철도망, 고속 철도망 연계상품 개발 병행
통합패스	⑥ 광역관광패스 개발 ⑦ 광역관광패스 디지털 바우처 ⑧ 광역관광패스 통합 브랜드 및 디자인

- ⑥ 부울경 메가시티 사찰투어 버스 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6억 원(연간)

○ 사업내용

- 부울경 지역의 유명사찰과 산을 잇는 관광버스 운영을 통한 지역 간 연계사업 수행
- 각 지자체별 사찰 투어버스 일 2회 운행 및 시간대별 사찰 투어버스 지정 출발
- 모바일 웹기반 예약 시스템 구축

코스	출발지	이동코스(회귀)	경유지
1코스	노포동 터미널	범어사 → 통도사 → 석남사 → 표충사 → 범어사	신평터미널, KTX(울산역), 밀양터미널
2코스	통도사 신평터미널	통도사 → 석남사 → 표충사 → 범어사 → 통도사	KTX(울산역), 밀양터미널, 노포동터미널
3코스	KTX (울산역)	석남사 → 표충사 → 범어사 → 통도사 → 석남사	밀양터미널, 노포동터미널, 신평터미널
4코스	밀양터미널	표충사 → 범어사 → 통도사 → 석남사 → 표충사	노포동터미널, 신평터미널, KTX(울산역)

〈그림 6-27〉 부울경 메가시티 사찰투어 버스 코스(안)

⑦ 부울경 해양레저산업 공동기반 구축 및 육성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265억 원(지방비)

○ 사업내용

- 부울경 해양관광로드 개발
 - 부울경 요트관광 거점과 연안 관광지 연계 관광로드 개발 등
- 부울경 글로벌 해양이벤트 공동개최 및 지원
 - 동북아 국제요트대회 개최 및 국제보트쇼 공동참가 지원

⑧ 부울경 해양관광 육성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30년

○ 사업비: 473억 원

○ 사업내용

- 총 4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해양관광 접근성 강화 및 제약요소 해결
- 역사/레저/테마 접목 해양관광상품 개발
-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 노력

〈표 6-26〉 부울경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분야별 세부사업

분야	세부사업
커뮤니티타운 시스템구축	① 지역별 관리센터 설치 (오프라인) ② 통합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③ 지역별 서비스디자인 ④ 여행 짐 배송시스템
관 광 객 제약해소	⑤ 해양정비 프로그램 운영 ⑥ 실버 바다 지킴이 ⑦ 개인용품 자유이용구역 ⑧ 배달 전용 공간 ⑨ 어린이 해변 ⑩ 반려동물 해변 ⑪ 친환경 해충방제 프로그램
관광지 매력개선	⑫ 역사교육 콘텐츠 투어프로그램 ⑬ 해양레저스포츠 ⑭ 연안 크루즈/요트
통합운영 관리	⑮ 지역본부 운영관리 ⑯ theORA9 홍보·마케팅

⑨ 유희(폐)시설을 활용한 문화관광 복합공간 재생사업

○ 사업유형: 기간내미완료/완료시점까지 계속

○ 사업기간: 2023년~2030년

○ 사업비: 342억 원

○ 사업내용

- 유희(폐)시설 인프라 개선
- 지역주민·기업·관광객 지원을 위한 다기능 서비스 공간(지역주민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관광객 지원서비스 공간) 조성 및 운영
- 지역사회 자치체험 활동 및 특성화 활동 제공
-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 노력

(3) 추진 주요 사항

○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은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 분야는 제한

- 문화분야 사무는 지역문화예술상호협의회 구성·운영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한된 범위만을 다루고 있으며, 발굴사업은 2개에 불과한 실정
 - 주민 체감 사업은 메가시티 시민 합창제 1개 사업뿐임

○ 계획기간중 문화분야 사무이관, 사업발굴을 위한 특별연합의 노력이 필요

- 2030 월드엑스포 유치·준비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과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 기대
 - 부울경 문화, 예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문화재단 협의회 운영 및 행사추진) 활용 문화 분야 초광역사무, 사업 발굴 노력 필요
- 관광 분야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이 미 포함
- 잠정적으로 동남권광역관광본부의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활용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법정계획이므로 사무를 이관한 것인만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용역 사업 추진 등 방안 모색
 - 초광역 관광체계의 사무 및 사업추진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기초해 통합적,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부울경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목적, 주제, 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연계해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 광역관광 공동마케팅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전략과 연계해 부울경 지역의 통합적 정체성을 기초로 추진
- 문화관광 자원을 목적, 주제, 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노력 중요
 -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의 산업 회복기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적극 전개, 외국인 관광에서도 국가의 양대축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연계 사업(예: 해양관광 육성사업, 문화관광 복합공간 재생사업 등)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및 각종 지원 확보 노력 필요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총소요예산은 1,186.7억 원(사업비 미정 사업 제외)
- 국가 406억 원(34.2%), 특별연합 640.7억 원(54.0%), 기타 140억 원(11.8%)
- 계획기간내 소요예산 합계는 520.7억 원으로 총소요예산의 43.9%
- 국가 192억 원(36.9%), 특별연합 255.7억 원(49.1%), 기타 73억 원(14.0%)

〈표 6-27〉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10	136.3	148.3	113.1	113	520.7	666	1,186.7
	국가	1	54.5	54.5	41	41	192	214	406
	특별연합	8.8	67.6	67.6	55.9	55.8	255.7	385	640.7
	시·도	-	-	-	-	-	-	-	-
	기타	0.2	14.2	26.2	16.2	16.2	73	67	140
① 부울경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소계	0.1	0.1	0.1	0.1	-	0.4	-	0.4
	국가	-	-	-	-	-	-	-	-
	특별연합	0.1	0.1	0.1	0.1	-	0.4	-	0.4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②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 합창제 추진	소계	0.9	0.7	0.7	-	-	2.3	-	2.3
	국가	-	-	-	-	-	-	-	-
	특별연합	0.9	0.7	0.7	-	-	2.3	-	2.3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③ 부울경 광역관광 공동마케팅	소계	3	3	3	3	3	15	-	15
	국가	-	-	-	-	-	-	-	-
	특별연합	3	3	3	3	3	15	-	15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④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대응 체계구축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⑤ 부울경 미디어 콘텐츠 코스화 사업	소계	-	24.5	34.5	-	-	59	-	59
	국가	-	13.5	13.5	-	-	27	-	27
	특별연합	-	11	11	-	-	22	-	22
	시·도	-	-	-	-	-	-	-	-
	기타	-	-	10	-	-	10	-	10
⑥ 부울경 메가시티 사찰투어버스 운영	소계	6	6	6	6	6	30	-	30
	국가	1	1	1	1	1	5	-	5
	특별연합	4.8	4.8	4.8	4.8	4.8	24	-	24
	시·도	-	-	-	-	-	-	-	-
	기타	0.2	0.2	0.2	0.2	0.2	1	-	1
⑦ 부울경 해양레저산업 공동기반 구축 및 육성	소계	-	5	5	5	5	20	245	265
	국가	-	-	-	-	-	-	-	-
	특별연합	-	5	5	5	5	20	245	265
	시·도	-	-	-	-	-	-	-	-
	기타	-	-	-	-	-	-	-	-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⑧ 부울경 해양관광 육성사업	소계		48	50	50	50	198	275	473
	국가		20	20	20	20	80	153	233
	특별연합		20	20	20	20	80	72	152
	시·도								
	기타		8	10	10	10	38	50	88
⑨ 유휴(폐)시설 활용한 문화관광 복합공간 재생사업	소계		49	49	49	49	196	146	342
	국가		20	20	20	20	80	61	141
	특별연합		23	23	23	23	92	68	160
	시·도								
	기타		6	6	6	6	24	17	41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회 구성·운영에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부울경 전체 관점에서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별연합의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정보 공유 및 지역별 홍보
- 부울경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한 시·도 관광개발계획의 보완, 개선
- 특별연합 차원의 공동 마케팅 및 관광 사업과 연계한 지역별 관광 사업 추진

15. 사무 ⑭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1) 사무 필요성

- 부울경이 단일한 경제생활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업, 공간적 연계뿐 아니라 주민간의 정서적 유대, 동질성 확보가 중요
- 부울경 모두 산업화를 선제적으로 시작했지만, 경남은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소득에서 농업 비중을 살펴보면, 1%에 못미치는 부산(0.5%), 울산(0.2%)와 달리 경남은 4.0%로 일정 수준 점유율 유지(2020년 기준)
 - 농가인구 비율도 경남은 11.2%로 부산(1.2%), 울산(1.6%)에 비해 크게 높음(2020년)
- 경남의 농업비중이 큰 것은 서부경남 지역이 전형적인 농업중심적 경제사회적 구조 중심이기 때문임
 -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서부경남이 60.9%로 부산(99.5%), 울산(95.3%), 동부경남(94.5%)에 비해 낮은 수준
 - 항공산업 등을 지역주력산업화하고 있으나, 농업비중이 단시일 내에 크게 줄기는 어려움

- 부울경지역의 만성적인 동서지역 간 갈등,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낙후지역의 주산물을 매개로 정서적 연대를 공고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요구
 - 소멸고위험지역²⁵⁾에 해당되는 부울경 지역은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함천인데, 모두 서부경남에 소재한 군으로서 농촌 중심 사회적 구조를 지님
- 먹거리 공동체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부울경 통합, 연대 기반 마련 필요
 -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성장 기반 확보를 통한 부울경 동서균형발전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부울경 주민의 먹거리 만족도 향상 효과 기대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위한 안정적 협력 기반 조기 구축
 -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소비,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조기 안정화
 -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인력 육성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2) 방향

- 사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견고한 논리 개발 및 정책 체감도 강화
 - 농업은 부울경 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현재 주력사업이나 미래먹거리로 부상하는 친환경 경첨단산업과 상당히 거리가 있음
 - 부울경 전역에 걸친 높은 정서적 일체감 실현,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초광역협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주요 사무임에도 관심,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영구적 시범사업' 상태 우려)
 -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 가능하고, 메가시티의 전략적 정체성 실현과 밀접한 견고한 논리를 개발하며, 소비자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향후 정책, 사업의 안정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구성 세부사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사무임
 - 부울경 지역에서 특별연합만이 전담하는 사무는 아니며, 3개 시·도간 협력, 연계가 필요한 범위

25) 소멸위험지수 0.2 미만,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인구

에서 추진

- 관할의 지역적 범위가 시·도 구역인 사무는 시·도가 계속 추진

-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은 부울경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도시·농촌간 교류 활성화 사무는 부울경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동서 격차의 완화 및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동조 제1항), 이를 위해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동조 제2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후계농어업인 육성·지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부울경 차원의 농어업인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경쟁력 있는 후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발굴사업

-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의 발굴사업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먹거리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센터) 상호·수공급체계 구축
-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
- 식자재 연중 공급가능 생산체계 구축
-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도시·농촌간 교류 활성화)

- 도시·농촌 네트워크 구축·운영
- 부울경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 개발(방안마련)
-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박람회 개최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센터) 상호·수공급체계 구축

- 사업유형: 향후지속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은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각 시도 공공급식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거점센터 확장 및 연계센터 준공(~2023년), 4개 센터 운영(2024년~)
 - 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기반 마련 목적

②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설치 기준, 운영은 지속)
- 사업기간: 2023년~2026년(설치 기준, 운영은 지속)
- 사업비: 104억 원
- 사업내용
 - 부울경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2개소 건립(부산, 울산 각 1개소)
 - 농협과 연계, 로컬푸드 직매장(부산, 울산 각 2개소) 설치·운영 지원

③ 식자재 연중 공급가능 생산체계 구축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70억 원

○ 사업내용

- 공급 대상품목 기획생산을 위한 중소농 중심 농가조직화 추진
 - 농산물 50, 축산물 30, 가공품 13, 수산물 30품목
- 작물관리, 재배기술 등 생산표준화로 연중 생산 작부체계 구축

④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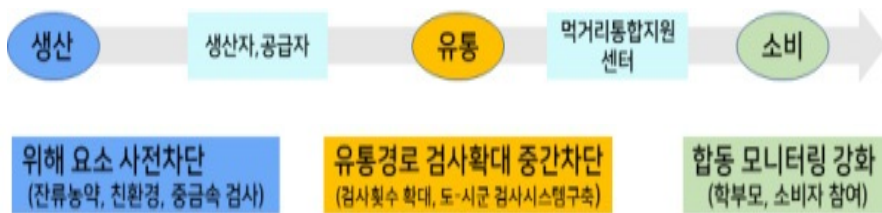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20억 원(계획기간내 연간 최댓값, 2026년~)

○ 사업내용

-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안전성 검사(4종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병원미생물)



〈그림 6-28〉 단계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⑤ 도시·농촌 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2억 원(연간)

○ 사업내용

- 도시민과 농어가 간 네트워크 구축, 문화(체험행사) 교류, 상생가치 공유
 - 예)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등과의 만남의 장, Farm to Table, 먹거리 축제 등
- 참여단체 간 자매결연(경남 시군 생산조직-부산지역 소비자 단체 등)

⑥ 부울경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3천만 원(연간)

○ 사업내용

-부울경 먹거리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참여기구 운영
예) 부울경 광역먹거리 공급 운영 협의회, 민관 먹거리 원탁모임 등

⑦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 개발(방안마련)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2억 원(연간)

○ 사업내용

- 청년농어업인 육성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등

⑧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박람회 개최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6억 원(연간)

○ 사업내용

- 청년농어업인 창업상담 및 판매 부스운영, 생산제품 교류, 판촉활동 등 박람회 행사 개최 및 운영(연례행사)

(3) 추진 주요 사항

○ 먹거리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무 및 발굴사업 수행은 부울경 전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충분한 타당성 확보가 가능

- 농어업 근간인 농지, 인력 등과 같은 생산기반 및 생산요소 및 농출산물 가격형성에 영향이 큰 유통부문에 대한 통계관리 및 실태조사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김태영 외, 2021b: 387)

- 3개 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 DB를 구축, 농어업, 농어촌, 물류, 유통 등의 변화 상황을 적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마련(김태영 외, 2021b: 388)

○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사무 처리에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기관 소재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한 안정적 지속 기반 구축 필요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직매장 설치 운영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먹거리 공동체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확립, 스토리텔링 활용 노력 필요

- #### (4) 소요예산

- 〈표 6-28〉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의 소요예산

[illegible]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②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	소계	2	50	50	2	.	104	.	104
	국가	1	25	25	1	.	52	.	52
	특별연합	1	25	25	1	.	52	.	52
	시·도
	기타
③ 식자재 연중 공급가능 생산체계 구축	소계	17	30	50	50	50	197	.	197
	국가	8.5	15	25	25	25	98.5	.	98.5
	특별연합	8.5	15	25	25	25	98.5	.	98.5
	시·도
	기타
④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소계	5	10	15	20	20	70	.	70
	국가	2.5	5	7.5	10	10	35	.	35
	특별연합	2.5	5	7.5	10	10	35	.	35
	시·도
	기타
⑤ 도시·농촌 네트워크 구축·운영	소계	2	2	2	2	2	10	.	10
	국가	1	1	1	1	1	5	.	5
	특별연합	1	1	1	1	1	5	.	5
	시·도
	기타
⑥ 부울경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소계	0.3	0.3	0.3	0.3	0.3	1.5	.	1.5
	국가	0.15	0.15	0.15	0.15	0.15	0.75	.	0.75
	특별연합	0.15	0.15	0.15	0.15	0.15	0.75	.	0.75
	시·도
	기타
⑦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 개발 (방안마련)	소계	2	2	2	2	2	10	.	10
	국가	1	1	1	1	1	5	.	5
	특별연합	1	1	1	1	1	5	.	5
	시·도
	기타
⑧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박람회 개최	소계	6	6	6	6	6	30	.	30
	국가	3	3	3	3	3	15	.	15
	특별연합	3	3	3	3	3	15	.	15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관할지역 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관련 운영기관을 지원
-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생산을 위한 관련 사무의 집행

-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을 위한 특별연합 사업의 관할지역내 홍보 및 관할지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확보 노력
- 특별연합 정책, 사업과 연계한 시·도 농업진흥정책, 사업 추진

16. 사무 ⑮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1) 사무 필요성

- 부울경 주민들의 건강권이 거주 지역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개 시·도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이 필요
-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부울경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
 - 심장질환 환자사망률(2020년)은 부산, 울산이 십만 명당 38.9명으로 전국 시·도중 최고 수준이며 경남은 십만 명당 36.3명으로 3위(전국평균 십만 명당 29.4명)
 - 뇌질환 환자 사망률(2020년)은 전국 시·도중 울산이 가장 높고(십만 명당 25.2명), 부산이 2위(십만 명당 24.2명), 경남이 6위임(십만 명당 21.0명)
- 3개 시·도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의료 인프라의 적극적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기존 인프라의 개선, 효율적 사용을 위한 협력 진행이 바람직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주민체감도 높은 보건·의료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안정적 추진
 - 감염병, 응급의료 등 부울경 주민의 관심 및 체감도 높은 의료서비스 중심
 - 부울경 차원의 보건·의료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통한 안정적 협력 기반 마련

(2) 방향

- 주민 관심이 높으면서 부울경 협력의 기대효과가 큰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부문 사업부터 시작해, 원활한 사무처리를 통해 주민 신뢰를 꾸준히 증대
 - 주민신뢰를 토대로 특별연합의 사무범위를 보건·의료의 다른 분야, 복지정책 전반으로 점차 확대하여, 안정적인 초광역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구성 세부사무는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 감염병 병원의 운영지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임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지원, 감염병병원의 운영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지역내 특정목적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 부울경 차원의 지원을 하는 데에 목적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은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은 응급상황의 신속대응을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확보에 초점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부울경 차원의 지원을 목적
 - 특별연합의 장은 관할지역 내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병원의 운영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거, 국가가 지정한 감염병전문병원 혹은 연구병원에 대한 부울경 차원의 지원을 목적
 - 특별연합의 장은 관할지역 내 감염병전문병원 혹은 감염병연구병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8조의 2(감염병병원)

-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은 부울경 지역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등을 위한 거버

넌스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특별연합은 시·도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광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운영
- 기존 시·도 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으며, 특별연합의 위원회는 부울경 전체의 정책적 문제에 대한 대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은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 특별연합의 장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용하고(동조 제1항), 필요에 따른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동조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무(『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일부 관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

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발굴사업

○ 발굴사업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지원

(감염병병원의 운영 지원)

-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 광역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

- 닥터헬기 도입 및 공동운영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 심뇌응급의료 신속대응체계 연계 구축

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지원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 사무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9.8억 원(연간)

○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 소아응급환자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광역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

②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설립 기준)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사무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사업비: 사업비 조정 필요

○ 사업내용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원활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 규모: 1개동(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24,450㎡)
- 병상수: 36개 음압병실, 및 2개 음압수술실, 일반병상 41실 113병상



자료: 해안건축 홈페이지(<http://www.haeahn.com/ko/about/newsDetail.do?noticeSeq=133>)

〈그림 6-29〉 감염병 전문병원 조감도

③ 광역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부울경 특별연합의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사업에 대한 심의 기구로 광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공보건의료 협력·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④ 닥터헬기 도입 및 공동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40억 원(연간)
- 사업내용
 - 닥터헬기 도입 및 공동운영 사업을 진행,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진이 탑승한 헬기로 운송해 병원에 인계

⑤ 심뇌응급의료 신속대응체계 연계 구축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사무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10억 원(연간)
- 사업내용
 - 환자가 최단시간 내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이송을 지원하는 응급심뇌환자 신속대응센터 운영
 - 119구급차 내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12-리드 심전도(12-lead electrocardiogram) 장비 비치
 - 12-리드 심전도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웹&앱 기반 시스템 개발
 - 119구급차 내 12-리드 심전도 측정 장비 300개 구축
 - 응급심뇌환자 신속대응센터(의사 4명, 간호사 4명) 운영
- 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자의 선정에서 우수 개발 역량 확보를 전제로 부울경 지역업체를 우선 검토

(3) 추진 주요 사항

- 부울경 광역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행정적 지원 노력 필요
 -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특별연합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비
 - 현재 보건의료 사무, 사업 범위가 넓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무 이관, 사업발굴 기반 마련이 중요
 - 실질적인 심의 기능 실현이 가능하도록 심의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결과 피드백 등 충분한 운영 지원
- 양산부산대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외에도 각종 정책

적 지원 방안 모색

- 양산부산대병원은 2016년 선정되었으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간에 선정이 취소된 적이 있음
 - 2016년 함께 선정된 울산대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과 달리, 선정취소 이후 재지정 추진 움직임 미확인
 - 특별연합이 운영지원을 하는데, 전문응급센터의 지위에 부정적 변화가 생겨서는 곤란
 - 계획기간 내 추가지정 센터가 생길 경우, 3개 시·도와 협의해 지원 추진
 -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응급의료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3개 시·도와 공동 노력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 현안 지원 및 타 시·도와의 협력 방안 모색
- 현 시점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준공 예정시점이 연기되고, 국비 지원 규모가 미확정 상태로 있는 등 설립준비의 어려움이 확인되는만큼, 특별연합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활용 타당성 검토
 - 영남권 전체를 관할해 부울경 지역 외 대구, 경북까지 관할구역에 포함하므로 대구, 경북과의 공동지원 방안 모색 노력 추진
- 전문응급의료센터, 감염병 병원의 운영 지원 모두 현 상황에서 양산부산대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부울경 전 지역에 걸쳐 공익의 실현 증진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닥터헬기 도입 및 공동운영은 3개 시·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헬기 배치 및 운용 효과가 충분한 의료기관 확보
-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자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3개 시·도, 사업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공동대응
- 심뇌혈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대응체계 연계 구축은 구급차 운용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3개 시·도 소방본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

(4) 소요예산

-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총소요예산은 총 259억 원(사업비 미정, 조정필요 사업 제외)
- 중앙정부 171.5억 원(66.2%), 특별연합이 87.5억 원(33.8%)을 부담

〈표 6-29〉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59.8	49.8	49.8	49.8	49.8	259		259
	국가	38.3	33.3	33.3	33.3	33.3	171.5		171.5
	특별연합	21.5	16.5	16.5	16.5	16.5	87.5		87.5
	시·도								
	기타								
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지원	소계	9.8	9.8	9.8	9.8	9.8	49		49
	국가	5.3	5.3	5.3	5.3	5.3	26.5		26.5
	특별연합	4.5	4.5	4.5	4.5	4.5	22.5		22.5
	시·도								
	기타								
②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소계	사업비 조정 필요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③ 광역공공보건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소계	사업비 미정							
	국가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④ 닥터헬기 도입 및 공동운영	소계	40	40	40	40	40	200		200
	국가	28	28	28	28	28	140		140
	특별연합	12	12	12	12	12	60		60
	시·도								
	기타								
⑤ 심뇌응급의료 신속대응체계 연계 구축	소계	10					10		10
	국가	5					5		5
	특별연합	5					5		5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전문응급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노력 진행

-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과 연계한 지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및 재구조화
- 부울경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및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과의 연계협력 강화
- 닥터헬기 배치 적정의료기관 확보 협력 및 닥터헬기 운영과 연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확충 노력
- 심뇌응급의료 신속대응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관련 장비 보급 및 규정 보완

17. 사무 ⑩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

1) 사무 필요성

- 부울경 지역에는 대규모 원자력 발전 단지가 입지, 원전 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
 - 부울경 지역에는 총 7기의 원전이 있으며(2호기~4호기, 신1호기~4호기), 신5, 6호기는 현재 공사중
 - 신5,6호기 완공시 기장군과 울주군에 걸쳐 소재한 고리-새울 원자력본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
 - 원전의 위험은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원전의 밀집도가 더 크게 작용하는데, 10개 원전이 몰리면 1개에 비해 위험도가 19.4배 증가(송교욱 외, 2018: 52)
 - 원전 30km 이내 거주인구는 약 38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7% 수준
- 부울경 지역과 밀접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은 활성단층 논란에 처해있는 등, 지진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양산단층은 경상북도 영덕군 - 경상남도 양산시 -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를 잇는 단층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동성 단층이며 한반도 동남부 최대 단층대(송교욱 외, 2018: 13)
 - 동남부 지역 지진발생 집중 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규모 5.0이상 지진 10회 중 6회가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
- 지진, 원전 사고 등 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대규모 재난의 사전예방, 피해 경감을 위한 선제적 노력, 재난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3개 시·도 차원의 초광역 협력이 바람직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 지역방호협의회, 지진재해 관련 조사, 평가단 공동운영 등 거버넌스 측면 준비

(2) 방향

- 성과 체감 가능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무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안정적 지지 기반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단계로 사무의 범위, 권한 수준이 제한적
 -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재난 분야에서 본격적인 초광역협력의 추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 범위의 재난 대응을 위한 사무 범위 확대를 뒷받침할 신뢰 확보 노력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지진재해원인 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지진·화산 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임
 -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지진재해원인 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은 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은 구호조치를 위한 사무, 지진·화산 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은 R&D 관련 사무로 볼 수 있음
-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은 부울경 특별연합 수준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임(『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7조)
 - 기존 시·도 방호협의회를 대신해 특별연합 방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장은 특별연합의 장으로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7조)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② 시·도 방호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방호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방호협의회 및 시·군·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은 재해 상황에서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무임(『재해구호법』 제4조의2)

- 특별연합은 시·도에 대응되는 구호기관으로 『재해구호법』 제4조의2의 해당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시설 측과 협의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지진재해원인 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은 관할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제21조)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시·도지사)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지진·화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1항, 4항), 위험도 평가(동법 제21조)를 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제20조(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진·화산 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은 부울경 차원에서 지진·화산 재해 경감 목적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무(『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에 대응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동법 동조 제1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

제22조(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화산방재 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발굴사업

- 발굴사업
 -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 광역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 임시주거시설(구호소) 지정 및 운영체계 구축
 -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통합구성·운영
(지진·화산 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 지진방재 R&D 및 공모형 사업 공동추진

① 광역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 사무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시·도 협의회를 대체할 광역지역방호협의회 구성(의장: 부울경 특별연합의 장)
 - 광역 지역방호협의회는 원자력시설 등 물리적 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물리적방호체계 수립, 평가, 방호 체계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 심의

② 임시주거시설(구호소) 지정 및 운영체계 구축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사무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이재민 구호소 등 임시주거시설 지정
 - 구호소 광역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

③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통합구성·운영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통합구성·운영 사무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지진재해원인 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통합해 구성, 운영
 - 피해 다수 발생 기초지자체 평가단 지원 및 조사 통합 수행

④ 지진방재 R&D 및 공모형 사업 공동추진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지진·화산 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사무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사업비: 미산정
- 사업내용
 - 시도별 연구기관 연계 지진방재 R&D 사업 현황 관리
 - 권역별 통합 공모형 국가산업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기존 시도별 R&D사업은 현행 유지)

(3) 추진 주요 사항

- 특별연합 방호협의회의 구성에서 위촉가능 위원은 부울경 전체적 관점에서 전문성, 역량 있는 자를 탐색, 협의회의 위상 제고 노력
 - 당연직 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나, 의장 위촉 가능위원 일정수 규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
 - 협의회를 통해 초광역권 전체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의사결정이 진행될 필요
- 임시주거시설 사용 사무의 처리는 시·도와의 원활한 협력 노력 중요
- 설치초기단계의 조직적·인적 자원으로 시설탐색, 시설장과의 협의, 현황 파악 등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시·도와 적극적 협력 필요
 - 1차적 수행 업무는 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특별연합은 통합적 관리, 시·도 대응 곤란 사항 처리에 초점
- 광역관리시스템 운영에서는 임시주거시설로 활용가능한 각종 공공, 민간시설의 관련 정보(위치, 규모, 시설 특성)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변경사항의 적시 업데이트 등 노력
-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단 및 평가단 운영을 위한 조사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
- 지진방재 R&D 공모형 사업 공동추진에서는 시·도 R&D 사업의 중복을 막고, 부울경 통합적 차원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재 R&D사업은 시·도에서 기존과 같이 진행하되, 신규사업은 특별연합 중심으로 기획·조정
 - 특별연합 주도로 권역별 통합 공모형 국가산업 등 대형 국가과제 참여 노력

(4) 소요예산

- 발굴사업의 예산은 산정되지 않았으나, 지진방재 R&D 및 공모형 사업 공동추진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정상비 성격이 강한 만큼, 3개 시·도 개별 추진 대비 예산절감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재고

효과가 기대

- 지진방재 R&D 및 공모형 사업 공동추진이 지역 지진방재 R&D의 중추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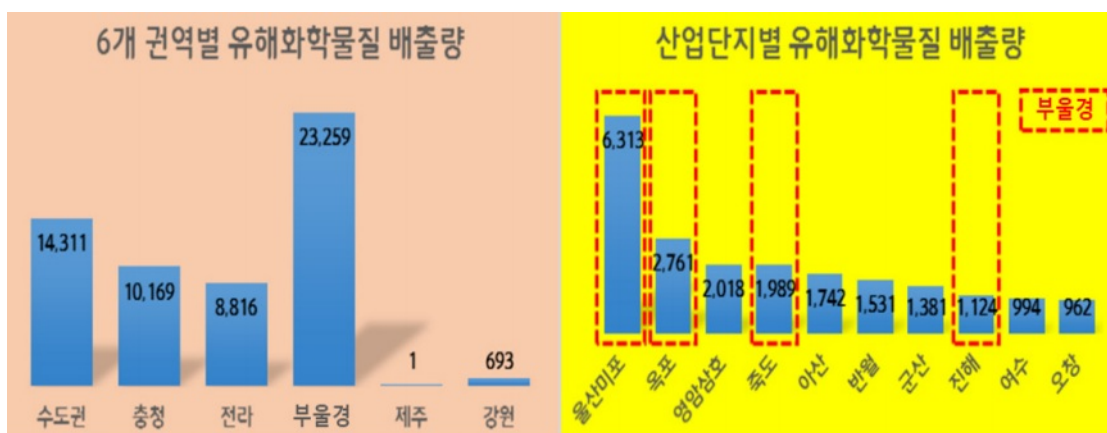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역별 임시주거시설의 현황 및 변경사항 관련 정보 수집 및 특별연합 제공
- 임시주거시설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숙박시설 제공
- 임시주거시설 이용 이재민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업무
- 기존 진행 시·도 지진방재R&D의 경우, 지역별로 분배된 중점 연구 분야에 따라 R&D 관리 진행

18. 사무 ⑰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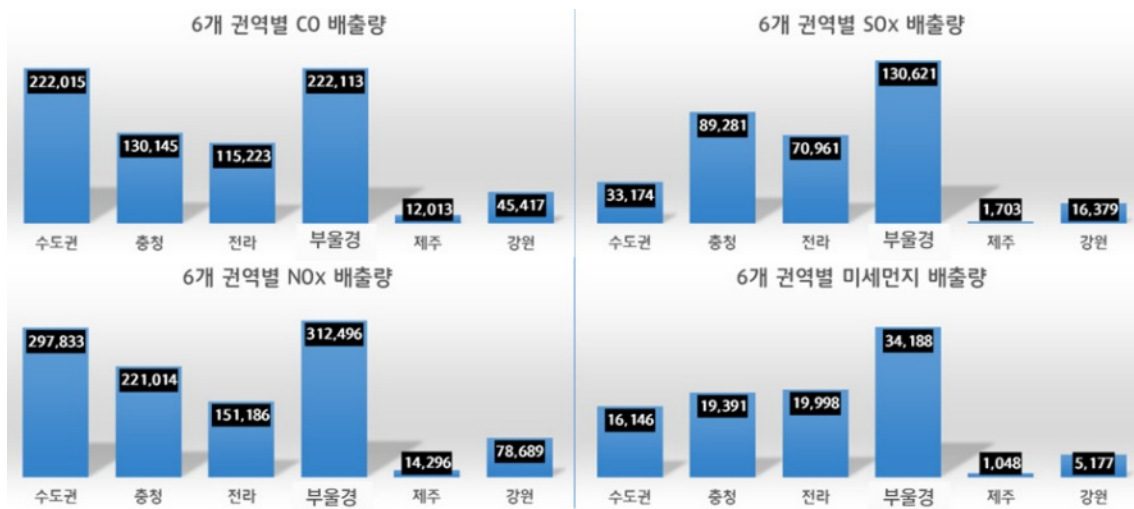
1) 사무 필요성

- 부울경권은 동일한 원인으로 초래되는 대기환경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철강,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의 업종으로 특화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부울경권의 유해화학물질, 발암성물질, 비발암성물질의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김태영 외, 2021b: 226)
 - 미세먼지, CO, SOX(황산화물) 및 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전국 최고
 -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화학성분은 인체 위험성이 높는데, 세계적 수준의 항만 인프라가 입지한 결과, 선박 기인 중금속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실정(신해정, 2020)



자료: 허종배(2019) / 단위: 톤

〈그림 6-30〉 권역 및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2015년 배출량, 허종배(2019) 재인용
단위: 톤

〈그림 6-31〉 주요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 오염의 원인과 특질이 고도의 일체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3개 시·도 개별적인 대응보다 부울경 차원의 초광역 협력이 바람직
 - 효과성 높은 통합적, 체계적 대기환경 관리체계의 모색이 필요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 시행계획 수립, 대기질 관련 연구의 원활한 수행

(2) 방향

- 성과 체감 가능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무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안정적 지지 기반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단계로 사무의 범위, 권한 수준이 제한적
 -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 본격적인 초광역협력의 추진 기반이 마련되고, 물관리 등 다른 세부 영역으로 사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구성 세부사무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임

-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의 세부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특별연합의 장은 시·도지사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대기환경관리 세부계획을 수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는 대기오염 경보를 위한 연구 조사 사무에 관한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정보 발령 등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정보)

-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발굴사업

-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발굴 사업
 -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부울경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
 -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① 부울경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 1차 수립 후 추후 확대

○ 사업비: 2억 원

○ 사업내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의거, 부울경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 용역 주요 과업
 - 대기관리권역 내 오염원의 차계적 관리 및 감축방안
 -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

②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 사업유형: 향후지속

○ 사업기간: 2023년~(매년)

○ 사업비: 4억 원

○ 사업내용

- 지역의 대기질과 기상을 반영한 부울경권의 대기질 진단·관리 모델링 개발
- 모델링 개발을 통한 정확한 오염물질 발생농도 예측
- 연구조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구성은 2023년 완료
- 대기모델링 개발·보완은 23~24년 진행하여 이후 시점부터 대기모델링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기질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추진 주요 사항

- 부울경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서 연구역량 높은 전문기관에 보조사업, 연구용역 등 적절한 사업유형으로 계획(안) 수립을 의뢰
 -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구조에서 객관성, 전문성을 보장
-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활용 등 적절한 추진 체계를 모색해 진행
 - 특별연합에 대기환경조사단을 설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을 파견받아 배치, 운영할 경우, 특별연합 주도적 사업 진행이 가능하면서도, 신규 조직 구성에 따른 경험 부족, 시행착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

- 장기적으로 특별연합 주도의 부울경 대기환경관리가 실현될 필요가 있으므로, 초광역적 대기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사무위임·이양,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관 방안 등을 모색하는 ‘부울경 초광역 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방안’(가칭)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기환경관리 관련 사무이양 포함
 - 기존에 대기환경 전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요구가 있었으나(허중배, 2019), 지역차원에서 지자체 권한 확대가 아니라 축소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증설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 관련 사업도 현재 발굴 사업은 연구조사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연합이 예경보제 발령·해제 및 발령에 따른 조치에 관여할 수 있는 사무이관 방안을 검토

(4) 소요예산

- 발굴사업 기준으로 총소요예산은 6억 원
 - 부울경 대기환경 관리시행계획 2억 원,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4억 원으로 모두 특별연합 자체재원 활용

〈표 6-30〉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4	2				6		6
	국가								
	특별연합	4	2				6		6
	시·도								
	기타								
① 부울경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소계	2					2		2
	국가								
	특별연합	2					2		2
	시·도								
	기타								
②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소계	2	2				4		4
	국가								
	특별연합	2	2				4		4
	시·도								
	기타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부울경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연계한 대기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
- 대기오염물질 예·경보 관련 연구 협력

19. 사무 ⑱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

1) 사무 필요성

- 부울경 지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복합운송 연계 부족으로 국가물류경쟁력은 제한
 - 부산항 6위, 인천국제공항 3위(화물) 등 인프라의 양적 우위에도 국가물류경쟁력(LPI)은 25위(World Bank, 2019)로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단순 운송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물류 인프라의 고도화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부울경 지역에 소재한 전국 최대 규모 항만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1,000TEU당 당기 순이익은 2,754억 원으로 주요 해외사의 3.0%(뉴욕 뉴저지 항만공사 대비)~21.6%(PSA 대비)에 불과한 실정(2019년 기준, 박병주 외, 2021: 204)
 - 항만관리 및 유지 중심의 재정수익 구조, 사업범위 경영역량의 한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제약이 핵심 원인(박병주 외, 2021: 204)
 - 권역내 항공화물 처리 규모는 국내 34,014톤(9.4%), 국제 16,387톤(0.5%)으로 항만물류와의 격차가 커, 인프라간 원활한 연계에 제약 요인으로 작동
- 트라이포트 구축(가덕도 신공항, 신항 등 항만, 철도 연계 등) 등 인프라 활용 역량을 극대화해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도하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초광역 물류 플랫폼 구축 노력이 필요
- 광역교통망 구축 노력은 부울경 지역내의 연계 심화를 통한 공간적 압축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은 부울경 지역과 타 국내지역, 세계와의 연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에 초점
 - 부울경 네트워크 고도화의 양대 축에 해당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음

2) 목표 및 방향

(1) 목표

-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혁신을 위한 초광역물류 플랫폼 구축 계획 구상 및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 물류혁신과 연계한 산업, 공간 혁신이 될 수 있는 타당성 높은 계획 및 추진 기반 마련 필요

(2) 방향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물류 분야 사무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중요성 인식 속에서 타당성, 현실적합성 높은 초광역물류플랫폼 추진계획 수립 노력
- 타당성 물류플랫폼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체감효과 높은 사업의 우선적 추진 및 자원 확보, 권한

이양, 추진체계 재편 진행

- 초기 단계로서 특별연합이 스스로 초광역 물류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재정적 여건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략산업과 거점 물류망간 통합적 연계 등 경제생활권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별연합 주도의 물류플랫폼 조성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에 초점

3) 구성사무 및 추진방법

(1) 구성사무

- 초광역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구성 세부사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1개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 초광역 물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임
 - 특별연합의 장은 광역시장에 대응되는 지위에서 10년 단위의 부울경권 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동조 제1항),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동조 제2항)
- 초광역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해 처리해야 할 사무가 완전히 이관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구성사무 이관, 세부사업 추진 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행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개발, 재정비, 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 범위의 국가위임사무로 총34개의 세부사무로 살펴볼 수 있음(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별표 2>)

〈표 6-31〉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국가위임 세부사무

처리 세부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제22조 제1항 제2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무	제22조 제2항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실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무	제22조의7 제1항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무	제22조의7 제2항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 규정에 관한 사무	제22조의7 제4항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변경 시 고시 및 관계서류 송부에 관한 사무	제23조 제1항
일반물류단지 지정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	제24조 제1항
일반물류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무	제26조 제2항
일반물류단지 지정 해제 통보·고시에 관한 사무	제26조 제3항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제27조 제1항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다른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제27조 제4항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제28조 제1항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제28조 제3항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고시 및 관계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	제29조 제1항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	제36조 제3항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	제37조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 공원 및 녹지 보존 명령에 관한 사무	제44조 제1항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 접수에 관한 사무	제46조 제1항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에 관한 사무	제46조 제2항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고, 관리청 통지,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제46조 제3항
일반물류단지사설 등의 건설공사 미착수 및 토지·시설 미처분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50조의3 제1항
의무 이행시까지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50조의3 제4항
의무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사무	제50조의3 제5항

처리 세부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
일반물류단지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제52조의2 제1항
일반물류단지재정비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고시에 관한 사무	제52조의2 제3항
일반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제52조의2 제5항
일반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시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	제52조의2 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반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실시 요청 접수에 관한 사무	제52조의2 제7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법인의 일반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실시 요청 접수에 관한 사무	제52조의2 제8항
일반물류단지 관련 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처분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제52조의3 제1항
처분 사실 고시에 관한 사무	제52조의3 제2항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관리에 관한 사무	제53조 제1항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물류단지관리계획 접수에 관한 사무	제55조 제1항
일반물류단지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법 등의 조치 권고에 관한 사무	제57조

출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별표 2>

(2) 발굴 사업

○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의 발굴 사업

-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추진

① 초광역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 사업유형: 기간내완료

○ 사업기간: 2023년, 이후 지속(5년 단위)

○ 사업비: 10억 원

○ 사업내용

-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에 따라 부울경 지역의 물류기본계획을 수립(5년 단위)
 -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물류정책기본법』제16조)
- 용역 주요 과업
 - 광역 물류 여건 분석 및 전망, 광역 물류 현황조사
 - 물류 관련 법률, (상위)계획, 정책 검토

- 부울경 지역 간 연계 물류체계 및 물류 간선망 구축·개선
- 광역 물류 체계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부문별 추진방안 검토: 트라이포트 연계 거점 공간 확충,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개발,
-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배후 물류·산업단지 확충

② 초광역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 사업유형: 미정
- 사업기간: 2024년~
- 사업비: 미정(물류 기본계획에 기초)
- 사업내용
 - 기본계획을 토대로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기존 논의, 검토를 했을 때, 물류 플랫폼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로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스마트 복합 물류 인프라 조성, 글로벌 첨단 물류 기업 유치를 들 수 있음
 -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와 연계한 복합물류 기반 구축 및 배후권역 개발
 - 스마트 복합물류 인프라 조성: 트라이포트 인프라 조성 및 스마트 복합 물류도시²⁶⁾ 건설
 - 글로벌 첨단 물류기업 유치: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 유치, 세제 혜택 및 금융규제 완화,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전문인력 확보 노력 등

(3) 추진 주요 사항

-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사무, 사업은 미확정인 상태
 - 국가위임사무인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위임범위가 포괄적 이기는 하나 물류플랫폼은 물류단지에 관한 사항 외의 다양한 공간, 산업계획을 포괄하는 개념
- 부울경 차원의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기초 하여 구성사업 이관, 사업발굴을 추진할 필요
 - 각종 물류 인프라, 배후권역 개발, 기업유치에 필요한 각종 사무, 사업의 범위는 넓고, 심층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기본계획(안)의 외부위탁, 용역 수행에서 전문기관이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보장 중요
 -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을 부울경 협력,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항개발 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국가철도망계획, 고속국도·국도 건설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국가 계획 반영 추진

26) 트라이포트 연계 거점 공간 확충,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개발,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배후 물류·산업단지 확충

- 물류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 중요
 - 현 시점에 확보된 지역적 상황에 한정되어 계획을 구상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공간활용 구상이 중요
 - 이를테면 배후권역 개발에서도 현 시점에서의 접근 편의성, 기업수요 이외에도 향후 광역도로 망, 철도망 구축, 부울경 신산업 육성의 공간적 배치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항만 직접인접지역 외의 타 지역도 검토가 가능한데,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연계수준이 충분해 질수 있다면,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에 배후권역을 조성해도 충분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
- 기본계획에 따른 구성사업 이관, 사업발굴을 진행할 때에는 특별연합 주도로 부울경 초광역 물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에 초점
 - 산업구조, 도시공간의 대규모 재편까지 수반되는 장기 과제로서 계획기간 내에 물류플랫폼 구축 전반에 걸쳐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음
 - 계획기간중에는 특별연합 주도의 추진기반 안정화, 성과 체감도 높은 초기단계 대표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신뢰 확보에 초점
 - 장기 과제로서 체계적인 추진 로드맵 구성이 중요하며,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큰 사업부터 우선 추진
- 과제 추진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사무의 위임, 이양 노력도 동반 추진할 필요
 - 현재 공항·항만 등 핵심 물류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권한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 시·도의 사무는 제한적인 상태
 - 현 지방자치법상의 위임 외에 법률개정 등을 통한 이양 노력에도 관심
- 특별연합 주도 추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사무 위임, 이양에서 특별연합, 시·도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도 존중
 - 물류 인프라 소재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해당 인프라 운영에 대한 참여, 권한 확대를 원하는 경우가 확인
 -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특별연합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을 제약하지 않는다면, 다원적 거버넌스의 실현 측면에서도 긍정적 수용 가능
- 권한 및 예산 확보를 포함,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추진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물류플랫폼 입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 추진 과정에서 3개 시·도 권한이관 필요에 대응하고, 시·도 산업, 공간계획의 연계가 요구되는 만큼 적극적 협력이 중요

(4) 소요예산

- 발굴사업 기준으로 총소요예산은 10억 원
 - 초광역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은 부울경 초광역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하나, 전액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충당

-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미정이나 트라이포트 연계 복합물류 기반 구축 및 배후권역 개발, 첨단 물류기업 유치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수립 가능
- 계획기간 중 정책우선 순위 높은 핵심사업 위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산은 상당 규모 예상
 - 인프라 조성 사업 비중이 크므로 안정적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공조가 중요

〈표 6-32〉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의 소요예산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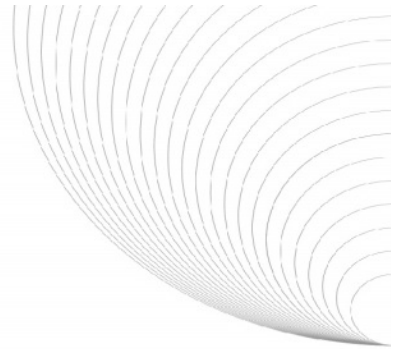
사업	항목	2023	2024	2025	2026	2027	기간계	이후	전체
전체	소계	10	10	.	10
	국가	10	10	.	10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①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소계	10	10	.	10
	국가	10	10	.	10
	특별연합
	시·도
	기타
②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추진	미정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의 관련 정보, 자료 제공 등 각종 지원
-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협의 과정 참여
- 초광역 물류 플랫폼 추진과 연계하여 관련 사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관할 지역별 물류산업 분야 계획 수립 및 각종 정책, 사업 추진

제 7 장

성공적인 초광역 협력을 위한 과제



1. 과제 개요

- 특별연합 규약 제8조 제2항 4호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
- 규약 사무에 기초한 18개 초광역 협력사무 외에 특별연합 중심의 거버넌스 성과 제고와 메가시티 전략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5개 과제를 추가 제안
 - 과제 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제2수도권 실현
 - 과제 ② 열린 초광역 거버넌스 실현
 - 과제 ③ 특별연합 성과 제고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
 - 과제 ④ 글로벌 메가시티와 네트워크 강화
 - 과제 ⑤ 초광역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 5개 과제의 검토에서는 과제별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과제의 실현을 위해 검토가능한 사업 혹은 세부적 수준의 추진방안을 모색

2.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

1) 재정운용 방향

- 특별연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사무를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용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 특별연합은 관할구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울경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특별연합의 재정운용은 초광역협력 사무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특별연합 사무처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함

2) 바람직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

① 기본계획의 존중

- 기본계획의 재재 내용은 계획의 목표가 달성되고, 주요 추진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제203조에 따라 특별연합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예산에서 기본계획의 사무별 사업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이 배정되어야 함
 -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상당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서도 곤란

② 성과중심 재정운용

- 성과중심 재정운용 풍토를 정착시켜 성과계획서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바람직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성과목표와 지표는 추진과제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보고 결과를 토대로 추진과제의 규모 조정,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이 활용중인 기본계획의 수정, 차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정기적으로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초광역협력의 취지에 맞는 성과지향적인 전략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함

③ 중장기적, 전략적 관점의 재정운용

- 특별연합은 기본계획과 연계해 중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할 필요
 - 특별연합의 주요 추진과제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넓은 구역에 걸쳐 중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고,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운용하고, 특별연합의 세입, 세출 및 재정역량에 관한 장기재정전망 등 방안의 추진을 검토

④ 세입의 다원화

- 특별연합의 사무, 사업과 관련된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특별연합의 주재원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분담금
 - 특별연합 소관사무의 대부분이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무인만큼, 사무처리에 소요되

는 재원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담금 의존이 지나치면, 특별연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음

- 초광역협력 과제의 추진에서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
 -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등 민간부문의 과제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다원화,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타당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
- 한편, 양해각서 수준을 넘어서 영국의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예와 같이 특별연합과 국가간 구속력 있는 지원협약을 맺어 특별연합이 특정 성과의 달성을 약속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포괄적 재정지원과 권한위임을 받는 방안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

3. 과제 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제2수도권 실현

1) 필요성 및 방향

- 부울경 지역은 수도권을 견제가능한 실질적으로 유일한 광역권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양대축 역할이 요구
- 제2수도권의 정체성에 기초해 제도적으로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국가지원 확보 방안 모색
 -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일극 체계, 국가 중심적 행정 환경에서 부울경 지역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충분하고 안정적인 국가지원의 확보가 필요
- 바람직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나눠먹기’식 균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 부울경 지역에 대한 특별한 수준의 지원은 단순히 한정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시키기 위한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
 -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한 제2수도권으로서 부울경의 위상을 확보해야 성공적인 초광역 발전에 필요한 각종 행·재정상의 특례, 우선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음

2) 검토사업/세부방안

- ① 제2수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국가지원 확보
 - 부울경 지역을 대상으로 초광역발전을 위한 자치, 재정상의 특례, 주요 대형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가칭 “부울경 초광역발전 특별법”) 제정 건의 검토
 - 부울경 초광역발전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지원은 국토균형의 양대 축으로서 부울경 지역의 전략적 특수성에 대한 존중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간적 영역을 한정하는 특별법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추진 및 국가 지원 확보에 유리
 - 특별연합은 부울경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할 필요

- 부울경의 요구를 충분히 담으면서도 설득력 높고, 제도적으로 정교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재정지원, 국가로부터의 권한위임, 이양 등 주요 국가지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수행 검토
- 이를테면 지난 2021년 10월 발표된 초광역협력지원전략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초광역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설정, 관리하겠다고 발표
- 이는 지역에서 요구한 보통교부세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조원 규모의 별도 계정(초광역협력계정) 신설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초광역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 규모 확보가 불확실
- 지역안은 부울경의 절박한 지원 필요성을 담았으나, 설득력 확보 측면에서 논란
- 보통교부세 지원 요구는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지역의 관련 분야 학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박충훈, 2021c: 140)
 - 초광역협력계정 신설은 대규모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별개로 지방세강화를 목표로 균특재원을 3.5조원 삭감한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취지와 배치되고, 균특회계 자체의 제도적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균특제도 확대에 대한 확고한 지지 확보가 쉽지 않았음²⁷⁾
- 지역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설득력 있으며 제도적으로 정교한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은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를 필요로 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므로 다룰 필요성이 낮음
 - 초광역협력계정 신설에 집중하되, 특별연합에 대한 지원은 지방세강화가 추구하는 분권의 가치와 별개로 균형발전의 전략적 추진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
 - 균특회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포괄보조금 역할 회복방안을 제안
- ② 부울경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대응
- 중앙정부 관할 공공기관의 이전추진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부울경 공동 대응이 필요
- 부울경 소재 공공기관은 전체의 12.7%로 부울경의 규모를 감안하면 타 지역 대비 많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서 부울경 지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부울경의 입지 우위

27) 보조금 교부 기준 내역의 불투명, 중복 지원 등 비효율, 높은 수준의 변동폭, 분배원칙의 비밀관성, 낙후지역 역차별 등 문제(정창수 외, 2016). 객관성과 투명성이 매우 미흡한데, 기획재정부는 지역간 예산편중과 지역갈등을 이유로 산정기준과 결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조기현, 2012: 86)

를 설득하는 전략 모색 필요

-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모색에서도 부울경 초광역협력 과제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수준을 충분히 검토해 전략적 필요성 높은 기관의 유치를 위해 노력
 - 특별연합은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R&D역량은 기대에 미흡한 실정
 - 그렇다면 전략적 필요성이 높은 기관은 부울경의 R&D 역량 제고에 기여할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 김태영 외(2021: 43)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거점 기능 수행을 위한 국가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원 등 과학기술분야 핵심 연구기관의 부울경 이전을 주문
- 초광역사업 수행 관점에서 이전 공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진행해, 초광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융합을 촉진

4. 과제 ② 열린 초광역 거버넌스 실현

1) 필요성 및 방향

-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 메가시티 혹은 부울경 초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 중의 하나로서 배타적인 책임을 지는 기구가 아님
- 초광역협력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나, 구성 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3개 시·도, 관할지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사회단체, 주민 등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도 중요
 - 특히 주민과 관련해 비록 특별연합은 주민이 아니라 부울경 3개 시·도로 구성되는 기구이기는 하나, 궁극적인 권력의 원천은 3개 시·도를 구성하는 주민에게 있고, 특별연합 사무처리의 정당성은 부울경 주민의 신임 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것임
- 부울경 내 공공, 민간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초광역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무처리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초광역 협력사무의 수행에 관한 정보,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 제공되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

2) 검토사업/세부방안

- ① 관할구역 시·군·구의 능동적 참여 보장
- 부울경 지역의 기초지방자치체인 시·군·구로 구성되며, 초광역협력 사무의 수행에 관한 각종

동향,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에 관한 협의 및 자문 기구인 부울경 메가시티 시·군·구 협의회를 구성, 운영

- 특별연합에 협력지방자치단체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사무·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관할구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회 보장 노력
 - 장기적으로 간사이광역연합의 예를 참조하여, 초광역 거버넌스에서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지역적 영향력이 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특정 사무 범위에서 특별연합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합 의회의석, 재원분담 의무 일부를 부여
 - 관할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연합 파견근무 기회 부여
- ② 부울경 메가시티 주민참여단 운영
- 부울경 메가시티 주민참여단을 운영, 초광역협력사무 추진의 정보공유, 의견수렴 기구로 활용
 - 특별연합의 역할,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
 - 주민참여단에 청년,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 마련
- ③ 부울경 민관협치협의회 운영
- 부울경 민관협치협의회를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운영, 부울경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과의 초광역 협력사무 수행의 협치 기반 마련
 - 주요 정책에 관해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④ 부울경 갈등조정관 제도 운영
- 부울경 내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관련 사회적 갈등상황 점검, 조사, 갈등조정 역할을 전담하는 갈등조정관 직위를 도입, 운영하며, 조정관 업무를 지원할 조직 및 인력 기반 마련 검토
 - 3개 시·도에 걸친 수행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초래 시 갈등의 강도가 크고, 구조도 복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음
- ⑤ 주민참여형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 주민이 직접 특별연합의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여론조사(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사업화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발굴제도 운영
 -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 사업 영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 특별연합 사무 및 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

5. 과제 ③ 특별연합 성과 제고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

1) 필요성 및 방향

- 특별연합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초광역 협력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연합 자체의 행정역량이 중요
 - 특별연합은 자신의 미션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사무 권한과 인사, 조직 등 각종 자원 등을 확보,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역량을 갖추 수 있어야 함
- 계획기간 중에는 특별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고,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행정 역량 강화가 불필요한 조직 비대화 시도로 오해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효율화 노력에도 적극적 관심

2) 검토사업/세부방안

① 사무위임/이양 등 권한 강화

- 초광역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무이관, 중앙정부로부터의 사무위임, 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설치초기단계로서 초광역협력의 취지를 실현할 만큼 사무의 범위와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특별연합 처리가 바람직한 국가, 지방 사무를 파악하기 위한 “초광역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발굴 방안”(가칭) 연구 진행
 - 연구결과에 기초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확대 추진
- 특별연합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이양받는 데에 구조적 장점이 있는만큼, 이를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타 시·도, 광역권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 감축 계획을 수립,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 특별연합이라는 초광역협력체를 선제적으로 출범시킨 부울경 지역만이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 부울경 외 지역의 사무도 처리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 소재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축소, 폐지 및 그에 따른 사무이양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
 - 지방청 이상 수준에서 부울경 외 지역까지 관할하는 기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 기관으로 주로 인접한 대구, 경북이나 규모가 작은 제주 지역을 함께 포괄
- 이들 기관의 사무를 특별연합에 이양할 경우, 이양되지 않은 부울경 외 지역 관련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관할영역 축소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 문제, 타 지방청으로의 이관 검토 등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 등 발생

○ 우선적으로 검토가능한 안은 각자 이익받기 위해 관련되어 있는 부울경 외 지역 시·도와 공동대응하는 것임

○ 특별연합이 부울경 외 지역 사무까지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 부울경 외 지역의 시·도가 이양사무를 특별연합에 위탁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방안 검토: 중요 의사결정에서 위탁 시·도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용부담에서 편의를 제공

② 자율성 및 책임성에 기반을 둔 세입기반 확보

○ 특별연합의 사무, 사업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해 수행되는 만큼, 대규모 투자재원을 요구

- 초광역협력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보조금의 안정적 교부가 필요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포괄보조금 형태(예:초광역협력계정)가 바람직
- 그러나 보조금은 이전재원이라는 근본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특별연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될 수 있는 세입기반 확보가 중요

○ 특별연합이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과세권을 보유하는 방안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세제와 같은 민감한 영역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과세를 감안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축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과세는 증세 논란을 유발

○ 현 법률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세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외견상 분담금 형식을 띠되, 실질적으로 특정 구성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세목의 지방세입을 ‘공동세’화해 세입화하는 방안 모색

- 이를테면 안정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3개 시·도 지방소비세입의 일정 비율을 특별연합의 세입으로 공유하되, 분담금의 형태로 세입처리를 하면 현 법률체계 내에서도 가능
- 형식적으로는 분담금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체세입과 같은 역할이 가능해 세입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실현에 유리
- 부가가치세(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가 추가인상여력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
 - 우리나라는 10%로 OECD 평균 19.2%(2016년 기준, OECD, 2018)의 절반 수준(박충훈·이정석, 2019: 88)

○ 분담금 설정은 규약에 규정되어야 하는 만큼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에 대한 3개 시·도의 합의에 기초해 추진

③ 자체직원 중심 인사행정체계 확립

- 특별연합 설치 초기단계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 비중이 큰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체직원 중심의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할 필요
- 특별연합 인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파견 직원과 자체 직원으로 구성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무를 공동 수행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파견직원 활용은 자연스러우나, 한계도 적지 않음
 -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 복귀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 파견받은 기관 입장에서 한시 활용 인력이므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쉽지 않음
- 자체 채용은 파견직원의 문제점 대응에는 긍정적이나, 적극 활용이 쉽지 않음
 - 특별연합의 사무 수행 인원 다수를 외부로부터 신규임용한다면, 인력과잉 논란에 빠질 가능성
- 특별연합 인력 운용을 자체직원 중심으로 하되, 이를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원하는 방안 모색
 - 구성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특별연합에 전입시킬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 출신 인력을 자체직원으로 활용 가능
 - 외부 신규 채용은 민간 전문역량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

④ 초광역협력 전문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 특별연합 직원을 위한 특별연합의 행정체계, 수행 사무에 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는 도입 초기단계로서 생소하고, 3개 시·도에 걸친 초광역사무의 수행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습득한 기존의 지식과 관점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음
 - 특별연합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무기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운영은 3개 시·도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학 등 전문 기관에 위탁

⑤ 스마트 워크 등 행정효율화 노력

- 3개 시·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협력기구로 특별연합을 운영하는 것인만큼, 설치 초기 단계에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규모를 둘러싼 비효율 논란이 발생해서는 곤란
- 첨단 IT기술을 활용하고 전통적 관행에서 탈피한 유연성을 발휘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효율화 노력 필요
- 사무공간의 확보에서는 스마트 워크²⁸⁾ 개념을 적극 활용해, 규모를 적정 수준에 통제
 - 청사확보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초광역협력 사무의 특성상 지역내 이동이 잦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28) 재택근무 활성화, 필수업무 공간을 제외하고 주요 지역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설치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서도 별도 청사 마련을 위한 과다 비용 지출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행정의 효율화 기조에 불합치하며 지역주민의 비판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바 있음(김태영 외, 2021b: 49)
- 사무소 소재지에 지역간 갈등을 불필요한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무게감이 부과되는 문제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2011), LG CNS blog에서 재인용, <https://blog.lgcns.com/423>

〈그림 7-1〉 스마트워크 유형

⑥ 초광역협력의 상징성을 가진 자체 공공기관 설치·운영

- 초광역행정의 안정적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능은 자체 공공기관의 설치·운영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
 - 3개 시·도 기존 체계를 활용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책임성 및 자율성 확보가 제한
 - 거버넌스 관점에서 민간부문을 통한 수행에 적극 노력할 필요는 있으나, 공공성,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까지 민간에 의존하기는 쉽지 않음
- “초광역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발굴 방안”(가칭)과 연계해 자체 공공기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진단하고, 자체 공공기관 설치·운영 설치 로드맵을 수립, 운용
 - 특별연합 설치 초기단계만큼 계획기간중에 특별연합의 출자금,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자체공공기관의 설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미리 준비할 필요
- 특별연합 산하 자체 공공기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메가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추진(김태영 외, 2021b: 53)
 - 지방공공기관 비대화 비판 감안, 기존 시·도 공공기관의 선례답습적 설치 지양

- 기존 시도 공공기관 활용이 곤란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
- 장기적으로 지역내 대규모 인프라 설치, 인프라 운영 관련 권한 지방이양과 연계해 초광역협력의 상징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공공기관 설치방안 모색
 - 예) 부울경항만공항공사(김태영 외, 2021b: 54)
 - 가덕도신공항, 신항, 북항, 울산항 등 대형 교통물류인프라의 통합적 운영 수행(국가로부터 운영일체 이양)
 - 장기적으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²⁹⁾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종합교통물류 공기업으로 육성

6. 과제 ④ 글로벌 메가시티와 네트워크 강화

1) 필요성 및 방향

- 특별연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초광역협력기구도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 개선,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
- 글로벌 메가시티로서 세계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역할하는 광역협력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실질적인 도시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 네트워크를 통해 초광역협력 경험을 공유해 행정역량 제고에 활용

2) 검토사업/세부방안

- ① 해외 초광역협력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 간사이 광역연합,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맨체스터 연합기구 등 해외 초광역협력기구와 교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 예) 부울경-간사이 포럼 개최, 직원교환근무 프로그램 운영 등
- ② 해외 초광역협력사례 연구조사 플랫폼 구축
 - 해외 지자체간 협력사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조사를 관리, 지원하는 연구조사 플랫폼을 구성, 특별연합이 지자체간 초광역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노력
 - 해외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토대로 특별연합은 운영기반을 조기 안정화하고 해외 협력기구와의 네트워크를 선도하여 글로벌 메가시티와의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확보 기대

29) 뉴욕-뉴저지 항만공사(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 자산 56.8조 원, 매출 6.4조원(2019년 기준)의 선두권 글로벌 기업으로 항만 외에 공항(JFK국제공항 등), 광역철도, 세계무역센터 등 운영

- 그간 해외사례 연구는 주요국 유명 사례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컸으며, 각국의 지방자치 환경, 지역적 특수성 등, 정책/사업 수준의 활용사례 분석 등 구체적 수준의 연구조사는 크게 미흡한 상태
- 특별연합의 연구수요에 대응해 3개 시·도 연구원 등 지역연구기관, 지역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 제공, 연구자, 연구기관간 협력 등을 지원하는 연구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 예) 출연금 교부를 통한 현안연구 쿼터 확보,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7. 과제 ⑤ 초광역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1) 필요성 및 방향

- 환경파괴, 사회양극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경적,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연합(UN)은 2015년 9월 전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사회·환경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
- 우리나라도 이에 기초해 국가차원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수립
 -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SDGs 목표를 수립후 활용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ksdgs?content=4>

〈그림 7-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 특별연합도 부울경 차원의 SDGs목표를 수립하고, 초광역사무의 수행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특별연합의 초광역사무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 경제·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행되므로, SDGs와 같은 종합적 목표 활용의 기여가 큼
- 메가시티 추진이 대규모 교통 인프라에 치중하는 등 양적성장에 매몰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우려가 있는데, 특별연합 차원의 SDGs 추진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
- 탄소중립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의 기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환경적 가치, 동서격차 완화는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둔 사회적 가치에 부합
- 초광역 협력사무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관련 SDGs 목표는 아래와 같이 제시 가능

〈표 7-1〉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무와 SDGs 관련목표

연번	사무	관련 목표	비고
1	초광역 철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울경내 지역격차 완화
2	초광역 도로망 구축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4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혁신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고도화
5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7	초광역 자동차 산업 육성		
8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9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혁신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10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11	초광역 공동 투자유치 체계 구축		
12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속성 위한 교육혁신 • 지속적 혁신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13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혁신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 광역벨트화를 통한 격차완화
14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먹거리 생산·소비 • 도농간 격차완화
15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삶의 보장
16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17	초광역 대기환경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삶의 보장
18	초광역 물류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 인프라구축을 통한 부울경내 지역격차 완화

2) 검토사업/세부방안

- ① 부울경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수립
 - 부울경 초광역 수준의 지역적 특성에 합당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를 수립
 - 지속가능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민관공동기구의 구성 및 운영이 선행 바람직
- ② 부울경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운영
 - 초광역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위한 이행계획(5년)단위 수립 및 사무처리의 활용
 - 기본 방향, 비전 설정, 이행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수립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9).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0).
- 금창호. (2018).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창호, 권오철, 박재희, 전대욱, 최인수, 최지민. (2021).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종욱, 주수현, 배수현, 정혜진. (2021).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복합 리스크 극복방안. 부산: 부산연구원.
- 김태영, 정현욱, 이정석, 박충훈 외. (2021a).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전략계획. 창원: 경남연구원.
- 김태영, 정현욱, 이정석, 박충훈 외. (2021b).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부문별계획. 창원: 경남연구원.
- 문상덕. (2019).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정부의 특별 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9(3): 171~198.
- 박명흠. (2020). 국외 광역행정 추진 사례 분석, 내부자료.
- 박병주, 장하용, 허운수, 박충훈 외. (2021).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 부산: 부산광역시&창원: 경상남도.
- 박충훈. (2021a). 메가시티의 추진수단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적극적 협력을 위한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충훈. (2021b).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이슈.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충훈. (2021c).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최선의 노력 필요. 부산발전포럼, 192, 136~141.
- 박충훈, 이정석. (2019).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영향과 부산시 대응방안. 부산: 부산연구원.
- 박충훈, 구윤모, 정희정, 한주연. (2020). 부산시 재정사업 재구조화 성과개선 방안. 부산: 부산연구원.
- 박충훈, 남호석, 주선옥. (2022). 부산시 자치구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부산: 부산연구원.
- 배준구. (2019). [정책사례] 프랑스의 최근 지방분권 동향. 월간 공공정책, 168, 64~66.
- 배준구. (2021).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집.
- 송교욱, 김기욱, 최지은, 염재원, 오상훈, 강기철. (2018).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기본 구상.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안영훈. (2021).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권역별 토론회(부산) 자료집.
- 이원규. (2015).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효율적 확대·운영방안 연구.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이장욱, 서정섭. (2020).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장경원. (2021). 행정법의 기본쟁점, 제2판. 서울: 신조사.
- 장태진. (2018). 세계 항공산업 발전 전망. 한국우주산업기술동향, 16(2): 3~12.
- 정준호. (2021). 최근 영국의 분권화 동향: Combined Authority의 사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집.
- 정창수, 이상민, 이승주. (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 : 충남연구원.
- 조기현. (2012).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1): 41~73.
- 한국공법학회. (200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 법제처.
- 허종배. (2019).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 BDI 정책포커스, 제367호.
- GMCA. (2021). ANNUAL GOVERNANCE STATEMENT 2019-20.
- GMCA. (2021). Audited Annual Statement of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1.
- Métropole Nice Côte d'Azur. (2021). BUDGET PRIMITIF 2021 Rapport de présentation.
- 関西広域連合. (2011). 関西広域連合広域計画.
- 関西広域連合. (2014). 関西広域連合広域計画.
- 関西広域連合. (2017). 関西広域連合 第3期広域計画.
- 関西広域連合. (2019). 関西観光・文化振興計画
- 関西広域連合. (2020). 関西広域連合 第4期広域計画.
- ※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사업에 관한 내용은 합동추진단 등 관계기관의 내부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별도로 인용,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음

(인터넷 홈페이지)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www.kosis.kr>
-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 홈페이지 <http://nicecotedazur.org>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academyinfo.go.kr>
- 맨체스터 광역권 연합기구 홈페이지 <https://www.greatermanchester-ca.gov.uk>
-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홈페이지 <https://www.region-stuttgart.org>
- NICE평가정보 <https://www.niceinfo.co.kr>
- Institute for Government 홈페이지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
- 関西広域連合 홈페이지 <https://www.kouiki-kansai.jp>

(법령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헌법』
- 『도로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물류정책기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융합법』
- 『재해구호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역문화진흥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프랑스공화국 헌법

일본국 지방자치법

간사이광역연합 규약